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

조돈문 편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목 차 >

제 1 장 문제제기 :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과 이데올로기적 지도력	1
1. 노동운동과 계급형성의 부침	1
2. 노동운동과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의 훼손	4
3. 노동운동의 전향적 자세	7
4. 신사회운동에 관한 그릇된 이해들	9
5. 본 보고서의 구성	10
6.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관한 개념적 논의	11
제 2 장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와 한국의 신사회운동	17
1. 신사회운동의 정의	17
2. 신사회운동 등장의 설명 : 구미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22
3. 구미의 신사회운동 : 노동운동과의 차별적 특성	31
4.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 구미 신사회운동과의 차별적 특성	41
5. 신사회운동의 비교사회론적 이해	48
6. 한국사회의 성격과 신사회운동	55
제 3 장 노동운동의 신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	69
1. 들어가는 말	69
2. 한국노총의 사회운동과의 연대	71
3. 비노총 계열의 사회운동과의 연대 : 전노협을 중심으로	88

4. 전노대와 민주노총의 연대활동	98
5. 맺음말	100
제 4 장 한국 신사회운동의 특성 및 노동운동과의 연대	109
I.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09
II.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139
III.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64
IV. 한국여성단체연합	202
V. 환경운동연합	245
VI. 배달녹색연합	278
제 5 장 노동운동과 신사회 운동의 연대	313
* 보고서를 마치며	316
* 프로젝트 참여자	318

< 표 목차 >

<표 2-1> 노동운동, 구미의 신사회운동,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비교	60
-------------------------------------------------	----

...

발 간 사

지난 10여년은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노동운동도 변화의 물결을 함께하였다고 하겠으나, 이 기간동안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회운동, 특히 소위 “신사회운동”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신사회운동이란,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노동운동과 더불어 사회변혁의 첨단에 서있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운동은 신사회운동의 발전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신사회운동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노동운동은 신사회운동의 쟁점 영역들에 있어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짚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문제들에만, 노동조합들의 문제들에만 몰두하여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여야 하고, 이제 노동운동도 사회문제 일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스로의 관심의 지평을 넓힐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친숙해져 가는 신사회운동이라는 것에 대하여, 노동운동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운동은 노동 문제 이외의 문제들은 이차적 문제들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관심을 가질 부문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이 관심의 지평을 넓힘에 있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사회운동에 관한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에 관한 본 연구 프로젝트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연구원의 설립으로 뒤늦게나마 심도있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꼭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신사회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과의 대립적 성격을 부정하고 연대의 필요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은 변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맞서 함께함으로써 쌍방의 운동들이 발전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대는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들과의 연결고리들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하여 줍니다.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한 쟁점 영역들과 연대의 방식 및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본 연구 프로젝트에 노동운동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신사회운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고민한 결과로 얻어진 산물입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총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견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노력이 실천적 결실을 맺을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의 사회변혁을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 3월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 원 장 박 인 상

제 1 장

- 문제제기 -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과 이데올로기적 지도력

조 돈 문

1. 노동운동과 계급형성의 부침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발전시켜 한 차원을 넘어서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미조직 상태에 있던 중공업과 대규모 사업장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였고 이들을 노동운동의 핵심에 위치시켰으며, 70년대의 전통적 자주노조운동을 한 차원 뛰어넘는 조직적 자원과 이데올로기적 자원을 지닌 노동운동으로 탄생시켰다.

미조직 대규모 사업장들에서의 노동조합 조직과 그에 뒤이은 중소기업 등에서의 신규 노동조합들의 조직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1986년의 15.5%로부터 1988년에는 22.0%, 1989년에는 23.3%로 급증시켰다.¹⁾ 또한 신규 노조들은 6월 항쟁 이후의 확산되는 민주화 분위기와 확대된 정치적 기회구조에 힘입어 기존의 노동조합들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1)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천은 각년도의 노동통계연감을 참조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치는 주간 「노동자신문」(1995. 8. 29)에 집계된 추정치와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동일하게 포착되고 있다.

지니고 출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와 신규 노조들의 민주성과 자주성 고양의 추세는 기존의 노조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민주화와 자주화를 추구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양 측면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형성²⁾을 진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을 급진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반면, 국가와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동원역량의 과시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국가와 자본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반격을 통하여 노동운동 탄압에 나서게 하는 계기 또한 제공하였던 것이다. 국가는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결합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을 보다 지능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으며, 자본 또한 기술체계와 작업조직에서 유연성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보다 교묘한 노동통제 방법들을 도입하였으며 그 산물이 신경영전략³⁾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국가와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있어 다변화된 전략을 구사하게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세련화되는 훈련의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보다 강화시키는 반작용을 초래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1989년 4월 공안정국의 조성⁴⁾과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인하여, 국가와 자본은 그동안 축적된 노동운동 탄압의 다변화된 전략과 역량을 활용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탄압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은 87년 대투쟁의 성과를 더욱 상승 발전시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침체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계급형성의 진전도 다소 후퇴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⁴⁾

2)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 개념 규정과 적용에 관해서는 조돈문(1994a)를 참조할 것.

3) 자본에 의한 신경영전략의 도입과 신경영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강석재(1995), 강신준(1995), 노민영(1994), 박석운(1994), 신병현·김도근(1993) 참조.

4) 이와 같이 국가와 자본의 물리적 탄압을 포함한 다양한 통제전략 및 노동과정 모델의 변화가 노동운동을 침체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장집(1993), 임영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989년의 23.3%로부터 1994년에는 16.3%로 하락하여 87년 대투쟁 이전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되었다.⁵⁾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노동 부문조차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진영으로 여전히 분열되어 있어,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의 측면에서도 87년 대투쟁의 성과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국가와 자본의 탄압으로 인하여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7년 대투쟁을 계기로 한 투쟁의 성과가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에 있어 급진전을 이룬 다음 크게 후퇴하고 있는 반면,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87년 대투쟁을 계기로 신규로 조직된 사업장이나 민주화를 경험한 기존 노조들도 대투쟁 이후의 국가와 자본의 공세하에서 일부는 와해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상당 부분은 생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동원역량과 내적 결속력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들의 활동가들은 다양한 경험의 축적과 전략적 성숙을 얻을 수 있었다. 국가와 자본의 보다 강화되고 정교화된 탄압하에서도 조직을 보전하는 과정속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단위 노동조합들은 공세에 대항하여 조직을 보전·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의원·소의원 제도 등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자 대중을 연계시키는 “호응성 기제(accountability mechanism)”⁶⁾들을 개발하였고 노동조합의 내부민주주의를

(1992), 김동춘(1995), 노중기(1994) 등을 참조할 것.

5) 이 점에 있어서도 주간 「노동자신문」(1995.8.29)의 수치는 노동통계연감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주간 「노동자신문」의 추정치에 따르면 1986년의 16.8%에 비하여 1994년은 14.5%로 1986년의 수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통계연감의 추정치와 「노동자신문」의 추정치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급격한 하강의 추세를 보여줌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6) 호응성 기제란, 노동조합이 단순히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불만과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결과 추진된 변화에 대하여 노동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경로를 일컫는다. 따라서 호응성 기제란 이익 대변의 수준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단위 노동조합내의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뿐만 아니라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의 내부민주주의 개념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제도화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노동운동과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의 훼손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의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은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진행됐던 노동조합의 결성과 동원의 분출은 전평을 중심으로하여 계급내적으로는 계급형성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급간에서는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⁷⁾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해방공간의 노동운동 활성화에 못지 않은 열기를 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급형성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87년 대투쟁에 뒤이은 국가와 자본의 점차 정교화되고 다변화되는 공세는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의 확보를 저해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겠다. 특히 생산현장에서의 신경영전략의 도입은 노동조합의 현장에 대한 통제력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일체감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체계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경제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하였고, 그결과 일부의 선진 사업장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동자들로서는 전국 수준의 노동운동 지도부와 선진활동가들의 이념적 노선을 따라잡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위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노동자 대

(이하 전평)의 경우 노동조합들과 일반 노동자 대중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던 호응성기제들로서는 당세포와 작업반별 모임 등을 들 수 있다. 호응성 기제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조돈문(1994a)를 참조하고, 전평 하에서 가동된 호응성 기제들의 역학에 관하여는 조돈문(1995d)를 참조할 것.

7) 해방공간에서 남한의 노동계급이 전평을 중심으로하여 계급형성을 달성하고 이데올로기적 지도력, 즉 계급해제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들과 그 과정에 관한 심층적 분석에 관해서는 조돈문(1995d)를 참조할 것.

중과의 이념적 간격을 줄이고 단위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투쟁과 단체협약투쟁을 성공시키는데 많은 활동역량을 투여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범국민적 지지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의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었다.

그러한 노동조합들의 투쟁은 국가와 자본에 더하여 언론까지 가세된 연합 세력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집단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매도되었고, 그결과 노동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동)을 제외한 제반 사회운동들로부터 고립되는 추세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국가와 자본은 어느 다른 사회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정당성에 있어 극도로 취약한 편이다. 국가는, 특히 5공화국과 6공화국의 경우 정권의 창출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군사독재 정권으로서 집권기간 동안 줄곧 정당성의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그에 더하여 권력형 비리와 비자금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 사정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부정부패의 존재는 군사독재정권들 뿐만 아니라, 태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권창출 과정에서 정당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성공한 김영삼 정권의 정당성에도 상당한 손상을 주었다. 한편 자본계급은 자본축적 과정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크게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계급의 헤게모니적 부분⁸⁾인 독점자본, 즉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한국의 경우 미국에 고사하고 범국민적으로 친노동자적 성향을 보이는 스웨덴의 경우보다도 국민들의 적대감을 더 크게 사고 있을 정도이다.⁹⁾

국가와 자본계급이 정당성을 잃고 불신과 적대감의 표상인 반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한국의 노동자들은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10년패를 달성하였을 만큼 기술·기능의 수준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

8) 자본계급내의 헤게모니적 부분이란 자본계급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전체 자본계급의 계급이익을 규정하고 계급이익의 보호·신장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 점에 관하여는 Poulantzas (1973) 를 참조할 것.

9) 자본들에 대한 노동계급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시각에 관한 미국, 스웨덴, 한국의 비교에 관하여는 조돈문(1994b)를 참조할 것.

으며, 고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인 생산성 향상의 최고의 수훈자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줄곧 국가에 의한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제일주의에 의하여 임금상승을 억제당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의 혜택을 입지 못한채 저임금에 묶여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¹⁰⁾

그런데 과연 경제성장의 최고의 수훈자이면서 최고의 희생자인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이 고질적인 정당성 위기에 빠져있는 국가와 자본에 의하여 부단히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느 편에 서있는가? 노동운동의 최고 지도자가 구속될 때,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으며, 과연 몇 명의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분개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상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다소 무감각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운동이고 노동조합의 운동이며, 노동운동 단체들의 운동일 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상대적 고립과 국민적 지지의 부재는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 획득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이 탄압을 받아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분개하기는커녕 무감각하며 국가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정당성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노동운동을 탄압할 수 있었으며, 국가로 하여금 자본축적 조건의 제공과 정당성 확보 사이의 모순¹¹⁾에 빠

10)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적다”(한겨레 1995.7.30)고 하였다. 하지만, 1인당 GNP가 1만불을 넘어서는 현재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서, 일본이 1만불 GNP를 기록하던 1984년의 40.6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일본의 현재의 평균 노동시간과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11)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한편으로는 물적 잉여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생산의 단위인 기업들을 위하여 자본축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할 절박함을 지니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범국민적 이해관계에 충실하여 정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함을 지닌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요구가 자본축적 조건의 여건 조성 과 정당성 확보 사이의 모순을 만들어

지지 않고 자본축적 조건의 제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아가서 자본과 이해 관계를 동일시함으로써 노동운동 탄압에 있어 자본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노동운동의 전향적 자세

노동운동의 발전은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들의 발전에 기초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노동운동의 승리는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들의 승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모든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과 임금 투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노동운동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단위 사업장을 넘어선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의 확립이며, 그것이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활동 공간과 범위는 노동 법규들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실정 법규들을 위반하더라도 그러한 노동운동의 행위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해 있다면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논리와 행위가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자간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며 노동운동의 내적 논리와 내적 정당성에만 의존하여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 노동운동이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 확보의 실패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진영 양자는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집단이기주의로 오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운

내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Therborn(1978)과 Offe(1984) 등의 국가이론을 참조할 것.

동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고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¹²⁾ 이러한 노동운동 양 진영의 문제의식은 권영길(1993)에 집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집단이기주의, 경제발전의 저해요소, 투쟁일변도의 싸움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상당부분 국가와 자본, 그리고 언론이 합작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산물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그 반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 그러한 부정적 시각이 사실과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해야 할 몫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진영이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극복하는 방안은 노동운동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노동운동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는 노동조합의 부정적 이미지의 극복,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처, 사회변혁의 효과적 구현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운동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여타의 사회운동들과 연대함으로써, 물질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기업별 노조주의를 극복하고 산별체제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저지하고, 고용불안정성의 제도화와 노동강도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경영전략 등의 자본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이 여타의 사회운동들과 연대함으로써 사회변혁에 대한 국

12) 노동운동 양 진영의 문제 인식과 탈출구의 모색에 관하여는 한국노총(1994)와 권영길(1993)을 참조할 것.

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변혁세력의 역량을 결집·강화함으로써 사회변혁이 실현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과 민민운동과의 연대는 사회구조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 진영이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과 같은 민민운동 연합체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므로, 노동운동과 민민운동의 연대는 주어진 것으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민민운동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사회운동들을 중심으로 운동의 특성 및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논의하기로 하겠다.

4. 신사회운동에 관한 그릇된 이해들

한국사회에서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편향적이고 잘못된 명제들과 결합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이론적 오해는 주로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이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불가”라는 명제이며, 이러한 명제의 유포는 이론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 오류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발전에도 중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연대불가 명제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신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주로 구미사회들에서 발전된 신사회운동론들 가운데 신사회운동의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론들의 소개와 더불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남미와 같은 다른 사회들에서의 신사회운동 현상들과 신사회운동에 대한 논의들이 배제된 구미중심적인 신사회운동론이 풍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신사회운동에 대한 물구조적 이해를 낳게 되었다.

둘째는 일부 신사회운동 활동가들에 의하여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민민운동에 대하여 지니는 차별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차별성의 강조는 더욱 발전하여 “신사회운동 패권주의”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사회변혁을 위한 핵심세력으로서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민민운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는 “신사회운동 시대”라는 신화가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향된 이론적 논의와 일부 운동가들에 의한 잘못된 시각은 상호 보장되어 신사회운동에 대한 구미편향적이고 물구조적인 이해와 신사회운동가들 일부의 운동패권주의가 더욱 확산되게 되었다. 그 결과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나 민민운동과 연대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지니지 않는다는 연대불가 명제를 통념화하는 폐해를 낳게 되었다.

5. 본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에 관한 프로젝트의 두 편의 보고서 가운데 첫 번째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가 의도하는 바는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연대불가 명제의 허위성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신사회운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관계에 관련된 명제들의 허구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작업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제 2장의 내용이다. 제 2장에서는 신사회운동을 구미와 중남미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신사회운동에 대한 구미편향적이고 물구조적인 시각을 교정하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관계를 둘러싼 이론적 명제들의 허위성 여부를 규명한다. 이러한 비교사회론적 논의를 통하여 신사회운동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필요성을 밝히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불가 명제가 허구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제 3장과 제 4장에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경험들을 고찰함으로써 연대불가 명제가 허위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연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노동운동측에서

신사회운동과의 연대의 경험 축적 및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고자 하며, 노동운동의 양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진영 모두에서 연대발전의 추세를 확인한다.

제 4장에서는 신사회운동의 다양한 유형들 가운데 시민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등 3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대표적인 2개 단체의 활동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 운동단체들은 시민운동의 경우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여성운동의 경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환경운동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배달녹색연합이다. 이들 각 신사회운동단체의 특성 및 활동은 해당 운동단체의 핵심 활동가들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각 운동단체에 관한 논의는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신사회운동 단체의 목표, 특성, 핵심 사업들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 경험에 대한 검토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확인된 개별 신사회운동의 정체성 및 지향성은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연대경험에 대한 해당 신사회운동 단체의 검토는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들이 고려해야 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6.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관한 개념적 논의

통상 학문적 논의에서는 신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사회운동가들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시민운동이란 ‘시민사회’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시민사회의 운동 혹은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에 의한 운동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의 전제가 되고 있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개념정의에 있어 불명확하다는 점과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분석적 이점이나 실천적 이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

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은 통용되고 있는 광의의 의미보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개념정의의 핵심 특성(defining criteria)에 관계없이 잔여범주로서 내용과 경계가 규정된다. 시민사회는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전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여타 부분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며 여타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시민사회의 내용과 경계는 상이하게 된다. 시민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은 주로 “2자 모델” 혹은 “3자 모델”이며, 2자 모델은 정치학자들과 일부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선호되는 반면 3자 모델은 대체로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다.

시민사회를 규정하기 위하여, 2자 모델이나 3자 모델 모두에서 제일 먼저 배제되는 부분은 국가 혹은 정치사회이다. 이때 배제되는 부분은 좁게는 억압적 정치기구 혹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이며, 조금 넓게는 억압적 정치구구에 의회나 사법부 등을 포함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정당의 역할까지도 포함하며, 더 넓게는 이해집단의 영역까지도 추가하기도 한다. 배제되는 부분이 좁을 때는 국가라는 개념이 선호되며 배제되는 부분이 넓을 때는 정치사회라는 개념이 선호된다.

시민사회의 개념 규정을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3자 모델이다. 3자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은 가장 좁게는 노동계급 혹은 노동운동, 조금 넓게는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양대 계급의 관계, 조금 더 넓게는 여타의 계급들도 포함하는 계급관계 혹은 생산관계, 더 넓게는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재화의 유통 등 생산을 지원하는 부문들까지 포함하며, 가장 넓게는 개인과 가계에 의한 소비행위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3자 모델에서 국가 혹은 정치사회에 추가적으로 배제되는 부분이 좁을 경우 노동운동, 계급관계, 생산관계, 생산부문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반면 배제되는 부분이 넓을수록 경제사회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내용과 경계는 2자 모델을 택하는가 3자 모델을 택하는가에 따라 가변적이며, 2자 모델과 3자 모델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되는 정치관련 부문의 범위와 3자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배제되는 경제관련 부문의 범위에

따라 가변적이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2자 모델을 택하는지 3자 모델을 택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하며, 그런 다음 배제되는 정치 관련 부문과 경제관련 부문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시민사회의 핵심 특성, 의미, 내용, 구성, 범위, 경계 등이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따라 가변적인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그 불명확성과 개념 사용이 야기할 수 있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이론적 전제와 이데올로기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론적 전제는 모든 사회의 시민사회와 국가 혹은 정치사회와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물구조적 시각에 기초하여 있다. 예컨대, 이들은 독일 시민들이 정부에 의하여 실시되는 센서스를 거부하는 경우와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를 동일한 현상으로 치부함으로써, 양 사회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차이 및 정치적 기회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제도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구조 하에서 센서스 거부와 민주화가 진행되는 역학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전제로서는 시민사회의 팽창과 국가의 역할의 축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역할 축소 예찬론’이다. 하지만 구미의 경우에서나 제 3세계에 있어서는 자본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무차별적 이윤추구에 대한 규제,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규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실천 등 국가의 적절한 역할이 매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운동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이유로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기피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광의의 시민운동이라는 개념¹³⁾을 사용하는 대신 협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민운동을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13) 한국에서 사용되는 시민운동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구미 등의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시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가 있다. 시민권운동이라는 개념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시민운동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시민사회라는 2자 모델 혹은 3자 모델로부터 도출된 개념이 아니다.

과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 세 유형의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 세 유형의 운동은 운동 목표에서 차별적이고,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나, 저해하는 요인들, 운동의 활성화 정도, 목표 실행을 위하여 선호하는 전략 등에 있어서 차별적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의 연대와 관련하여서도, 연대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도 차별적이며, 개별 연대내의 부문들간의 발전에서의 불균등 정도에 있어서도 차별적이다. 이는 개별 신사회운동들이 지니는 목표와 특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의 연대에서 보이는 가능성 및 제약 요인들에 있어서도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개별 신사회운동과의 연대에 있어 각기 연대의 활성화 수준, 부문별 불균등발전 여부,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들, 연대의 발전을 위한 접점에 있어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개별 신사회운동과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연대의 영역과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차별적 전략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에 보편적인 연대의 영역, 연대의 원칙들, 연대의 전략들에 추가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을 광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협의로 사용하는 경우 분석적 이점에 더하여 실천적 이점도 있으며, 이것이 본 보고서에서 협의의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강석재(1995),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 영남노동연구소, 『신경영전략 : 이렇게 맞서자』,(영남노동연구소).
- 강신준(1995), “신경영전략과 인사·임금제도”, 영남노동연구소, 『신경영전략 : 이렇게 맞서자』,(영남노동연구소).
- 권영길(1993), “노동조합운동의 나아갈 길”, 창작과 비평,(가을호).
- 김동춘(1995),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역사비평사).
- 노민영(1994), “‘희망 90년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희망찾기”, 「우리네 일터」, 제7호(1-2월).
- 노중기(1994), “1987년 이후 거시적 노자관계의 변동과 노동운동”, 「동향과 전망」, 통권 21호(겨울·봄 합본호).
- 박석운(1994), “신경영전략과 노조의 대응”, 일하는 사람들의 토론모임 발표,(8월 17일).
- 신병현·김도근(1993), “자본합리화 운동의 신경향 : 기업문화전략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가을호).
- 임영일(1992),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여름호).
- 조돈문(1994a), “제 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 연구”, 「경제와 사회」,(봄호).
- 조돈문(1994b), “계급형성과 계급연합 : 미국, 스웨덴과 비교하여 본 한국의 계급별 이데올로기적 편차”, 「동향과 전망」,(1994 여름).
- 조돈문(1995d), “전평 노동조합들과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동향과 전망」,(여름호).
-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Offe, Claus(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London).

Poulantzas, Nicos(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London : New Left).

Therborn, Göran(1978). What Does the Ruling Class Do When It
Rules?(London : New Left).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주간 「노동자신문」, 해당일자.

「한겨레신문」, 해당일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해당년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4), 「1993년도 사업보고」.

제 2 장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와 한국의 신사회운동

조 돈 문

1. 신사회운동의 정의

사회운동이란 “사회나 어떤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혹은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상당한 지속성을 갖고 비교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중에 의한 운동”(Turner & Killian 1972)으로 정의된다.¹⁴⁾ 이처럼 사회 변화를 추구하거나 그에 저항하는 집합적인 움직임은 사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운동의 역사에 1970년대와 80년대 들어 새로운 부류의 사회운동 움직임들이 전세계적으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부류의 사

14) 사회운동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톨리(Tilly 1978)는 “사람들이 공통된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행위, 또는 기존 사회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맥카시와 잘드(McCarthy & Zald 1979)는 “특정 사회의 사회구조 또는 보상의 분배체계가 일부 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 및 신념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이들의 사회운동 정의가 이들이 표방하는 자원동원이론의 시각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듯이, 사회운동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각각 이론가들의 특정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터너와 킬리언(Turner & Killian 1972)의 정의는 이론적 시각들로부터 중립적이어서, 특정 이론의 부침에 관계 없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회운동은 기존 사회운동의 대표적 유형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과 비교하여 운동의 목표와 전략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이라고 불리운다.¹⁵⁾

신사회운동으로 분류되는 사회운동들은 다양하며, 구미의 신사회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칭되고 있는 운동들로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반핵운동, 동성연애자운동, 생태운동, 시민권운동, 대안적 협동조합운동, 대안적 문화공동체 운동, 소수인종운동, 동물권리보호운동, 대안적 의약운동, 종교근본주의자운동, 빈민운동, 원주민운동, 흑인시민권운동 등이 꼽히고 있다.¹⁶⁾ 여기에 중남미의 학자들(Escobar & Alvarez 1992 : 2 ; Calderón et al 1992 : 20-23)은 빈민지역운동, 도시주민운동, 무료급식운동, 인권운동, 노동자협동조합운동, 문화뿌리운동, 실종자어머니운동, 농민게릴라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을 추가하고 있다. 애덤(Adam 1993 : 322-324)은 이와 같이 신사회운동으로 지칭되는 사회운동의 유형들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우며 신사회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운동들을 제한적으로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것이 신사회운동 이론들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¹⁷⁾

신사회운동에 관한 논의들의 문제점은 신사회운동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내용적 의미(substantive meaning)와 발생학적 의미(genetic meaning)를 혼동·혼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¹⁸⁾ 신사회운동의 ‘새로움(newness)’

15) 이러한 중대한 사회변화는 비단 사회운동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며, 사회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적 부류들이 있다. 정치분야에서 신사회운동이 변화를 대변하듯이, 경제분야에서는 포드주의(Fordism)에서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문화분야에서는 모더니즘(modernism)에서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의 총체가 신시대(New Times)라는 것이다(Hall & Jaques 1989; Bagguley 1992).

16) 구미의 신사회운동의 다양한 유형에 관하여는 Plotke(1990: 83), Adam(1993: 322-324), Johnston et al(1994: 21), Hirsch(1988: 44), Offe(1990: 232) 등을 참조할 것.

17) 애덤은 구미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칭되는 신사회운동의 유형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론가들¹⁹⁾은 “발생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70-8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운동들 가운데 생태운동을 비롯한 몇가지를 임의로 추출하여 신사회운동의 “내용적” 의미를 규정한 다음, 그렇게 규정된 “내용적” 의미에 입각하여 신사회운동의 유형을 제한함으로써 다시 “발생학적” 시각을 뒤집는 순환논리에 빠져있다. 그 결과 신사회운동은 개별 이론가들에 의하여 “내용적”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구상화(reified)”됨으로써 신사회운동론은 상호주관성을 잃고 의미의 혼란만 가중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개념의 제한은 제 3세계에서 70-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급속하게 성장한 사회운동들을 배제함으로써, 신사회운동은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구미의 특정한 유형의 사회운동들에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사회운동 개념을 내용적 의미가 아니라 발생학적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신사회운동을 범세계적인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한편 그러한 역사적 현상의 내용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신사회운동의 유형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하며 “구미중심주의”적 시각을 극복하여 신사회운동에 대한 균형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이란 70-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급속하게 성장한 일군의 사회운동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구미에서 발생한 사회운동들 뿐만 아니라 제 3세계에서 발생한 사회운동들도 포함한다.²⁰⁾

신사회운동이 발생학적 의미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사회운동이 지니는 내용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기존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논의들이 전제하는 것은 신사회운동이 풍미하기 전에 사회변

18) 발생학적 의미와 내용적의미의 구분에 관하여는 Tarrow(1989: 59)를 참조할 것.

19) 신사회운동의 새로움에 대한 반론은 아래에서 소개되며, 이러한 반대론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사회운동 이론가들이 발생학적 의미와 내용적 의미를 혼동·혼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60년대의 학생운동과 시민권운동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나, 관심의 초점이 서게 된 것은 1968년 폭발한 대중운동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프랑스의 5월 운동(May Movement)를 들 수 있다.

혁을 주도해온 것은 구사회운동(old social movement), 즉 노동운동이었다는 것이며,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생산관계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생산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생산관계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였으며 생산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외적 관계의 변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이 국가 권력의 성격과 행사에 대한 영향을 목표로 하는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국가권력의 장악 혹은 통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 혹은 쇠퇴를 경험하고 있던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이 사회과학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대부분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은 신사회운동이 생산관계와 국가권력과의 관련 이외에도, 특히 운동의 가치, 목표, 쟁점, 참여자, 전략, 내적 조직 등에 있어서도 노동운동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신사회운동은 유형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의 새로움에 대한 부정도 만만찮다. 이들 반대론자들²¹⁾은 노동운동을 포함한 구사회운동들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지적되는 신사회운동의 특징들이 전혀 새롭지 않으며 구사회운동들에서도 목격된다는 것이다.²²⁾

이들 가운데 다니에리 등(D'Anieri, Ernst & Kier 1990)은 구사회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19세기 영국의 차티스트(Charlist)운동, 19세기 미국의 오네이다(Oneida) 공동체 운동, 20세기 중반 독일의 평화운동들을 분석한 결과,

21) 신사회운동의 새로움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에 대하여 비판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반대론자들로서는 D'Anieri, Ernst & Kier(1990), Scott(1990), Tarrow(1988, 1989), Tilly(1988), Frank & Fuentes(1989) 등을 들 수 있다.

22) 신사회운동의 새로움을 부정하는 이들 이론가들의 상당수는 사회운동의 순환적(cyclical)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운동을 유발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운동은 부침한다는 논리와, 사회운동은 각각 유기체적 생애 주기를 갖고 있으며 신사회운동의 특성들이라는 것은 사회운동의 생애 주기의 초기 단계의 특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에서도 신사회운동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목표들, 조직형태들, 참여자 유형들, 운동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이 4반세기 전과 비교하여 참여자의 규모나 그 영향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며 노동운동을 포함한 구사회운동들과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²³⁾ 잉글하트(Inglehart 1990 : 65)가 예를 들고 있듯이, 환경운동의 경우 1840년대나 20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의 활동가들에 의존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최근에는 단일 집회에 수십만명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이 발전한 것이다. 1983년 서독에서 새로운 NATO 미사일의 배치에 반대하여 한 주일 동안에 3백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운동의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반대론자들의 문제점은 “(신사회운동이)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 아니라, 60년대 이전의 사회운동과 이후의 사회운동의 지배적 유형들 사이의 구체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Steinmetz 1994 : 179)는 점이다.

신사회운동이 특정 측면에서 구사회운동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여 신사회운동의 차별성들이 간과한다면 신사회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어렵듯이, 신사회운동이 구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제 3세계에서의 신사회운동을 배제한다면 신사회운동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논의를 통하여 신사회운동의 특성들과 등장 원인을 규명하고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 - 노동운동의 정체와 신사회운동의 정체의 필연성, 사회변혁 세력으로서 노동운동의 신사회운동에 의한 대체,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불가능성 - 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비교사회론적 논의는 국내의 신사회운동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구미중심주의적” 시각들과 그에 따른 “탈구조론적” 신사회운동론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비판론자들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뒷 부분에서 신사회운동의 특징들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2. 신사회운동 등장의 설명 : 구미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특징들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사회운동 이론들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²⁴⁾. 신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여권이 양호한 중간계급 출신들이 많으며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선 (collective goods)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자원동원이론 이전의 사회운동이론들은 주로 개인의 불만에 기초하여 사회운동을 설명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자원동원이론은 신사회운동의 등장 원인과 이념적 성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운동 이론은 신사회운동이 생산관계의 밖에서 생산외적 관계를 대상으로 계급경계를 초월하는 행위자들에 의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을 설명하는데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없다.²⁵⁾

기존의 사회운동 이론들이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성장을 설명하는데 무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신사회운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구미의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였다. 반면 제 3세계에서 등장한 신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은 주로 중남미 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이들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은 구미의 이론들을 응용하거나 비판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혹은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사회운동과는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이론의 구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이론이 구미의 신사회운동 이론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고자 시도하는 경우에도 구미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을 준거로 하여 출발한다는 점에서 구미의 신사회운동 이론들부터 먼저 검토하고, 그런 다음 중남미의 신사회운동들을 전자와 비교하며 검토하는 것이 순서로 보여진다.

24) 기존 사회운동 이론들의 한계에 관하여는 Dalton et al(1990), Johnston et al (1994)을 참조할 것.

25) 기존의 사회운동이론들이 신사회운동에 대하여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사회과학 일반의 구조적 설명들로부터 이론적 도움이 구해지게 되었다.

신사회운동의 등장에 관한 설명은 사회 변화의 반영으로 보는 구조적 설명과 개인의 참여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비구조적 설명이 가능하겠다. 하지만 개인의 가치 변화와 그에 따른 동기화를 중시하는 비구조적 설명도 사회 변화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어 구조적 설명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성장을 설명하는 구미의 이론들 가운데 중요한 흐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이며, 이들은 각각 계급정치론, 탈산업사회론, 시민사회론으로 이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신사회운동 이론들에 대한 타당성의 검증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신사회운동의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간략하게만 검토하고자 한다.

1) 계급정치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양대 계급의 계급관계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대 계급의 계급관계의 핵심은 착취관계라는 모순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계급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실험하여 왔으며 이러한 실험들을 통하여 정착된 제도적 장치들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 이들 가운데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구미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이 안정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 바로 포드주의(Fordism)였다.²⁶⁾

조절이론에 따르면, 포드주의는 독특한 유형들의 노동과정 모델, 축적체제, 조절양식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포드주의의 노동과정 모델은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테일러주의에 기초하여 노동과정을 숙련을 필요치 않는 단순반복적 작업들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자들의 작업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의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성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초하여, 포드주

26)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분석과 포드주의와 계급정치의 역학에 대한 분석에 관하여는 Lipietz(1992, 1987), Boyer(1988), Marglin et al.(1990) 등을 참조할 것.

의 축적체제는 소비재 생산의 확대에 생산재 생산의 확대를 결부시켜서 생산 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초과이윤의 일 정부분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대량 생산된 소비재를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의하여 소비되게 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의 연결을 확보한다. 이러한 축적체제의 재생산을 위하여 계급관계의 안정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계급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포드주의가 채택한 계급타협이라는 조절양식이다. 계급타협의 내용은 자본계급은 생산성의 지속적 상승과 그에 따른 이윤의 확보에 바탕하여 노동계급에게 고용의 안정과 실질임금의 상승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노동계급은 자본계급에게 사유재산권과 이윤확보를 인정하고 계급지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상호교환에 바탕한 타협이다.

이러한 포드주의 계급타협의 정치적 결과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계급정치의 제도화이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을 위하여 실업의 부담을 제거해 주고 각종 복지 서비스를 탈상품화하여 제공하는 한편, 시장에도 적극 개입하여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일시적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총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을 전개한다. 한편, 적대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은 자본가단체들과 노동조합들과 같은 각종의 이익집단들을 통하여 계급이익의 신장을 꾀하며, 더 나아가서 정당을 통하여 의회정치 내에서 계급 이해관계가 대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독점 혹은 분점하게 된다.²⁷⁾ 이러한 계급정치의 결과로 자본주의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꾸준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급정치는 부정적 결과 또한 산출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신사회운동이라는 것이다.²⁸⁾

27) 조합주의(corporatism) 이론가들도 이와같이 국가권력을 통하여 계급이해관계들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Schmitter 1977, 1974; Streeck 1992; Korpi 1978).

28) 계급정치와 신사회운동의 등장에 관하여는 Hirsch(1988), Mueller-Rommel (1990), Hirsch & Roth, Offe(1985), Kriesi & van Praag(1987) 등을 참조할것.

포드주의의 계급정치의 결과로, 이익집단들과 정당들이 계급 이해관계에 기초한 계급정치 기구들로서 생산외적 영역과 비계급적 쟁점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정치 기구들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여성문제, 환경문제, 핵문제 등 비계급적 문제들은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을 통하여 해소될 수 없으며, 양대 계급에 소속되지 않은 사회적 세력들이나 계급의 경계를 가로질러서 존재하는 사회적 세력들은 기존의 계급정치로부터 소외되게 되어,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신장이나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를 동원하게 되어 신사회운동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포드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경제성장과 평등한 배분은 생산의 대상인 자연 환경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지 않고 있어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 수탈을 방임하고 있거나 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환경주의자들의 입장이 대변될 수 없다.²⁹⁾ 또한 노동조합이나 노동당과 같은 전통적인 계급정치 기구들은 계급착취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착취관계로서 그의 해결이 다른 모든 불평등관계의 해결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함으로써 성관계의 불평등 해소에 대하여 경미한 관심만을 보임으로써 성문제 해결을 원하는 여성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없었다.³⁰⁾

뮐러-롬멜(Mueller-Rommel 1990)은 이러한 노동조합들과 좌파 정당들의 이념적 경직성이 서구에서 신사회운동과 녹색정당들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70년대 중반 석유위기(oil crisis)로 인하여 서구의 각국 정부들이 핵발전소 프로그램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고 70년대 말에는 NATO에 의하여 핵미사일들이 서구에 배치되게 되어, 서구의 각국가들에서는 전국

29) 히르쉬(Hirsch 1988) 등이 지적하듯이, 좌파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이 환경문제에 있어 자본계급과 한 편에 서서 환경운동과 대립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반영한다. 스웨덴 SAP이 핵문제와 관련된 보수적 정책의 고집으로 인하여 1976년 실권한 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0)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지도부의 성비를 보면 이러한 계급정치 기구들이 얼마나 남성주도적인가가 드러난다. 그 결과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들이 성차별주의자로 여성운동가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Hartmann et al 1994).

적인 반핵운동 조직들이 결성되며 반핵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반핵운동 단체들은 80년대 초 시민당을 포함한 기존의 좌파 정당들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좌파 정당들의 협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좌파 정당들은 관료제적 조직구조로 인하여 짧은 기간안에 커다란 정책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당시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어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의 입장에 매달리고 있었던 데 있었다. 이와 같이 계급정치 기구들의 경직성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쟁점들과 요구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존의 계급정치 기구들의 밖에서 신사회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탈산업사회론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은 장기간의 지속적 산업화의 결과로서 인간의 물질적 욕구의 충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산업화 이후의 탈산업사회에 접어든 서구 사회에서 사회발전의 핵심과 더불어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변화라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과 욕구의 반응이 바로 신사회운동이라는 것이다.³¹⁾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였으며, 경제발전의 동력은 자본계급이 소유한 물질적 자본이었다. 하지만, 탈산업사회에서는 생산의 동력은 물질적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라는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을 대신하여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탈산업사회에서는 물질적 자본을 소유한 자본계급이 더이상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물질적 자본의 소유 여부에 바탕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착취관계도 사회관계의 중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한다.

31) 탈산업사회론에 관하여는 Touraine(1977, 1981, 1988), Inglehart(1990), Bell(1976) 등을 참조할 것.

또한 산업사회의 핵심을 차지했던 물질주의적 욕구는 산업화에 따른 풍요에 의하여 충족되게 되었으며, 탈산업사회에서는 물질적 욕구의 충족에 바탕한 탈물질주의적 욕구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탈물질주의 욕구들은 물질주의에 바탕한 기존의 정당들과 사회운동들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으므로 제도정치 밖에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신사회운동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로 신사회운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가인 잉글하트(Inglehart 1990)는, 환경운동이 활발한 것은 환경이 과거보다 더 황폐화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환경의 질에 대하여 과거보다 더 민감하게 된 때문이며, 여성운동이 활성화된 것도 여성이 수십년전과 비교하여 오늘날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성취와 가정 밖에서의 경력에 대하여 더 적극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발달하게 된 것은 산업사회로부터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이룬 경제적 풍요의 성취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발전의 논리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서구가 경험한 역사적 경험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2차대전 이후 장기간 동안 경제적 풍요 뿐만 아니라 전쟁의 부재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경험을 한 서구인들은 국가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회수하게 되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그 결과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신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3) 시민사회론

시민사회론자들은 서구사회의 역사를 일련의 합리화 과정의 역사로 보고, 이러한 합리화 과정은 정치 경제 기구들을 포함한 체계의 비대화와 복잡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체계의 비대화의 결과로 개인들은 체계에 대한 예속을 경험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반발로 정체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노력이 신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³²⁾

합리화 혹은 근대화라는 역사적 추세는 자본주의 사회에도 적용되었으며,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과 계급관계가 창출하는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 더한 자본주의의 특징적 문제 해결로서의 합리화 과정은 정치기구들과 경제기구들의 비대화와 관료제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라는 정치기구는 국방과 행정 등의 통상적 국가 기능 이외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로서 시장에 개입하여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했고, 개인들의 복지에 관여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비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국가 뿐만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따른 사회 전역의 상품화는 기업들과 시장기구들의 규모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경제기구들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하여 더욱 더 거대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기구들과 경제기구들의 비대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체계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심화되고 광범위하게 되었다. 이제 시민들에 대한 체계의 영향은 생산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의 영역에도, 서비스의 영역에도, 의미와 상징의 생산 과정에도, 시민들의 사회관계들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포함한 비대화 된 정치기구들은 조직 내적 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더 관료제화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은 더욱 더 중앙집중화되었으며 중요한 정책의 의사결정은 기술행정적 기준으로 내려지게 되어, 시민들의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하는 기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기구들과 경제기구들에 대한 시민들의 예속을 이들은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통제” 혹은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등으로 이름 부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개인들은 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에

32) 신사회운동을 시민사회와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설명에 관하여는 Cohen & Arato(1992), Keane(1988), Offe(1985, 1990), Habermas(1984, 1987)를 참조할 것.

빠지게 되며 자신들을 통제·지배하는 정치기구들과 경제기구들에 대하여 자율성을 회복하고 개인적·집합적 정체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노력은 시민사회론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혹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의 집합적 노력이 바로 신사회운동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이다.³³⁾

4) 소결

이상에서 검토한 구미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은 대체로 모두 구조적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설명들의 취약점은 구조적 변화와 개인의 참여 동기를 연계하는 인과적 메카니즘의 규명에 미흡하고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및 자원의 동원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³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설명은 신사회운동과 이전의 사회운동들과의 차별성을 추론하는 데에는 유용하며, 인과적 메카니즘의 규명과 자원 동원 과정에 관하여는 기존의 사회운동 이론들의 도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론들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개별 신사회운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설명력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사회운동의 특성들을 분석함에 있어 각 특성들의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 세 가지 신사회운동 이론들이 지니는 설명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 가지 신사회운동 이론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첫번째 공통점은 신사회운동을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물로 본다는 점이며,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 신사회운동은 자본주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와 계급관계의 특정한 역학관계의 산물이므로, 이들 신사회운동의 발생과 성장은 국가와 계급관계와 상당한 정도 관련성을 지닐 것이라는 점이다. 뒤에서

33)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합리화 혹은 근대화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과도한 합리화와 추가적 근대화에 대한 합리성과 근대성에 입각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34) 이러한 지적은 Bagguley(1992), Scott(1990), Wilson(1990), Tarrow(1989) 등을 참조할 것.

보겠지만, 역설적으로, 신사회운동 이론가들은 대체로 신사회운동의 특징들을 규명함에 있어 국가와 계급관계의 관련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³⁵⁾ 둘째, 신사회운동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론의 비판 세력인 순환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신사회운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최소한 자본주의가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겪게되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사회운동 이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계급정치에 바탕한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들과 같은 기존의 정치기구들의 경직성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급정치에 바탕한 정치기구들의 경직성은 필연적이라기 보다는 개연적이었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은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들의 유연성과 호응성 여하에 따라 양자간의 독립 혹은 적대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존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이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변수화하여 설명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신사회운동의 설명에 정치적 기회구조를 변수화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³⁶⁾

아래에서는 먼저 구미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비교하여 본 신사회운동의 특성들을 규명한 다음,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을 중심으로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비교하여 본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의 특성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35) 반면 애덤(Adam 1993)과 테로우(Tarrow 1990) 등은 신사회운동이 국가 및 자본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사회운동이 자본주의의 위기의 산물로 보며 신사회운동 이론들의 유토피아주의를 지적하는 교조주의적 맑스주의적 해석(Wimmer 1985)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6) 이러한 비판은 Wilson(1990), D'Anieri, Ernst & Kier(1990), Tarrow(1990), Scott (1990) 등 다수의 이론가들에 의하여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조건 혹은 정치적 기회구조와 같은 정치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대안적 이론화는 자원동원론자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Tilly 1978; McAdam 1982; McAdam et al 1988).

3. 구미의 신사회운동 : 노동운동과의 차별적 특성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의 대표적 유형인 노동운동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차별성은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신사회운동이 공유하는 특성들로 간주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신사회운동의 특성들을 운동의 가치와 목표, 운동의 전략, 운동의 조직형태, 운동의 구성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운동의 가치와 목표

노동운동은 지향하는 가치, 목표, 쟁점, 적대자가 매우 분명한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명료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노동운동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신사회운동을 대조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노동운동의 가치와 목표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초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2차대전 이후 포드주의 모델하에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실현된 바 있다.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권력의 장악과 계급관계의 변혁이다.³⁷⁾ 노동계급은 착취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전복하는 것을 자신의 계급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계급의 계급지배를 재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자본제적 국가이므로, 노동계급은 자본계급과 자본제적 국가를 자신의 계급이익 실현을 방해하는 적대자로 규정하고 있다.

37) 신사회운동과 대조하여 노동운동의 가치와 목표를 정리한 글로는 Offe(1985), Brand(1990), Steinmetz(1994) 등을 참조할 것.

노동운동은 장기적으로는 국가권력의 장악과 계급관계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물질적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운동의 쟁점으로 삼고 있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권리란 노동조합의 대표권, 단체행동권 뿐만아니라 의회정치를 통한 계급이익의 대변도 포함하며 물질적 복지란 실질임금의 상승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포함한다.

(2) 신사회운동의 가치와 목표

신사회운동의 사회관은 노동운동이 중시하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대신에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의 보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한다.³⁸⁾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신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라는 주장은 특히 시민사회론자들을 중심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은 과거의 사회운동들에서도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스캇(Scott 1990)의 주장은 정당하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지향성을 반영하는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경향이 과거의 사회운동들과 비교하여 신사회운동들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신사회운동으로 분류되는 여성운동, 소수인종운동, 전통문화운동, 동성연애자운동 등과 같은 사회운동들의 경우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과거의 사회운동들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이 얼마만큼 자율성과 정체성을 추구하는 운동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사회운동이 사회 전체의 거시적 영역보다는 개인의 미시적 영역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관심의 전이는 신사회운동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의 가치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에 비하여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38)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개념화에 대하여는 Offe(1985), Melucci(1980), Cohen & Arato(1992), Keane(1988), Dalton et al(1990) 등을 참조할 것.

포함하는 개인적 가치들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자본주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신사회운동은 국가권력의 장악과 계급관계의 변혁을 궁극적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운동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본계급과 국가를 본질적 적대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노동운동과 차별성을 보인다. 물론 애덤(Adam 1993), 스캇(Scott 1990), 위머(Wimmer 1985) 등이 신사회운동 이론들을 비판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의 논리와 국가의 권력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문제도 자본과 국가와 무관한 것은 없고 따라서 신사회운동도 자본과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계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이 국가권력의 장악과 계급관계의 변혁을 추구하게 되고 국가와 자본계급을 적대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 운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사회운동이 지향하는 사회관이 개인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듯이,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도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양식의 다양성 인정과 같이 거시적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목표들이며, 정치적·경제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목표이다.³⁹⁾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양식의 다양성 인정과 같은 사회적·문화적 목표들은 신사회운동의 각 유형별로 성평등 실현, 소수인종의 정체성 인정, 평화의 유지, 환경의 보전, 핵무기의 금지 등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난다.

노동운동이 특정 계급의 계급이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가치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공공선(collective goods)이다. 환경의 보전, 평화의 보장, 핵위험 없는 사회 등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은 공공선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특정 집단을 적대자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여성운동이나 소수인종 운동과 같이 지배집단의 범주가 분

39) Offe(1985), D'Anieri, Ernst & Kier(1990), Dalton et al(1990), Melucci(1994, 1988)를 참조할 것.

명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 신사회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한 범주의 다른 범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서로 상대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공존공생이므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과의 관계처럼 본질적인 적대관계는 아닌 것이다.

2) 운동의 전략

(1) 노동운동의 전략

노동운동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외적 행위 양식 즉 전략은 이익집단과 정당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⁴⁰⁾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이라는 계급정치 기구들은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의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친다. 노동조합은 자본가들과 단체교섭을 통하거나 합법화된 공간에서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펼침으로서 계급이익의 실현을 추구한다. 또한 노동계급은 좌파 정당을 통하여 의회정치에 개입하며 자본계급 정당들과 경쟁하며 국가권력의 통제를 추구하거나 그 행사 방식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2차대전 이후 포드주의 하에서 이러한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통한 계급정치의 결과가 바로 계급타협 혹은(신)조합주의인 것이다.

(2) 신사회운동의 전략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과 같은 이익집단과 정당을 통한 이해대변의 방법을 취하는 반면,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정치기구들과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비제도화된 수단들을 적극 활용한다고 한다.⁴¹⁾

40) 노동운동의 전략에 관하여는 Przeworski(1985), Streeck(1992), Offe(1985), Dalton et al.(1990) 등을 참조할 것.

41)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비정치성에 대한 주장은 Dalton et al(1990), Inglehart (1990), Johnston et al(1993), Mueller-Rommel(1990), D'Anieri, Ernst & Kier (1990) 등을 참조할 것.

그러나 신사회운동이 기존의 정치기구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신사회운동이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인 탓은 아니며,⁴²⁾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정당들이 이들의 이해관계나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익집단으로서 계급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대중 정당으로서의 좌파 정당을 포함한 기존의 정당들도 계급 이해관계에 바탕한 계급정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생산외적 쟁점들에 대하여는 매우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좌파 정당들이 생산외적 쟁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좌파 정당들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영국과 이태리 등은 기존의 좌파 정당들이 신사회운동의 쟁점들을 적극 수용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⁴³⁾ 영국의 경우 노동당이 60-70년대에 급진화를 거치면서 신사회운동의 쟁점들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여타의 구미 국가들과 비교하여 신사회운동이 기존 정당을 회피해야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평화운동과 같은 경우는 거의 노동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의회와 기타 제도화된 경로 밖에서 직접 행동(direct action)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직접 행동의 양식들로는 시위, 공공시설 점거, 연좌항의, 농성, 시설물 파괴와 같은 과격한 유형들이 적극 활용되며, 때로는 시민불복종이나 비폭력과 같은 비교적 온건한 양식들도 취해진다. 특히 과격한 직접행동 양식은 이러한 행위양식들이 기존의 사회운동들에서도 많이 사용된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 보다는 독일, 영국, 네델란드, 스칸디나비아와 같이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나라들에서 대중적 관심을 끄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이익집단들이나 정당들을 통하지 않고 의회정치의 절차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사회변혁의 전략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개혁을 이루어내는 “개혁

42) 신사회운동이 비정치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는 Scott(1990), Plotke(1990), Wilson(1990) 등을 참조할 것.

43) 영국과 이태리 등의 경우처럼 좌파 정당들이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전향적 태도를 취한 예들에 관하여는 Wilson(1990), Tarrow(1990), Mueller-Rommel(1990) 등을 참조할 것.

의 정치(politics of reform)”보다는 정치적 담론과 대중적 여론에 개입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영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에 해당되며,⁴⁴⁾ 이 점에서 노동운동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⁴⁵⁾

3) 운동의 조직형태

(1) 노동운동의 조직형태

노동운동은 구성원과 비구성원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 분화가 명확한 공식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일반 노동조합원들에 의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노동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에 의하여 대변되는 간접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44) 코헨과 아라토(Cohen & Arato 1992: 523-563)는 정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네 가지 유형에는 영향의 정치와 개혁의 정치 외에도, 개인적 집합적 정체를 재정의하는 “정체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와 정치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인정을 얻어내는 “포함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가 있다. 이들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정체성의 정치와 영향의 정치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행하는 정치인 반면, 포함의 정치와 개혁의 정치는 정치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이다. 한편, 정체성의 정치와 포함의 정치는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정치인 반면, 영향의 정치와 개혁의 정치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45) 이러한 영향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신사회운동은 사회 전체에 지배논리를 뒤집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멜루치(Melucci 1988: 249-50; 1994: 125-6)는 이러한 “소통적 행위(communicative action)”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예언(prophecy)”이란 운동가들의 실천을 통하여 지배 논리가 유일한 합리적 논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역설(paradox)”이란 지배논리의 비합리성을 밝힘으로써 지배논리의 권위와 영향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표현(representation)”이란 지배논리의 내용으로부터 은폐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추출하여 과시함으로써 지배논리의 모순을 설파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세 종류의 소통적 행위를 통하여 신사회운동이 얻는 것은 지배논리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지배논리의 뒤에 있는 권력을 드러내 보인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일반 노동조합원들과의 구분도 명확하며 노동조합 간부들 사이의 역할도 위계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의 조직형태는 간접민주주의, 공식적 조직형태,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를 특징으로 한다.⁴⁶⁾

(2) 신사회운동의 조직형태

신사회운동 이론들에 따르면, 노동운동과 대조적으로 신사회운동은 직접민주주의, 비공식적 조직형태, 의사결정의 분산을 조직형태의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⁴⁷⁾

신사회운동은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 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들의 참여 없이는 운동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는 한 신사회운동은 존속할 수 없으며, 신사회운동이 존속하는 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신사회운동은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구성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의 구분도 불분명하다. 또한 일반 구성원들이 활동가들에게 이익대변을 위임한 것도 아니며, 활동가들 사이의 역할 구분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신사회운동은 공식화의 과정을 별로 겪지 않은 비공식적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민주주의와 비공식적 조직형태에 기초하여 있으므로 의사결정이 소수의 상층 지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중시하게 되며, 의사결정과 더불어 권한도 중앙집중화되기 보다는 분산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는 대조적으로 직접민주주의, 비

46) 노동운동의 조직형태를 신사회운동과 대조하여 규정하는 부분은 Scott(1990), Offe(1985), Dalton et al(1990)을 참조할 것.

47) 신사회운동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Dalton et al(1990), D'Anieri, Ernst & Kier (1990), Johnston et al(1994) 등을 볼 것.

공식적 조직, 의사결정과 권한의 분산을 조직형태의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조직형태의 특성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Offe(1990)는 그러한 특징들은 사회운동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에 불과하며 신사회운동의 독특성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회운동이나 운동의 초기 단계에는 제도적·조직적 자원을 지니지 못하므로,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구분이나 지도부와 추종자의 구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메카니즘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초하게 되며 의견합의가 어려운 쟁점들은 배제함으로써 운동의 분열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결정의 탈중앙집중화, 비공식적 조직형태, 직접민주주의 등의 조직적 특성은 사회운동의 초기 단계의 특징들이며, 운동이 초기의 활기를 잃고 침체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의 공식화를 추진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나 의사결정의 분산 등의 특성은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도부 역할,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구분, 의사결정 절차의 수립 등의 조직형태의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회비납부를 통한 항구적 기여, 기금의 확보를 통한 운동의 지속적 사업의 가능, 조직내적 의사소통 절차들을 통한 의견의 조절 등의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은 공식화를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 직접민주주의, 조직의 비공식성, 의사결정의 분산 등의 특성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사회운동이 초기의 활동적 단계를 지나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과 다른 어떤 조직적 형태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특성들이 신사회운동의 본질적 속성인지 아니면 초기 단계의 운동 일반의 일시적 특성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신사회운동은 직접민주주의, 조직의 비공식성, 의사결정의 분산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점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⁴⁸⁾

48) 스캇(Scott 1990)도 신사회운동이 운동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점차 조직의 공식화와 위계화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오페의 입장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캇은 신사회운동의 현재의 조직형태

4) 운동의 구성원

(1) 계급범주의 유용성

노동운동의 참여자는 노동계급이며, 노동계급의 참여 동기는 계급이익 즉 물질적 이해관계이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계급범주가 유용하지 않으며 참여 동기도 물질적 이해관계가 아니며, 전통적인 좌우의 이데올로기 구분도 부적합하다는 것이 신사회운동 이론가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⁴⁹⁾

(2) 신사회운동의 참여자들

신사회운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참여자들로는 중간계급,⁵⁰⁾ 뿌디부르쵸아, 주부들을 포함한 여성들, 젊은 세대, 고학력층 등의 사회범주들이 자주 거명되고 있으며, 이들 중 특히 중간계급이 최고의 고객으로 꼽히고 있다.⁵¹⁾ 중간계급이 신사회운동에 참여율이 높은 것은 자신들의 물질 이해관계 때

가 새로운 쟁점들과 돌발적인 사건들에 매우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들 모두 신사회운동이 현재 보이는 조직형태의 특징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49) Dalton et al (1990), D'Anieri, Ernst & Kier (1990), Johnston et al (1994) 등을 참조할 것.

50) 여기에서 중간계급이란 구중간계급이라고도 불리는 뿌디부르쵸아 계급을 포함하지 않고, 전문적 기술을 지니고 있는 전문인 집단과 조직경영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감독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계급 가운데 전문인 집단은 독자적인 계급정치를 펼칠 수 있는 성향과 역량을 가장 크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과 상당한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중간계급의 내적 이질성과 신사회운동에 대한 함의에 관하여는 조돈문(1995a)을 참조할 것.

51) 신사회운동의 참여자들에 관하여는 Offe(1985), D'Anieri, Ernst & Kier(1990), Steinmetz(1994), Inglehart(1990) 등이 있으며, 가장 체계적인 정리로는 Offe (1985)를 꼽을 수 있다.

문이 아니며, 신사회운동의 요구 조건들도 중간계급 또는 특정 계급의 계급 이해와는 별 관련이 없다. 신사회운동의 내용과 중간계급의 생산관계에서의 위치 및 역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계급 구성원들이 신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이 중간계급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겪은 경험이나 습득한 자원들, 이들의 생산외적 관계들과 생산현장 밖에서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지녔으며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담당하고 있어, 지배 이데올로기와 논리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때문에, 어느 다른 사회범주들 보다도 신사회운동에 대한 참여의 잠재적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여 당면한 물질적 생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됨으로 물질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사회운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회운동들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

오페(Offe 1985)는 중간계급 이외에도 주부들이나 은퇴한 사람들 같은 탈상품화된 주변집단과 뿌띠부르쥬아를 주요한 신사회운동 참여자로 꼽고 있다. 그에 따르면, 탈상품화된 주변집단들은 삶의 조건과 생활기회가 철저하게 외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범주라고 한다. 반면 이들은 자율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집단들이어서 신사회운동과 같은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또한 뿌띠부르쥬아는 당면한 물질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안별로 운동에 참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검증된 바 없는 명제이며, 시간활용이 자율적이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참여 동기

Offe(1985) 등은 신사회운동 참여자들을 사회범주들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반하여, Dalton et al(1990), Johnston et al(1994), Inglehart(1990) 등은 사회범주들 대신 다른 기준들을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운동의 동원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질 이해관계라는 객관적 조건이지만, 신사회운동의 경우에는 그러한 물질 이해관계나 객관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더욱 중요한 참여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선(collective goods)의 추구이며 가치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이론가는 잉글하트(Inglehart1990)이다.

잉글하트(Inglehart 1990)에 따르면, 신사회운동에의 참여율은 세대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구미사회들은 장기간의 경제적 번영과 전쟁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 이들은 경제적 번성이나 국가의 안보 등을 당연시하게 되어,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 보다는 개인들의 자기표현이나 삶의 질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로의 가치관의 변천은 신사회운동의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였으며,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연령이 낮을수록 강하며 모든 세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더 탈물질주의적이 되고 있어, 신사회운동은 밝은 전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4.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 구미 신사회운동과의 차별적 특성

대체로 7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그 특성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신사회운동의 유형들에 있어서도 구미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미의 경우 대표적인 신사회운동으로

꼽히는 것은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인데 비하여, 중남미에서는 여성운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나 환경운동은 아직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운동의 경우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중남미에서 가장 활발한 신사회운동의 유형은 도시주민운동이다. 이러한 중남미의 차별성은 중남미와 구미의 사회구조적 조건에서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운동의 가치와 목표

구미의 신사회운동이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 보장을 바람직한 사회관에서 최우위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반하여,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에서는 아직 정치와 경제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구미의 신사회운동보다는 도리어 구사회운동인 노동운동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의 경우 비단 신사회운동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의 최우선 가치는 정치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신사회운동이 등장한 시기 전후의 중남미 제국들은 아직 군부독재 하에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신보수주의 긴축정책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여건이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으로 하여금 정치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사회관을 버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외채위기 하에서 여전히 긴축정책을 강요당하고 있고 군부정권은 몰락하였으나 아직 민주화의 과정을 완성하지 못한 중남미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여전히 지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지만 국가권력의 장악이나 계급관계의 변혁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수준의 가치를 중시하는 구미의 신사회운동과는 달리,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삶의 질 향상과 생활양식 다양성 인정 이전의 기본적 생존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 생존권의 성취를 위하여 제기되는 쟁점들은 경제적 불평등, 절대 빈곤

52) Oxhorn(1988), Mainwaring & Viola(1984), Escobar & Alvarez(1992)를 참조.

층의 확산, 의료 및 교통 등 집합적 재생산을 위한 수단의 확보 등 물질적 조건들과 함께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정치적 요구조건 등이다.⁵³⁾ 이와 같이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권과 정치적 시민권을 추구하는데 몰두하여 있다는 것은 중남미에서의 신사회운동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인 깔데론 등(Calderón, Piscitelli & Reyna 1992 : 20-23)이 지적한 최근의 중남미의 대표적 사회운동 9가지의 분포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이 예시한 사회운동들에는 도시주민운동, 실종자 어머니들의 운동(Madres de Plaza de Mayo),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칠레 여성들의 운동, 페루에서 좌파혁명을 추구하는 게릴라운동(Sendero Luminoso), 인디언들의 농민운동, 상파울루 금속노동자들의 운동, 중미의 민족해방운동 등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구미의 신사회운동 보다는 도리어 시민권과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구사회운동인 노동운동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구미의 신사회운동들이 국가와 자본계급을 적대자로 규정하지 않는데 반하여, 중남미의 신사회운동들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전복과 계급관계의 전복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자본이 물질적 생존권과 정치적 시민권의 훼손에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⁵⁴⁾ 국가는 경제발전 모델의 선택과 경제운영의 오류로 경제위기를 야기하였고 뒤이은 긴축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생활의 궁핍화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자본은 정부의 신보수주의 경제모델의 최대의 수혜자인 반면 부의 균등 분배에 적대적이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국가는 군부정권의 퇴각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화에 소극적이며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운동들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53) Mainwaring & Viola(1984), Hellman(1992), Schneider(1992), Cardoso(1992)등을 참조할 것.

54) Escobar & Alvarez(1992), Gil(1992), Tamayo(1990) 등을 참조할 것.

2) 운동의 전략

구미의 신사회운동이 이익집단이나 좌파 정당과 같은 기존의 계급정치 기구들을 외면하고 의회정치의 밖에서 직접행동 등의 방식을 통하여 영항의 정치를 펴는데 비하여,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개혁의 정치를 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상의 유사성은 전혀 상이한 메카니즘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이 좌파 정당을 별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좌파 정당의 이념적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탄압으로 인하여 좌파 정당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⁵⁵⁾ 군부독재의 등장 이후 가장 먼저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좌파 주도의 노동조합들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군부독재가 수립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탄압하에서 좌파 정당들은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으며, 합법적 활동의 봉쇄와 무절제한 탄압은 자연히 좌파 정당을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레닌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놓이게 만들었고, 좌파 정당은 이념적 경직성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됨에 따라 신사회운동의 불신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좌파 정당이 신사회운동의 활용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좌파 정당이 계급정당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탄압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좌파 정당의 합법적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사회운동과 좌파 정당과의 연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1988년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에서 신사회운동 조직들이 좌파 정당의 까르테나스 후보의 선거운동에 기초를 제공하였던 예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⁵⁶⁾

국가에 의한 탄압으로, 신사회운동이 좌파 정당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좌파 정당 탄압의 반사이익을 얻어 운동의 활성화를 이룰

55) Hellman(1992), Foweraker(1990), Oxhorn(1988), Mainwaring & Viola(1984)등을 참조할 것.

56) Tamayo(1990)과 Foweraker(1990)를 참조할 것.

수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탄압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것이었으며, 정부의 탄압은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에 집중되어서, 여타의 사회운동들이나 교회와 같은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정부의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좌파 활동가들이 도시주민운동과 여타의 사회운동에 침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국가의 탄압을 면제받은 교회는 사회운동에 물질 자원과 인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⁵⁷⁾ 따라서 중남미에서 노동운동의 침체와 신사회운동의 활성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군부독재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군부독재가 종식된 후에도 구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주화의 정도가 미약하여 영항의 정치를 펼만한 공공적 공간(public spheres)은 별로 없어서,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구미의 신사회운동이 취했던 영항의 정치의 전략을 취할 수 없었다. 시민들의 기본적 생존권과 시민권의 확보를 위하여는 물질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적 체도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⁵⁸⁾ 따라서 신사회운동 특히 도시주민운동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의료, 교육, 주택, 공공 서비스,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함으로써 개혁의 정치를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주민운동은 토지의 무단점거 혹은 공공시설의 점거와 같은 비제도화된 직접행동의 양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구미와는 달리 합법적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탓이라고 하겠다.

3) 운동의 조직형태

구미의 신사회운동이 직접민주주의, 비공식적 조직형태, 의사결정과 권한의 분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직접민주주의

57) Oxhorn(1988), Schneider(1992), Alves(1984), Mainwaring & Viola(1984) 등을 참조할 것.

58) Castells(1983), Ramírez Saiz(1990), Oxhorn(1988)을 참조할 것.

를 시행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반면, 조직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으나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는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공식화와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는 신사회운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도시주민운동의 경우에 가장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주민운동의 경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행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기 위하여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상되었으며, 산재한 도시주민운동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단위로 연합을 결성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연맹체를 결성함에 따라 조직의 공식화가 크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도시주민운동은 주민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주민의 동원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직접민주주의는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⁵⁹⁾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유지로 인한 의견의 수렴 절차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4) 운동의 참여자

구미의 신사회운동의 핵심적 참여자는 중간계급인데 비하여,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의 경우 하층계급의 참여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중남미 제국에서 가장 정치적 제도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자원의 박탈을 느끼는 사회집단은 바로 하층계급이며, 이들에 의한 기본적인 생존권의 요구가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도시주민운동이다.⁶⁰⁾ 7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경제위기와 긴축정책의 시행으로 실업률은 높아가고 실질임금은 하락하여 소득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하에서 중남미의 시민들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배양할 수 없었으며, 물질적 자원의 배분을 통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이 이들의 최우선 과제였던

59) Bennett(1992), Oxhorn(1988), Mainwaring & Viola(1984) 등을 참조할 것.

60) Frank & Fuentes(1987), Mainwaring(1987), Oxhorn(1988)을 참조할 것.

것이다.

물질적 생존의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심화되는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억압은 여성들이 도시주민운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게 만든 것이다. 여성들의 높은 참여율은 비단 도시주민운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부정권의 탄압에 의한 희생자들의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한 것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으며, 이들이 조직한 운동이 바로 “5월광장 어머니운동(Madres de Plaza de Mayo)”였던 것이다. 여성들의 전투성은 취업중인 남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시간을 만들기 쉽고 어머니라는 신분에서 오는 모성의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도시주민운동이나 반독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의 핵심적 참여자로 하층계급과 더불어 여성을 꼽는 것이다.⁶¹⁾

5) 신사회운동 등장의 설명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이 도시주민운동과 같은 특정한 유형이 과잉 발달되고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이나 여타의 신사회운동들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것은 중남미의 정치·경제적조건 때문이다.

첫째 요인은 경제발전의 실패이다. ⁶²⁾ 중남미의 경제발전 모델은 실패하여 외채위기로 종착되었고,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하여 채택된 신자유주의의 긴축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물질적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구조적 조건은 물질적 생존권의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이 쉽게 동원됨으로써 신사회운동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물질적 자원의 박탈을 가

61) 여성들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높은 참여율에 관하여는 Navarro(1989), Feljó (1989), Foweraker(1990) 등을 참조할 것.

62) Tamayo (1990), Oxhorn (1988), Ramírez Saiz (1990) 등을 참조할 것.

장 심각하게 체험하는 하층계급들과 여성이 운동의 주요 사회세력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둘째 요인은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의 미흡이다.⁶³⁾ 군부정권은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들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기구들을 말살함으로써 하층계급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하층계급은 물질적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를 동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때 탄압을 피한 좌파 활동가들이 운동에 침투할 수 있었고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탓으로 신사회운동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에, 메인워링과 비올라(Mainwaring & Viola 1984, 32-35)는 구미에서의 신사회운동의 발달을 추가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강한 국제적 연결망으로 인하여 중남미에 신사회운동이 신속히 파급될 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자원동원이론가들이 운동의 파급 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듯이, 구미에서의 신사회운동의 성공은 여타의 지역에 신사회운동이 등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5. 신사회운동의 비교사회론적 이해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의 비교사회론적 논의를 통하여 신사회운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노동운동-신사회운동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제고는 한국사회의 신사회운동을 이론화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1) 신사회운동의 특성

<표 2-1>에 정리되어 있듯이,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63) Oxhorn (1988), Schneider 1992), Mainwaring & Viola (1984)를 참조할 것.

은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성은 신사회운동을 구미중심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다양성은 신사회운동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의 차별성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신사회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의 차별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운동 목표의 차별성, 둘째는 운동 유형의 차별성, 셋째는 운동 전략의 차별성이다.

첫째 운동 목표의 차별성은 구미와 중남미의 사회구조적 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구미의 신사회운동이 자율성과 정체성 보장과 같은 개인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데 반하여,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와 물질 자원배분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구미의 신사회운동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는 반면 도리어 노동운동과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이 이처럼 운동의 목표에서 보이는 차별성은, 구미의 신사회운동 등장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구조적 특성 혹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구미 사회들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⁶⁴라고 불리는 포드주의 30년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성취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성취에 기반하여 신사회운동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개인적 수준의 삶의 질이나 생활양식의 다양성과 같은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국가나 자본계급을 더이상 사회변혁의 적대자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중남미 사회들의 경우 군사독재와 뒤이은 미흡한 민주화, 인플레이션

64) 2차대전 이후의 30년간 자본주의는 생산성 향상, 자본투자 증대, 이윤율, 임금인상율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모범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Glyn et al(1990)을 참조할 것.

과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보수주의 긴축정책의 실시로 인한 경제적 곤궁, 군사독재와 고도성장 기간에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의 잔존 등으로 인하여, 신사회운동은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양식 다양성 인정 이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는 경제발전 모델의 선택과 경제운영의 오류로 경제위기를 야기하였고 뒤이은 긴축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생활의 궁핍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자본은 정부의 신보수주의 경제모델의 최대의 수혜자인 반면 부의 균등분배에 적대적이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중남미의 경우 국가와 자본이 물질적 생존권과 정치적 시민권의 훼손에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신사회운동은 국가와 자본을 적대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차별성인 운동 유형의 차별성은 운동 목표의 차별성과 같이 사회구조적 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구미 신사회운동의 대표적 유형은 평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인데 비하여, 중남미의 경우 평화운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운동은 매우 미약하고 여성운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인 반면 도시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러한 신사회운동 유형의 차별성은 사회구조적 조건에 있어 중남미의 경우 아직 시민권이나 물질적 생존권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의 훼손이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중남미의 경우 구미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아직 활발한 동원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차별성인 운동 전략의 차별성은 운동 목표의 차별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별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고 하겠다.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구미의 신사회운동이 영향의 정치를 전개하고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이 개혁의 정치를 펼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좌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직접 행동과 같은 비제도화된 수단들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은 상이한 메커니즘의 결과이며 각각의 메커니즘은 주어진 정치적 기회구조 하에서 선택한 신사회운동의 전략인 것이다.

구미 사회들의 정당정치는 계급타협을 담보하고 실천하는 장으로서 계급

이해관계에 바탕한 계급정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생산외적 쟁점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때문에,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정치기구들과 의회정치를 우회하여 비제도화된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⁶⁵⁾. 이처럼 기존의 이익집단들이나 정당들을 통하지 않고 의회정치의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신사회운동은 사회변혁의 전략으로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개혁을 이루어내는 개혁의 정치보다는 정치적 담론과 대중적 여론에 개입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영향의 정치 전략을 채택한다.

중남미의 경우 국가의 탄압으로 인하여 좌파 정당이 무력화되어 있고 의회정치가 마비되었다가 민주화와 더불어 서서히 제 기능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의회정치나 기존의 좌파 정당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민주화와 더불어 좌파 정당이 소생하면서 좌파 정당과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연대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구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이 미흡하여 영향의 정치를 펼만한 공공적 공간(public spheres)이 별로 없어서 영향의 정치의 전략을 취하기 어렵고, 또한 기본적 생존권과 시민권의 확보를 위하여 물질적 자원을 보유하고 정치적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탓으로 개혁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미의 경우 완성도 높은 정치적 민주화와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의 이념적 경직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신사회운동이 선택한 전략이 좌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영향의 정치인 반면, 중남미의 경우 제한적 민주화로 인한 선별적 탄압과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있는 공공적 공간의 불완전한 자율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신사회운동이 선택한 전략은 좌파 정당으로부터

65) 이처럼 신사회운동이 좌파 정당을 포함함 기존의 정당정치를 우회하는 정도는 좌파 정당들의 이념적 개방성 정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영국, 이태리 등과 같이 기존의 좌파 정당들이 신사회운동의 쟁점들에 대하여 상당한 이념적 개방성을 보이며 적극 수용하는 경우에는 신사회운동이 좌파 정당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터의 독립성과 개혁의 정치인 것이다. 이처럼 신사회운동의 전략은 주어진 정치적 기회구조 하에서 가용한 선택지들 가운데 운동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신사회운동 전략의 “비정치성”과 관련된 두 가지 이론적 쟁점은 해결될 수 있다.

첫째, 신사회운동이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을 지향하지 않는가 라는 쟁점에 관하여는, 주어진 정치적 기회구조 하에서 신사회운동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므로 신사회운동이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릇된 명제이다.

둘째, 신사회운동은 본질적으로 좌파 정당과 같은 기존의 정치적 기구들을 활용하지 않는가 라는 쟁점에 관하여는, 좌파 정당들의 이념적 경직성 정도에 따라 신사회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점들이 결정되므로 신사회운동이 본질적으로 좌파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은 그릇된 명제이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의 내부민주주의를 포함한 내적 역학에서의 특성들이 사회운동 초기에만 국한된 현상으로서 운동의 침체를 겪으면서 소멸될 것이라는 오펜의 명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2) 노동운동-신사회운동 관계의 이론적 쟁점들

구미의 신사회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논의를 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하여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구미의 신사회운동론자들에게 의하여 제시되는 세 가지 명제는 노동운동의 침체와 신사회운동의 발흥의 필연성, 신사회운동의 노동운동 대체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불가론 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명제는 노동운동이 침체하고 신사회운동이 발흥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구미에서나 중남미에서나 노동운동은 침체하고 신사회운동이 발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침체와 신사회운동의 발흥은 구미와 중남미에서 사회구조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구조에

따라 각각 상이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결과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미의 경우 노동운동이 침체하게 된 것은 자본계급이 경쟁력과 이윤율 확보를 위하여 노동계급의 이익보장을 제도화한 포드주의 정치·경제 기구들이 노동운동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공세는 포드주의 계급타협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허물고 생산과정 모델의 변혁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조합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물적 조건의 보장과 생산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반면 중남미의 경우 국가와 자본계급은 포드주의적 계급타협을 거부하며 이윤극대화의 성장제일주의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주의(populist) 정권 시기에 강화된 노동운동을 제어할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는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되어 노동운동은 침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침체하게 된 것은 구미와 중남미에서 상이한 사회구조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조합에 의하여 결과된 현상이다.

한편, 신사회운동이 발흥하게 된 것은 구미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와 물적 생존권은 포드주의 황금기를 통하여 확보되었으므로 시민들은 자율성과 정체성 같은 개인적 수준의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계급타협의 제도화로 인하여 의회제도, 정당들, 이익집단들과 같은 기존의 정치제도적 장치들이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있으므로 계급외적 사회문제들이나 이해관계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의 밖에서 자발적으로 동원하게 된 것이다. 반면 중남미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와 물적 생존권은 아직 성취되어야 할 과제이며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탄압이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들에 집중되어 선별적으로 행사되고 있어 신사회운동이 사회전반에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미흡한 수준에서나마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사회운동은 교회나 언론과 같은 공공적 공간의 제한된 자원이나마 활용할 수 있게되어 노동운동에 비하여 유리한 여건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사회운동이 발흥하게 된 것도 구미와 중남미의 상이한 사회구조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조합에 의하여

결과된 현상이라 하겠다.

두번째 명제는 신사회운동은 핵심적인 사회변혁 세력으로서 노동운동을 대체한다는 명제이다. 신사회운동이 머지않아 소멸될 일시적 현상이 아님은 앞에서 잘 확인할 수 있었다. 신사회운동은 구미의 경우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등장하였으며, 중남미의 경우에도 정치적 민주화의 심화나 물질 생존권의 보장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신사회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운동의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구미의 경우 경쟁심화와 이윤축소에 따른 자본의 합리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자본의 공세는 경쟁력과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지지기반을 잃게될 것이다. 중남미의 경우에도 정치적 민주화의 심화에 따라 국가에 의한 탄압이 약화되게 되면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은 제거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침체가 자본주의에 내재된 메커니즘에 의한 구조적인 필연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노동운동은 다시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여전히 사회변혁 세력으로서의 인적 자원과 위치적 권력(positional), 조직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세력으로서의 이념적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동운동이 얼마나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계급(universal class)”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며, 스웨덴과 브라질 등의 노동운동은 이 점에서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세력으로서 조직적 역량 뿐만 아니라 이념적 역량도 지닐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세번째 명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은 연대할 수 없다는 명제이다.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사이의 연대는 구미에서도 중남미에서도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연대의 부재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내재적 본질 때문은 아니다. 구미의 경우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의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연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중남미의 경우에는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그로 인한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의 무력화로 인하여,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연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즉,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국가의 탄압을 불러오고 공공적 공간의 활용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구미의 경우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이 계급외적 문제들, 특히 신사회운동적 쟁점들에 대하여 이념적 개방성을 보이는 경우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경우는 구미의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경우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⁶⁶⁾

첫째, 중남미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의 심화와 물질 생존권의 확보는 사회전역의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운동 목표이다.

둘째, 중남미의 경우 권위주의 정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거대한 빈곤층의 존재, 환경의 질과 여성의 권익에 대한 경시, 계급타협의 부재, 사회복지의 미비 등은 상당부분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성장제일주의에 기인하고 있어, 국가와 자본은 노동운동의 적대자인 동시에 신사회운동의 적대자이기도 하다.

셋째,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운동의 목표나 참여자의 구성에 있어 구미의 신사회운동에 비하여 계급적 성격을 크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 점에서 노동운동과 높은 친화성을 보이고 있다.

6. 한국사회의 성격과 신사회운동

신사회운동의 비교사회론적 논의를 통하여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규명하고 신사회운동에 관한 그릇된 명제들을 일소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론적 이해

66)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가장 어려운 것은 환경운동으로서 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자들이 환경의식은 높을 수 있으나 자본가들과 물질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환경보호 비용을 사회화하여 기업층의 이윤 폭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자본가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의식의 불균등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조돈문 1995b).

에 기초하여,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특성과 역학을 규명하고 실천적 전망을 얻기 위하여는 구미중심주의적 시각과 탈구조론적 신사회운동론을 극복하고 구조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미와 중남미 사회와 비교하여 한국사회의 성격이 먼저 규명되어야 될 것이다.

1) 한국사회의 성격

한국사회의 성격을 정치·경제 구조, 경제성장의 성취, 경제성장의 비용, 정치적 기회구조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경제성장의 성취 측면에서는 구미의 사회에 근접해간다고 하겠으나 그 이외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중남미 사회와 매우 근접함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경제 구조와 관련하여 보면, 국가는 자본축적과 정당성의 모순적 선택에서 구미 국가들이 계급타협을 통한 정당성 확보를 통하여 모순을 해결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정당성의 문제를 경시하는 자본축적 우선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남미 국가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자본축적 우선의 전략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로 구현되어, 복지국가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이차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성장제일주의는 자본축적 논리의 신성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부문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탄압으로 일관하였고 경제성장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게 되었다.

중남미 사회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고속의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계급타협의 부재, 복지국가 정책의 미비와 초고속 성장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주요한 사회문제로 남게 되고 경제성장의 보상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남미 사회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의 비용은 경제적 불평등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문제들로 나타났다. 생산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축적의 논리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외적 물리적 자원의 보존이라는 생산조건⁶⁷⁾의 재생산 문제를 무시함으로써

써, 경제성장은 여성의 권익과 환경의 질에 대한 훼손을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비용은 자본주의 일반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정치적 기회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중남미 사회들과 같이 민주화 이행 과정에 있어 정치적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구미의 사회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이나 중남미 사회들도 군사독재 정권 시기와 비교하여 보면, 시민권이 신장되고 있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제한적이거나 허용되고 있으며, 언론의 활동도 정권의 암시에 예속된 자기규제적 (self-regulating)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거나 자율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권안보 차원의 악법들이 진보세력의 성장을 억압하여 왔으며 독립 이후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남미 사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2) 한국의 신사회운동

이러한 한국 사회의 특성에 따라 한국 사회에 등장한 신사회운동도 구미나 중남미 사회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한편 독특한 측면도 지니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 일반의 문제인 자본축적의 논리와 생산조건 재생산 사이의 모순 관계는 여성의 권익과 환경의 질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에 더하여 고도성장을 위한 성장제일주의는 한국이나 중남미 사회나 공히 여성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구미 사회들보다 더 악화시켰다. 고도 성장을 위한 경제성장 비용의 무시는 국가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지원되어, 환경에 대한 무차별적 착취가 용인되었으며 공해산업의 수입과 환경파괴적 생산기술의 운용

67) 맑스가 말하는 생산조건은 이 둘 이외에도 공동체적 조건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관계를 오코너 등은 자본주의의 제2모순 (second contradiction)이라고 부른다(O'Connor 1988 ; Spence 1993 ; Skirbekk 1994).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제 1모순은 맑스가 말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을 의미한다.

은 구미의 사회들에 비하여 환경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자본축적 논리와 결합된 가부장제체계는 가정과 사회관계에서의 위계적 성분업을 고착화시켰으며, 생산부문에서는 고도성장을 위하여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무제한적으로 흡수시켰다. 이처럼 성장제일주의 사회들에서는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에 더하여 고도성장정책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와 여성문제가 구미 사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와 한국에서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한 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지연된 때문이라 하겠다. 이는 중남미의 경우 환경운동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주로 아마존개발이라는 제한된 쟁점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과, 여성운동도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부재와 물질 생존권의 미확보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다른 사회들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신사회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서 이는 좌파 정당의 부재와 제한적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민주화는 전부문에 걸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좌파 이념에 충실한 세력들은 배제되게 되어, 좌파 정당의 탄생과 민민운동과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또한 민주화는 공공적 공간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제한된 정도의 자유만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정권의 관용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세력들만이 제한된 민주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 하에서 정권의 관용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민주화된 제한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한국의 “시민운동”인 것이다. 사회정의 일반, 경제적 민주화, 권력 행사의 감시 등의 사회의 모든 영역과 모든 사회범주들에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전의 군사독재 하에서는 주로 민민운동이나 비합법적 투쟁단체들에 의하여 전개되고 민주화가 완성된 구미와 같은 사회들에서는 좌파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때, 한국의 독특한 시민운동의 성장은 한국 사회의 특유한 정치적 기

회구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들의 핵심에는 국가와 자본, 특히 독점자본이 있으나,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같은 구조적 조건의 중남미와는 달리 국가와 독점자본을 적대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80년대 중·후반의 민민운동과는 달리 1989년 공안정국의 수립 이후에 등장한 시민운동은 국가와의 정면대립을 전개하지 않았고 우수기업들을 표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운동의 경우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 시기와는 달리 독점자본에 대한 적대성은 희석되고 환경 이벤트에 기업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에 비하여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여연의 경우에도,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빈민여성을 중심으로 하던 운동으로부터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사무직 여성과 주부들로 중심 이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신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국가와 자본에 대한 적대성의 희석 이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더 있다고 하겠다. 좌파 정당의 부재로 인하여 노동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틈과 공간이 결여되었고, 운동 전략의 측면에서도 노동운동의 동원과 개혁의 정치와는 달리 신사회운동이 홍보와 영향의 정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이 지니는 이념적 진보성과 전투성, 정권의 관용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신사회운동으로 하여금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비용을 높여주었다는 점이다.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 연대함으로써 정권의 관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언론 등 제한된 민주화의 공간 활용도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표 2-1> 노동운동, 구미의 신사회운동,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비교

비교기준	노동운동	구미 신사회운동	중남미 신사회운동
운동의 가치와 목표			
가 치 (사 회 관)	사회적 수준 (정치적 안정, 경제 성장)	개인적 수준 (자율성, 정체성 보장)	사회적 수준 (정치적민주화, 경제성장)
목 표	국가권력, 계급관계 변혁	삶의질, 생활양식다양성	기본적 생존권
갈 등 영 역	생산관계	사회문화영역	재생산영역(집합적소비)
적 대 자	국가, 자본계급	불분명, 복합적	국가, 자본계급
쟁점 , 요구	시민권, 자원 배분	다양한영역, 단일쟁점	시민권, 자원배분
운동의 전략			
행 위 주 체	노동조합, 좌파정당	자발적 결사체들	자발적 결사체들
정 당 활 용	좌파정당	독립성, 무관계	독립성(좌파정당연계추구)
정 치 유 형	개혁의 정치	영향의 정치	개혁의 정치
행 위 수 단	제도화된 절차	직접행동(적극적선택)	직접행동(소극적선택)
운동의 조직형태			
민 주 주 의	간접(이익대변)	직접(참여)	직접(참여)
조직공식성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공식화진행
의 사 결 정	중앙집중	하향분산	하향분산
운동의 참여자			
참 여 자	노동계급	중간계급, (여성)	하층계급, 여성
참 여 동 기	물질적 이해관계	탈물질주의, 공공선	물질적 (집합적소비재)
사회구조적 조건			
발 생 원 인	계급모순(착취관계)	계급정치, 생산중심주의 물질풍요, 정치안정	경제불평등, 빈곤확대 경제위기, 민주화불철저

<참고문헌>

- 조돈문(1995a), “중간계급의 계급적 성격”, 한국사회학회 1995년도 전기사회학대회, 6. 22-23, 동아대학교 승학(하단) 캠퍼스.
- 조돈문(1995b), “기업관련성과 환경의식 : 울산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Adam, Barry D. (1993). "Post-Marxism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30 : 3, 316-336.
- Alvarez, Sonia(1989), "Conceptual Problems and Methodological Impasses in the Study of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in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LASA XV International Congress*. 1-21.
- Alvarez, Sonia E. & Arturo Escobar(1992), "Conclusion : Theoretical and Political Horizons of Change in Contemporary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Escobar & Alvarez(1992)*, 317-330.
- Alves, Maria Helena Moreira(1984), "Grassroots Organizations, Trade Unions, and the Church : A Challenge to the Controlled Abertura in Brazil", *Latin American Perspectives*,(11 : 1), 73-102.
- Bagguley, Paul(1992), "Social Change, the middle class and the emergence of 'new social movements' : a critical analysis", *The Sociological Review*, 40 : 1.
- Bell, Daniel(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 Y. : Basic Books).
- Bennett, Vivienne(1992), "The Evolution of Urban Popular Movements in Mexico Between 1968 and 1988", *Escobar & Alvarez(1992)*, 240-259.
- Bobbio, Noberto(1988), "Gramsci and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in John Keane(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 New European Perspectives*,(London : Verso).

- Borda, Orlando Fals(1992),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in Latin America", Escobar & Alvarez(1992), 303-316.
- Boyer, Robert(1988), "Formalizing growth regimes", in Giovanni Dosi et. al. (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608-630.
- Brand, Karl-Werner(1990), "Cyclical Aspects of New Social Movements : Waves of Cultural Criticism and Mobilization Cycles of New Middle-class Radicalism", in Russell J. Dalton &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Bryant, Christopher G. A. (1993), "Social self-organization, civility and sociology : a comment on Kumar's 'Civil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 : 3.
- Calderón, Fernando, Alejandro Piscitelli, and José Luis Reyna, "Social Movements : Actors, Theories, Expectations", Escobar & Alvarez(1992), 19-36.
- Cohen, Jean L. & Andrew Arato(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 MIT).
- D'Anieri, Paul, Claire Ernst & Elizabeth Kier(1990), "New Social Movements in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s*, 22 : 4, 445-458.
- Dalton, Russell J. & Manfred Kuechler(ed)(1990).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ies*. (N. Y. :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 Manfred Kuechler & Wilhelm Buerklin(1990), "The Challenge of New Movements", in Russell J. Dalton &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Eckstein, Susan(1989), "Power and Popular Protest in Latin America", Eckstein(1989), 1-60.
- Eckstein, Susan(ed)(1989). *Power and Popular Protest : Latin American*

- Social Movement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pstein, Barbara(1990). "Rethinking Social Movement Theory", *Socialist Review*, 20 : 1(January), 35-66.
- Equal Allies and Honest Partners(1986). "Exchange of views, discussion : The Communists and New Social Movements". *World Marxist Review*, 29 : 12, 60-72.
- Escobar, Arturo & Sonia E. Alvarez(eds.)(1992). *The Making of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 Identity, Strategy, and Democracy*. (Boulder : Westview Press).
- Escobar, Arturo(1989), "Social Science Discourse and New Social Movements Research in Latin America : Trends and Debates", *LASA XV International Congress*. 1-48.
- Escobar, Arturo(1992), "Culture, Economics,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Theory and Research", Escobar & Alvarez(1992), 62-88.
- Escobar, Arturo and Sonia E. Alvarez(1992), "Introduction : Theory and Protest in Latin America Today", in Escobar & Alvarez(1992), 1-18.
- Foweraker, Joe & Ann L. Craig(eds.)(1990). *Popular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Mexico*. (Boulder : Lynne Rienner Publishers).
- Foweraker, Joe(1990), "Popular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Mexico", in Foweraker, Joe & Ann L. Craig(eds.), *Popular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Mexico*,(Boulder : Lynne Rienner Publishers).
- Frank, Andre Gunder and Marta Fuentes(1987), "Nine Theses on Social Movemen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August 29).
- Frank, Andre Gunder and Marta Fuentes, "Civil Democracy : Social Movements in Recent World History", Samir Amin et al, *Social Movements and the World-System*,(N. Y. : Monthly Review). 139-180.

- Gil, Carlos B. (ed)(1992). *Hope and Frustration : Interviews with Leaders of Mexico's Political Opposition*. (Delaware : A Scholarly Resources Inc.). "Recent Events in Perspectives" 25-70.
- Glyn, Andrew, Alan Hughes, Alain Lipietz & Ajit Singh(1990), "The Rise and Fall of the Golden Age" in Stephen A. Marglin & Juliet B.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Oxford : Clarendon), pp. 39-125.
- Gramsci, Antonio(1971)[1929-35].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l Smith(eds.),(London : Lawrence & Wishart).
- Grayson, George W. (ed)(1990). *Prospects for Democracy in Mexico*.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lishers).
- Habermas, Juergen(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 (Boston : Beacon Press).
- Habermas, Juergen(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Boston : Beacon Press).
- Hall, S. & M. Jaques(eds.)(1989). *New Times :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London : Lawrence & Wishart)
- Hartmann, Heidi, Roberta Spalter- Roth & Nancy Collins(1994), "What Do Unions Do For Women?", *Challenge*, 39 : 4(July-August).
- Hellman, Judith Adler(1992), "The Study of New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and the Question of Autonomy", *Escobar & Alvarez*(1992),52-61.
- Hewitt, W. E. (1991). *Base Christian Communities and Social Change in Brazil*.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irsch, Joachim(1988), "The Crisis of Fordism, Transformations of the 'Keynesian' Security State, and New Social Movements",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vol 10, 43-55.

- Inglehart, Ronald(1990), "Values, Ideology, and Cognitive Mobilization in New Social Movements", in Russell J. Dalton &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Jaquette, Jane S. (ed)(1989).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 Feminism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Boston : Unwin Hyman).
- Jelin, Elizabeth(ed)(1990). Women and Social Change in Latin America. (London : Zed Books).
- Johnston, Hank, Enrique Laraña & Joseph R. Gusfield(1994), "Identities, Grievances, and New Social Movements", inLaraña, Enrique, Hank Johnston & Joseph R. Gusfield(eds.), New Social Movements : From Ideology to Identity,(Philade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 Kauffman, L. A. (1990). "The Anti-Politics of Identity", Socialist Review, 20 : 1(January), 67-80.
- Keane, John(ed)(1988). Civil Society and the State :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 Verso).
- Korpi, Walter(1978).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London : Rutledge and Kegan Paul).
- Kumar, Krishan(1993), "Civil society : an inquiry into the usefulness of an historical ter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 : 3.
- Laraña, Enrique, Hank Johnston & Joseph R. Gusfield(eds.)(1994). New Social Movements : From Ideology to Identity. (Philade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 Lipietz, Alain(1992). Towards a New Economic Order : Postfordism, Ecology and Democracy. (Oxford).
- Lipietz, Alain(1987). Mirages and Miracles : The Crises of Global Fordism. (London : Verso).
- McAdam, Doug(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 Insurgenc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1988), "Social Movements", In Neil Smelser(ed), Handbook of Sociology,(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 McCarthy, J. D. & M. N. Zald(eds.)(1979). The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Mass. : Winthrop Publishers).
- Marglin, Stephen A. & Juliet B. Schor(eds.)(1990).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Oxford : Clarendon Press).
- Melucci, Alberto(1988),"Social Movements and the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Keane, John(ed)(1988). Civil Society and the State :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 Verso). 245-260.
- Melucci, Alberto(1994), "A Strange Kind of Newness : What's 'New' in New Social Movements?", in Laraña, Enrique, Hank Johnston & Joseph R. Gusfield(eds.), New Social Movements : From Ideology to Identity,(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 Mueller-Rommel, Ferdinand(1990), "New Political Movements and 'New Politics' Parties in Western Europe", in Russell J. Dalton &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Nunez Soto(1989), "Social Movements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Revolution, and Socialism", Rethinking Marxism, 2 : 1.
- O'Conner, James(1988) [1993], "Capitalism, Nature, Socialism : A Theoretical Introduction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 이론적 서설]", 이강원 옮김, 공간과 사회, 3호(12월).
- Offe, Claus(1990), "Reflections on the Institutional Self-transformation of Movement Politics : A Tentative Stage Model", in Russell J. Dalton &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Offe, Claus(1985), "New Social Movements :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 : 4.
- Oxhorn, Philip(1988), "Bringing the Base Back In : The Resurrection of Civil Society Under and Authoritarian Regime and Chilean Shantytown Organizations", *LASA*, March 17-20. 1-29. Plotke, David(1990). "What's So New About New Social Movements?", *Socialist Review*, 20 : 1(January), 81-102.
- Przeworski, Adam(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N. Y. : Cambridge).
- Schmitter, Philippe C. (1974), "Still in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F. Pike and T. Stritch(eds.), *The New Corporatism*(South Band : U. of Notre Dame).
- Schmitter, Philippe C. (1977), "Modes of interest intermediation and models of societal change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0, pp. 7-38.
- Schneider, Cathy(1992), "Radical Opposition Parties and Squatters Movements in Pinochet's Chile", *Escobar & Alvarez*(1992), 260-275.
- Scott, Alan(1990).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London : Unwin Hyman).
- Skirbekk, Gunnar(1994), "Marxism and Ecology", *Capitalism Nature Socialism*, 5 : 4.
- Spence, Martin(1993), "The Politics of the Second Contradiction", *Capitalism Nature Socialism*, 4 : 2.
- Steinmetz, George(1994), "Regulation Theory, Post-Marxism,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6 : 1, 176-212.
- Streeck, Wolfgang(1992). *Soci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Studies of Industrial Relations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Newbury Park : Sage).

- Tamayo, Jaime(1990), "Neoliberalism Encounters", in Foweraker, Joe & Ann L. Craig(eds.), *Popular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Mexico*,(Boulder : Lynne Rienner Publishers).
- Tarrow, Sidney(1990), "The Phantom at the Opera :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of the 1960s and 1970s in Italy", in Russell J. Dalton &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Tarrow, Sydney(1989). *Struggle, Politics, and Reform : Collective Action, Social Movements, and Cycles of Protest*. (Cornell Studies in International Affairs).
- Tilly, Charles(1988), "Social Movements, Old and New",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vol 10, 1-18.
- Tilly, Charles(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Mass. : Addison-Wesley).
- Touraine, Alain(1988). *Return of the Actor*.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ouraine, Alain(1981). *The Voice and the Eye : An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uraine, Alain(1977). *The Self-Production of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Ralph H. & Lewis M. Killian(1972). *Collective Behavior*. 2d revised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Wilde, Lawrence(1990). "Class analysis and the politics of new social movements", *Capital and Class*,(winter), #42, 55-78.
- Wilson, Frank L. (1990), "Neo-corporatism and the Rise of New Social Movements", in Russell J. Dalton &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 Wimmer, Ernst(1985). "Ideology of 'New Social Movements'", *World Marxist Review*, 28 : 7, 36-44.

제 3 장

노동운동의 신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

황 석 만*

1. 들어가는 말

해방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많은 분파가 있어 왔지만, 최근까지 한국 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이 노동운동의 중앙 기관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⁶⁸⁾. 하지만, 1987년 6. 29 선언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총과 노선을 달리하는 노조원과 단위 노동조합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반대 세력은 1990년의 전국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의 창립으로 구체화된다. 이 두 갈래의 노동운동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 차이는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여준다. 노총은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랜 연대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서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비노총 단체들은 역사가 짧지만 상대적으로 노총 보다 많은 연대활동의 경험이 있다.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68) 해방 후 한국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전국노동조합평의회(이하 전평)에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을 거쳐 한국노총으로 넘어왔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많은 운동단체들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변천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금수, 박현채(외) (1985).

노총의 사회단체, 사회운동과의 연대⁶⁹⁾의 역사는 창립 직후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70년 이전은 극히 미미하였고, 70년대에 들어서 여성부문을 통해서 서서히 나타나며 80년대, 구체적으로 박종근 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운동 단체 등과의 연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한국 노총의 역대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80년대 이전에 있어서는 노총과 어떤 종류의 관련이라도 맺고 있었던 사회단체들이 언제나 같았는데⁷⁰⁾, 이는 노총이 80년 이전에는 극히 소수의 사회단체와만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총이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를 시작한 것은 80년대, 특히 6. 29 선언 이후이다. 이는 각종 사회, 시민 단체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생겨난 것을 감안하면 노총의 연대와 시민사회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⁷¹⁾.

이러한 노총과는 달리, 1990년에 창립된 전노협은 출범부터 정부에 의해서 법외(法外)단체로 규정되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⁷²⁾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 사회단체와의 연대속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하지만 전노협의 연대 사업은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여가는 호혜적인 관계였다기 보다는 노동운동을 보호하려는 다른 단체들의 도움을 주로 받는 입

69) 사회 운동에서의 자원의 크기가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다는 자원동원론자(Tilly 등)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운동 단체와의 연대 외에도 기존 사회 단체와의 협력, 교류, 사업 참여 등도 의미를 갖는다.

70)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체는 여성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여협과 YWCA이다.

71) 한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 이전에 창립된 주요 사회단체는 YMCA, YWCA, 흥사단 정도를 꼽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나머지 8개 단체는 80년 이후에 생긴 단체이고 연구 대상외의 수많은 단체들이 8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연세 대학교 사회 발전 연구소, 1994).

72) 정부가 이러한 단체를 법외(法外) 단체로 규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 바탕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노동조합법 3조 5호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정치적인' 문제에까지 노조가 간여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후자가 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라고 평가되고 있다.

장에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일방 수혜적 연대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생존이 중시되는 절박한 상황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노협의 연대 사업은 다시 전국 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에 의해서 계승되며 이것은 다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글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노총과 비노총 계열 노동단체(전노협, 전노대, 민주노총)의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입장이 나오게 된 한국 노총, 재야 노총과 사회단체와의 역대 연대활동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연대의 형태와 내용의 변화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연대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각 조직의 연대활동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업보고서」를 주 자료로 분석하였다. 노총과 전노협의 사업 보고서는 매년 대의원대회를 위하여 발간되며 양 조직의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 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하고 관계자를 면접하여 보충하였다.

2. 한국노총의 사회운동과의 연대

노총의 이념 지향을 보여주는 몇몇 문건들은 노동운동의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노동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1995년 2월 23일 개정된 노총의 10개 강령 중 한 항목이 직접적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고 다른 한 강령은 간접적으로 연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곧, 강령 10에서 “우리는 국내외의 모든 민주적 운동 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강령 4에서는(노동운동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과 공해 없는 맑은 생활 환경을 실현해나간다”고 밝혀 노동운동이 환경운동 등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곧,

공해는 단순히 노동자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에 대한 강조는 노총 규약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4조 7항), 국제 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공헌(4조 10항)이 노총의 목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노총 발간 책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듯이, 노총은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확보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잇따라 나온 여러 문건들은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연대 내용, 방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90년대라고 해도 초기의 문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타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한다는 정도에서 머무르는데 반해서 93년 3당 합당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사회개혁, 환경보호 활동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1990년에 나온 “한국 노총의 사회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연대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환경, 여성, 시민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지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정치적 투쟁, 참여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94년의 문건 “2000년대를 대비한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 방침” 등에서는 노총의 목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타 운동과의 유대 강화를 선언하고 있다. 이 문건은 노총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곧,(노총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민주세력으로서의 책무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서 “국내외의 타 대중운동과의 유대를 깊게 하고, 국제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가 필요한 이유로 국내 정세의 변화를 들고 있다. 이 문건은 당시에 “민주주의를 위한 선도 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국민대중은 노동조합을 다양한 이익단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 노력의 하나로 타

사회운동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총의 입장에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은, 첫째는 노총이 “다른 사회운동과 차별성을 갖고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확보” 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언급이 없는 것이다.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제 사회단체와의 차별성은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강고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입장인데, 만약 단기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다른 운동과 많은 마찰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사회의 민주화, 삶의 질의 고양과 같은 장기간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추구한다면 보다 쉽게 사회운동과 연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총의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다른 한 측면은 노총의 문건들이 사회운동과의 연대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연대해야 할 구체적인 운동 내용은 제시되어있지 않고, 제시되어있다하더라도 좁은 목표에 한정되어 있다. 그 예로 여성운동과의 연대의 목표는 주로 여성의 노동권 확보, 곧 남녀 고용 평등이 목표인데 그 외의 여성의 고유 문제들인 차별적인 성역할, 가족 내 여성의 지위,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95년의 “자주. 민주. 개혁! 노총의 도약”과 같은 문건은 앞선 문건보다 진일보된 측면을 보여준다. 곧 대국민 연대활동 강화에서 “경제 투쟁에서 나아가 민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선언하면서 “노동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를 위해서 “제 사회단체 및 국민 대중과 굳게 연대하여 사회개혁, 농촌 봉사활동, 환경보호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겠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문건에서도 아직 사회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여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노총의 연대에 대한 두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1) 사업 보고서로 본 노총의 연대활동

노총 활동을 살펴보면, 80년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운동과의 연대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87년의 정치국 신설 당시 노총이 경제 조합주의로서 사회에 기여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비판하며 노조 활동의 지평을 넓혀야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노총이 다른 운동과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는 88년 이후이다. 88년 이전에는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 없이 노사정 공동 발표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정도였고, 이외에는 정부기관, 신문 방송 등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렀다. 88년 이후에는 연대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해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노총의 기구에 정치국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정치에 대해 극히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를 담당할 기구도 없었는데, 정치국의 신설은 그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노총의 변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다.

88년 이후 늘어나는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는 주로 정치활동과 여성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였다. 하지만 8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은 88년 이전에는 노총이 주로 외부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주였다면, 88년 이후에는 간간이 노총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심포지엄 등을 조직하고, 사회단체를 초청하는 행사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연대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88년 이전 시기에는 정부의 정책, 방침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던 것에 비해 88년 이후에는 정치 사회개혁활동 등에서 정부와 대립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활동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와 같은 비교적 진보적인 단체와도 연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발견이 된다.

이러한 노총 연대활동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정부와 비(非) 대립적인 것이다. 1991년, 1992년에 노총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여할 때 노총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적 제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1993년 평화통일 기원대회 개최시 ‘인간띠 잇기 운동’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불허 방침이 있자 운동전개를 멈췄는데, 이는 노총의 정책 기조

가 정부와 비(非) 대립적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노총의 운동 방식은 조직원을 동원하여 시위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 대신 대부분 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타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다음에서는 노총의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정치부문, 사회부문 그리고 여성부문의 세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에서는 노총의 연대활동을 학회 등을 포함한 민간 단체와의 활동에 국한하여 살펴보겠다.

(1) 정치부문

과거 노총은 정치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이거나 정부의 강력한 영향권하에 있어서 독자적인 정치적인 발언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노총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발언을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다. 이 해 노총은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정치활동을 선언한 이후 정치국을 신설하고 노총 중앙 정치위원회 및 각급 조직 정치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시의 현안 문제였던 정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각 정당과 각종 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및 공동 협력활동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노총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활동을 한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현재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⁷³⁾

구체적인 연대활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노총에서 전개한 1989년의 “80년 정화, 부당 해고,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 활동” 과정은 노총의 정치 연대활동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노총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른 피해자 단체나 정당과의 연대속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독자적인 활동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개인적으로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있었지만, 다른 단체와의 연대속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까지도 노총의 입장은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속에서 정치 현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님

73) 노동조합법 12조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참여에 관한 1988년 노총의 입장은 1990년에도 확인된다. 곧, 노총은 노조의 자주적 정치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노조의 제 민주 사회운동과의 연대 강화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는 것을 명확히 재확인(1990년 10월 12일, 노총 특보 : 노조의 정치참여 방안) 하였음에도, 다른 사회운동과의 구체적인 연대를 시도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선언적인 차원에서 그쳤다.

이러한 입장에 선회가 시작되는 것은 1990년의 3당 합당과 1991년 지방 자치제 선거 시기이다. 3당 합당은 노총이 여소 야대의 4당 체제하에서 정당을 통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왔던 기존의 노선에 커다란 좌절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합당으로 강대해진 여당은 더 이상 노총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1년의 지자체 선거는 영향력 상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노총으로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

91년 노총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지방 자치제 실시를 맞아 노동조합의 자주적 정치활동의 적극적 전개를 통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 풍토 쇄신에 앞장설 것과 우리 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조직역량을 총집결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총 단독 활동이 아닌,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험)를 발족, 공명선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91년 1월 10일 제 1차 노총 중앙 정치위원회를 열고 이 땅의 진정한 정치·경제·사회 민주주의의 확립과 참다운 민주 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금년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노총의 자주적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 민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국민 공명선거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적으로 불법·부정선거 사례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실련을 비롯한 8개 단체와 공동으로 공선험를 발족 활동을 전개하였다.⁷⁴⁾ 노총은 이러한 연합모임에 참석하는 외에 자체의 공명

74) 91년 1월 23일 노총 경실련 성명 발표/ 2월 7일 공선험 발족(노총위원장 공동대표 추대)

선거 실천 홍보단을 발대시켰다. 노총은 4월 22일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 촉구대회를 노총 강당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⁷⁵⁾ 이러한 기조는 92년도의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서도 계속된다. 노총은 스스로 92년의 “정치활동은 89년 이후 전개 하여온 노조 정치활동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개하였다”고 사업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동안의 공선험 활동⁷⁶⁾ 등을 통한 활동이 노총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노조의 정치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규제 법률과 노조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의 불 인식으로 인해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무리였고 또한 내적으로도 노조 정치활동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이 다소 미흡했고,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정치, 사회운동에 대한 조직적인 인식이 다소 불충분” 하였다는 보고는 자신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노총, 1993).

그동안의 노총의 정치활동이 대정부, 대국회, 대정당활동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컸었던데 비해 93년 들어 오면 노총의 정치활동, 사회활동이 이전에 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범위 역시 상당히 다양해진다. 이는 이 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정치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에는 노총과 사회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어지면서 연대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93년 노총의 정치활동은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이념을 실천하는데 주력하였다”(노총, 1994). 이러한 활동은 대선 이후 정부가 노총에 대한 협조를 어느 정도 철회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75) 흥미로운 질문은 지난 95년 노총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정부의 반대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왜 91년과 비슷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대 시위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76) 공선험은 92년 총선을 앞두고 600여 시민단체로 확대되었다. 참가단체 중 최대 조직인 노총은 “독자적인 공명선거 활동보다는 공선험과 연대하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노총에서는 박종근 위원장이 상임공동대표로, 이광환 정치국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자위원회 위원장에 이종복 위원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를 노총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노총의 대외 교섭 활동 중 가장 활발하였던 정당 교섭 활동은 93년 들어 다소 미흡하게 전개되었다. 즉 대선 이후 고착화된 양당 체제하에서 노총의 운신의 폭은 과거 여소야대나 3당 체제에 비해 협소해진 것이 사실이다. 93년에 노총은 이러한 정치권과의 협소해진 활동의 영역을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보전해 나갔으며 활동의 방향을 일정 부분 전환하여 나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제 사회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활동의 성과를 보인 해였다. 다만 이러한 정치활동이 조직의 역량을 충분히 담보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활동의 영역확장에 있어 조직내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였다”(노총, 1994). 하지만 이 시기에 노총이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치적 현안에 참여한 뚜렷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기조는 1994년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간다. “전체적으로 94년도 노총의 정치활동은 정부나 정당과의 교섭활동보다는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이 돋보인 한 해였다. 특히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활동이나 정신대 대책활동 등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영역을 사회 일반에까지 확대시킨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중앙 단위의 정치활동에 병행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과 노조 간부의 자세 등은 앞으로 계속 교육하고 계몽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노총, 「94년 노총 사업보고」, 54).

이 시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사회단체 활동에 노총이 참여한 것으로서 평화통일 기원대회에 참석한 것을 들 수 있다. 1994년 ‘남북인간띠잇기대회본부’를 중심으로 60개 단체가 참여하여(박종근위원장은 고문으로 참여) 8월 15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인간띠 잇기대회를 구상했으나, 정부측의 자체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기원대회만 개최하였다.

이렇듯이 정치부문에서의 노총의 연대활동은 정치적인 조건이 보다 관용적이 되어지자 활발하게 되었고, 3당 합당 이후의 노총 배제적인 정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단체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총은 합법적인 부문에서의 운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

(2) 사회부문

3당 합당 이후 정치권의 노동운동과 노총에 대한 푸대접은 역설적으로 노총의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여소야대라는 4당체제에서는 여야가 노총을 정치행위 과정에 끌어들이고 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서 정당과의 교섭외의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지만, 3당 합당 이후 정부 여당은 노동운동과 노총에 양보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 노총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부문의 현안에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연대 사업은 노총의 사업 보고서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사업 보고서의 체제를 따르면, 노동자의 권익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회부문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나누어서 살펴 보겠다.

사회부문에서의 중요한 사회단체와의 연대는 1993년에 처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개혁 촉구 범 국민대책회의’ 구성에 참여한 것이다. 노총은 경실련과 함께 “현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근본적인 경제체도의 개혁에 있다”고 보고 “이땅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경제개혁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도적으로 제안한다. 이에 23개 시민·종교·여성단체가 참여하여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였다. 이 ‘대책회의’의 주된 목적은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 불로 소득자에게 유리한 조세제도 전면 개혁, 사회 복지 제도 대폭 확충, 실질임금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노총, 1994).

이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정사협)’가 창립되는데, 여기에는 한국노총, 경실련, 흥사단 등 39개 단체가 참여(박종근 노총 위원장 상임공동대표에 피선) 한다.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공선협’ 활동 단체들이 모체가 되어 ‘정사협’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활동 내용은 ‘재산공개 비리의혹 진상조사 및 금융실명제 실시 촉구’, ‘국회 활성화와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대회’ 등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자정을 위한 기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 ‘깨끗한 정치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의 토론회 개최와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안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총은 이러한 연대활동이 “노동운동이 중산층 및 사회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고 사회 각계 각층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힘만으로는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총은 “현실적 인식과 일정하게 진행되는 개혁을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다. 정의사회는 궁극적으로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도 일치함으로 전조직적 역량을 기울여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총, 1994 : 443-448).

다른 활동으로는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에 노총이 참여한 것과⁷⁷⁾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활동, 그리고 ‘경제계 자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다.⁷⁸⁾ 이러한 활동은 노총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1994년에도 계속되어진다. 노총은 UR로 인한 농업 개방, 농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 농업 지키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한다. 그동안 93년에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쌀과 기초 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일회적인 활동이 아

77) 총 166개 단체가 참가함. “쌀시장 개방문제가 국민경제와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 뒤 196개 단체가 참여하여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하고 구체적인 국민행동 요강까지 합의함 (노총, 「'93년 노총 사업보고」, 448-451).

78) 노총에서 ‘정사협’과 공동 주최로 “기업비리 척결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기업비리의 실태와 그 척결 방안의 모색으로서 참가자는 경인지역 노조 간부 및 각 사회단체 참가자 130여명이었다. 이는 “기업비리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노총, 「'93년 노총 사업보고」, 470-471).

나라 장기적인 범국민운동으로서 통일 집중적인 운동이 한층 더 강하게 전개 되어야 하고 아울러 각계 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수렴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체가 상설적인 형태로 존재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6개 단체가 ‘우리 농업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결성 하였다. 여기에 노총 박종근 위원장이 고문단에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에도 노총 위원장이 공동 대표로 참석하는 등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⁷⁹⁾ 또한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의 주관으로 개최된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이라는 행사에 22개 장애인단체와 24개 사회단체와 5개 학생단체가 참여하는 운동에도 노총이 참여하기도 하여서 보다 다양한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1995년에 이루어진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와의 연대활동은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국과 일본간의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여성문제와 강제 노동이라는 여러 측면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운동이 과감하게 앞서서 연대를 조직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노총의 노선에 일반적으로 비판적이라고 평가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과 같은 단체가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운동의 자원이 운동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 여러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와 노총이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87년 이후 노총이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크게 강화하였고, 여러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대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과의 결합도 찾아 볼 수 있었다.

79) 이 단체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무노련),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가 참여함.

(3) 여성부문

여성부문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활발히 연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최근까지 대부분 외부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또한 대부분 행사가 노총의 여성국(부녀부에서 승격)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 행사들이 노총의 주요 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70년대 이전에는 노총과 다른 사회운동 단체의 연대 사업이 대체로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성정책 사업, 예컨대 가족 계획 사업, 새마을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만을 보여 주었다⁸⁰). 활동 내용을 살펴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개선, 여성 노동자들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주의 환기 및 법 개정 등에 주력하여 왔다. 이외의 활동은 정부, 사용자, 사회단체 등에서 노총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여러 정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87년 이후 변화를 겪게 되는데, 중요한 변화는 과거에는 몇개의 한정된 여성과 관련된 단체와 연대활동을 했었는데, 87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단체와의 연대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과 관련된 시민운동 단체가 많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에서 이러한 변화를 노총의 참여와 연대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71년 이전에는 여성부문에 있어서는 자체 활동조차 거의 없었다. 하지만, 1971년부터 ‘부녀 및 연소자 노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부문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의 연대활동은 노총에서 일반적으로 여협과 YWCA와 같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당시 여성단체와 노총이 ‘총력안보대회’와 같은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노총의 여성담당 부서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드러낸다. 노총의 여성국은 극히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노총의 정부와의 협조적 관계 유지 노력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울 갖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 여성활동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80) 이 보고서에서는 각 단체 주최로 진행된 사업중에서 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활동들이라도 행사의 주체가 민간 단체일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측면은 노총과 주로 협력한 단체-앞서 언급한 여협과 YWCA-를 넘어서는 대한부인회, 어린이 복지사업회와 같은 사회단체,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여대의 연구소와 교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미래 연대 사업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여성부문에서의 연대는 다른 부문 보다 연대 확산이 조금 늦어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부문에서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⁸¹⁾ 1990년에 이르면 노총 여성국의 다양한 단체의 심포지엄 참석은 물론 자신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치적이거나 정부와 대립되는 문제도 다루게 된다. 이 시기에 오면, 과거에 비해 여성국이 여협이나 YMCA와 같은 단체외에도 정치단체나 정부와 비타협적이었던 여연과 같은 단체 등과도 연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다루는 주제도 다양해진다.

여성부문에서의 연대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대활동을 보이고 있다. 연대가 보다 활발해지는 시기도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고 그 결합 정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90년대의 노총내의 여성국의 활동은 다른 단체의 행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데서 서서히 능동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행사를 주관하여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시기의 다른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정치 및 사회부문)에 비해서는 미약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비노총 계열의 사회운동과의 연대 : 전노협을 중심으로

1990년에 창립된 전노협은 시작부터 정부와의 대립적인 구도를 유지하였고, 정부에 의해서 법외 단체로 규정되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

81) 이 시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 3-1>을 볼 것.

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⁸²⁾ 이러한 전노협의 연대 사업은 다시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 의해서 계승되며 이것은 다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부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⁸³⁾ 이러한 연대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노협의 이념 지향을 살펴 보고 전체 사업 내용과 연대 사업을 시기에 따라, 그리고 주제에 따라 분석하겠다.

1) 전노협의 이념 지향

전노협은 창립 선언문과 강령에서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그 내용은 44시간 노동으로 생활급, 고용안정 제도, 단체 행동권 등 노동자의 제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강령 6항(노동자와 전 민중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제도적, 정치적 개선을 쟁취한다)과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제 민주 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는 강령 제 11항은 전노협이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이 강령에서 다른 특기할 사항은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⁸⁴⁾ 12개의 강령중에서 두 강령에서 여성과 관련된 것이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제 2항(...남녀간... 차별 임금을 철폐하고...)과 8항(...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와 모성 보호를 위해 투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항목이라고 평가된다. 흥미로운 것은 “퇴폐적인 외래문화 척결과

82) 전노협은 1990년 400여개 노조, 약 19만 8,000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다고 밝혀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1993년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가입 조합과 조합원수는 출범 당시에 거의 절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상근자수 역시 유동적이었는데, 1990년에 약 30-40명정도, 1995년 현재는 2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83) '94 전국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 수련대회 자료집 (1994), 김진균(1995).

84) 노총의 경우에는 여성과 관련된 조항이 강령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민중문화 확립”(강령 9항)과 같은 문화와 관련된 대 사회적 조항도 강령에 나타나고 있다.⁸⁵⁾ 이와 같은 전노협 의 이념은 다른 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 확대함을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보고서로 본 전노협의 연대활동

90년 출범한 전노협의 중점 목표는 자본과 정권의 집중적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수호하는데 있었다. 훼손된 조직력을 복원하고 일상적인 대중사업 강화와 공동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생활조건 유지·개선, 탄압 저지와 노조 활동의 자유 쟁취, 조직의 확대·강화와 민주노조 진영의 통일·단결의 강화, 노동자의 정치역량 강화와 민중진영 내부에서의 전노협의 지위강화,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91년 활동내용은 공동임금 인상투쟁, 고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장례투쟁 - 한진 중공업, 전노협, 대기업 연대회의, 전국 업종 노동조합회의, 전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전국 노동단체연합 준비위 등 6개 단체로 ‘고박창수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노동운동 탄압 분쇄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 구성,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 전국적 대중규탄대회, 장례투쟁진행,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이 있다.⁸⁶⁾ 이는 전노협이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환경 개선이라

85) 노총의 강령과 비교하면 여성조항 외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곧, 시민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조가 노력한다든지, 공해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단지 전노협 측의 강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86) UN가입과 ILO가입의 계기와 92,3년 권력 재편기의 정세의 유동성이라는 객관적인 조건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이 고양되면서 민주노조 진영의 조직적 공동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총책임금제도입,

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92년 사업계획에서는 ①전노협 조직의 정비 및 확대·강화, ②공동 임투를 통한 임금억제 정책의 분쇄와 생계비 확보, ③공대위의 확대·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노동운동 탄압분쇄 및 노동법개정 투쟁의 전개, ④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⑤노동자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민중연대 강화 라는 5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한데서도 나타난다.

처음 2년간 사업의 중심이 전노협 조직 사수에 있었다면 창립 3년째를 맞이하는 92년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조직의 발전과 민주노조 진영의 총단결의 강화라는 방향 속에서 사업의 영역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 조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전노협의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과 이에 근거한 조직 발전 전망을 수립하였으며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공대위 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전노협, 1995) 또 ILO 등에 대한 국제 활동과 국제 자유노련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전노협의 국제적인 지위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전노협 가입 조직은 축소되었지만 광범위하게 확대된 민주노조 진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내고 결집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성과가 아직 구체적인 조직 강화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시기의 사업 내용은 임금인상투쟁, 노동법개정 투쟁, 고용보장 투쟁, 민중연대 투쟁사업으로 앞선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요 목표들은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하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정부와 맞서기 위해서는 당연한 활동이었다고 보여지나, 다른 운동단체와의 연대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가는 연대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민중연대 투쟁 사업도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단순히 시위를 지원하거나, 성명서 발표 등으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93년에 접어들면서 전노협의 운동이 조금씩 노동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

시간제근로의 도입 등 대부분 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개악내용이다. 이는 노동기본권 보장과는 반대의 방향이다.

제에 관심을 보다 많이 갖게 되는데, 93년 상반기에는 임금투쟁과 총액임금제 저지투쟁이 중점적으로 전개되었고 하반기 들어 노동법개정투쟁이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속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고용 불안이 전면화된 노조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나마 진행되었으며 부분적으로 공동 투쟁이 진행되었다. 또한 주요 노동 현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활동이 없었던 산업 안전, 산재 방지를 위한 활동이 강화되었는데, 이 산업 안전 보건사업은 단위 사업장 및 지역에서 산업 안전 보건활동을 확산,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⁸⁷⁾

전노협의 연대활동은 크게 노동문제에 관련된 연대활동, 정치활동과 관련된 연대활동, 경제적 생활 조건에 관련된 연대활동, 사회문제등과 관련된 연대활동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나뉘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기로 구속된 노동자에 대한 항의를 할 경우 그것은 노동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한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전노협은 내용과 활동 방식에서 노총과 큰 차이를 보인다. 노총은 주로 항의 방문, 토론회, 조사 결과 발표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항의하는 데 반해서 전노협의 방식은 꾸준히 '대회'라고 불리우는 시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곧, 노총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반해서 전노협은 출범 자체가 정부로부터 비합법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 후의 활동에서 합법, 비합법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그 기초를 크게 바꾸지 않고 있지만, 점차 공청회, 조사 자료 집 발간과 같은 '비시위성' 방법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전노협의 활동은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전노협의 연대활동을 크게 노동, 정치, 경제·사회, 여성 등의 영역으로

87) 산업 안전 보건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부 지역 연대모임 간담회 진행 / 제 1회 산업 안전 보건활동을 위한 전국 노조 간부교육 /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 / 대책사업-수지접합술 인 정기준 철폐투쟁, 요통환자 치료 종결 지침에 대한 대책사업, 무재해운동에 대한 대응 / 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 추진사업 등.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노동 부문

노동문제에 관련된 연대활동은 전노협이 주요 활동에 타 단체들이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대활동의 특징은 주로 외부의 단체에서 노동운동이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곧, 노동문제에 관한 현안이 있을 때 다른 사회단체가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실제 노동문제와 관련된 연대의 내용이다.

1990년의 주요한 연대는 전노협 지원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와 KBS, 현대중공업(이하 현중) 노조탄압 분쇄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활동이 있다. 전노협 지원은 국민연합이 결성되기 전에 있던, 전노협 지원 공대위가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업무조사 등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노동부 항의방문을 하고 노동운동 탄압공청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또한 ‘노동운동 탄압비상대책위원회’(국민연합 산하에 임시기구로 구성)를 구성하여 KBS, 현중탄압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 기구는 KBS와 현중파업을 계기로 당국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13개 업종, 국민연합, KBS지키기 시민모임, 언론관련 단체들이 구성한 것으로서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하였고 언론 민주화와 국민의 방송을 위한 걸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93년의 경우, 고용보장 투쟁을 전노협,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이하 노운협),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자회), 민정련, 전국노동단체연합준비위(이하 전국노련), 수도권연석회의 등 단체가 연대하여 벌어나갔다. 주된 활동 내용은 ‘고용불안 없는 일터와 고용보장제도 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고용보장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전노협, 시설노협,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무금융노련), 여연 등이 참여하여 ‘용역노동의 실태와 대응’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전노협의 고용특위에서는 여성민우회, 여노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교육협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파견법 반대 대자보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민변 변호사

들이 고발 대리인으로 결합하여 ‘불법 근로자 공급 사업’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였다. (전노협, 1994)

1994년에는 임금투쟁과 노동법개정 투쟁(이하 노개투)이 주요 연대 사업이었다. 임금투쟁 활동 내용은 전지협 등 노동 진영의 투쟁에 대한 민민진영의 연대투쟁이었다. 94년 6. 23 전지협파업과 6. 27 전노대 차원의 연대 파업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을 포함한 지원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6월 18일에 지하철 주최, 공대위가 함께 700여 노동와 시민이 참여하여 탑골공원에서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7월 1일에는 전국연합 주최로 종묘공원에서 전지협 등 1,500여명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운동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연대활동에 대해 전노협 내부에서는 과거의 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실제 연대 정도는 부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곧, “5월 1일 노동절대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연합과 결합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전국연합이 지원공대위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간 전국연합이 기층 대중조직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다소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노개투에 대해서는 민민권에서 5. 1대회나 11. 13대회에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사안별로 아주 협소하게 결합하는 것 외에 예년에 비해 오히려 투쟁에 대한 결합도가 떨어졌다” (전노협, 1995)고 본다.

(2) 정치 부문

전노협은 ‘민자당일당독재 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의 한 가입 단체로서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1990년 출범부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 활동은 반민자당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시위, 유인물 등을 통한 홍보활동 등이었다. 1990년에는 3당 합당에 대한 반대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2월 24,25일 반민주야합 분쇄 국민대회를 열었는데, 목표는 3당 통합의 반민주, 반민중성을 폭로, 규탄하며 3당 통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조직함으로써 반민자당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노협·전국교직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을 극복하고 연대투쟁으로 상반기 대중투쟁을 활성화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투쟁 방식은 사전 홍보(대회선전을 위한 포스터, 유인물, 각 단체 기관지를 통한 홍보활동)를 거치고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동시 대국민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5. 9민자당 창당 규탄투쟁을 벌였는데,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의 기치 아래 반민자당투쟁을 대중화하고 민자당을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국민연합을 국민적 투쟁의 구심으로 부각시켜내고자 노력하였다. 투쟁 방식으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집회, 전국 동시 다발의 가두시위, 구성 단체별 대중총회 개최 후 결집, 국민행동지침 발표 및 대회 후 농성 등을 활용하였다.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광주항쟁 계승투쟁을 벌였다. 반민자당 투쟁 노태우 퇴진투쟁을 중심축으로 하고, 물가·주택 등 대중의 실질적 요구를 대중투쟁력으로 현실화, 진상규명 학살주범 처단없는 광주보상법안 반대, 국민연합의 대중적 지지와 결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때는 투쟁 방식을 조금 달리하여, 각 부문, 지역별로 순례단을 조직하여 광범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에 따라 학생, 노동자, 청년, 교사, 시민단체 등 3만명의 순례단을 조직하였다. 그 후 6. 10 민주항쟁 계승투쟁을 벌였다(공식 명칭은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6월 민주항쟁 계승 국민전진대회’). 이를 통해 상반기 대중투쟁을 반민자당 투쟁으로 총괄하여 지역과 부문의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운동 방식으로는 전국 동시 다발로 9일 실천대회, 10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연대활동이 보여주듯이 연대활동은 국민회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곧 국민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일사 불란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 연대활동은 개별 단체로서의 특성보다는 국민연합의 한 가맹 사회운동 단체로서의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91년에도 수많은 시위 및 집회를 국민연합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벌여나갔다. 수서비리 은폐 정권 규탄 국민대회, 비리주범 노태우정권 퇴진 제 2차 국민대회, 고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결의

대회, 백골단·전경 해체 및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단위 사업장별 결의대회 후 파업, 1차 국민대회, 고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규탄과 폭력통치 종식을 위한 전국노동조합 총력투쟁, 제 2차 국민대회, 공안통치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3차 국민대회, 6. 10항쟁 계승 및 노정권 퇴진 제 5차 국민대회,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책적인 연대도 있었는데, 정책실 단위에서 국민연합 민중생존권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주택문제 정책자료집」, 「의료보험 제도 문제점」). 국민연합 정책위원회와 전국연합 건설을 위한 정책위원회에 참여하여 "국민연합 91년 사업방향과 과제", "전국연합 사업기조와 방향"을 제출하였다.

1992년에는 국민연합이 전국연합으로 바뀌면서 전노협은 전국연합에 가입한다. 이후 전국연합의 연대활동은 전국연합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 해 이루어진 활동은 민자당 심판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국민회의 발대식 및 공정선거 쟁취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총액임금제 지원투쟁 조직(연대서명 조직, 한겨레 신문 광고투쟁 조직), 전노협 투쟁에 참여 조직하기(세계노동절기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국연합 민주대개혁안을 작성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노동자의 주요 요구와 여성문제, 산업안전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반영하였다. 이 해 있었던 총선 등 정치방침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요구를 제기하였으나 후보초청토론회, 정책토론회, 강연회 등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민중진영의 선거연합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따로 제안하지 않고 전국연합 선거대책본부 및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연합에서 합의하여 상정된 전국연합 후보 및 전국연합 지지 지원후보에 대한 선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머물렀다. 또 전국연합 후보나 지지 지원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거의 없었고 지역 임투본부에서 사람을 지역의 선거대책본부에 공식적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중앙차원에서는 물가, 정치, 경제, 사회문제 폭로와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 행동지침 등을 담은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역별로는 흥

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유세장에도 결합하여 선거투쟁을 진행하였다.

1994년에는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제) 선거대응이 주요한 활동이었다. 전노협 차원에서 지자제 논의를 상임집행위원회(이하 상집)과 대표자회의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갖지 못하고 민주노총준비위차원으로 사업계획 전체를 넘겼다. 지자제에 대한 준비작업시 전국연합차원에서 ‘제한적 독자 후보방침’을 결정했으나, 노동진영에서는 방침이 거의 없었고 기본적인 사업 재배치도 되지 않았다. 앞선 시기와 달라진 정치활동은 통일 투쟁이었는데, 94년 하반기에 발족된 ‘자주 평화 통일 민족회의’에 전노대 대표자가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전노협 차원에서도 조직가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노협은 범민족대회 개최에 참여한 바 있다. 전노협 차원에서는 범민족대회 노동자추진위원을 파견하고 노동진영에서 4,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범민족대회 및 통일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거나 실천방향이 중앙과 각 지역에서 수립 집행되지는 않았다. 남북 정상 회담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정세가 남북대결국면으로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무차별하게 자행되는 노동단체 및 노동진영에 대한 탄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조직된 시국선언 및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으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언론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관련 연대활동에 대한 91년의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전노협의 자체 평가는 다른 시기의 사업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해 전노협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도부와 일반 조합원과의 괴리이고 다른 하나는 전노협이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보다 전체 운동을 이끌고가는 전략이 부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치투쟁에서 전노협이 중심이 된 민주노조가 전국노동조합비상대표자회의, 전국 총파업 투쟁 등을 전개하며 참여한 점은 투쟁이나 조직의 면에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참여한 층이 대부분 노조간부를 위시한 선진층⁸⁸⁾이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중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했고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목표를 바탕으로 못하고 전반적인 정세의 고양에 따라 투쟁 수준만 높아져서 노동자의 투쟁전선과 전체 전선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전노협, 92) 또한, 전노협이 정치 투쟁에서 민중진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전노협의 조직적 한계와 민중연대 사업에 대한 전노협의 방침이 부재했던 것을 지적한다. 곧, 5·6월 투쟁에서 물가, 주택, 구속자 문제 등 민생민권적 요구를 보다 전면적으로 내걸었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전노협이 앞장서서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민생민권의 문제를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전노협, 92) 결국 전노협 정치 투쟁의 중요한 장애 요인은 지도부의 의식과 일반 조합원과의 의식의 괴리, 조직적인 통일성의 괴리 등이다. 다시, 이것의 원인은 정부의 탄압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부터 조합원간의 연대성 부족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은 다른 글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경제 및 사회부문

전노협은 물가와 주거 그리고 노점상 문제 해결, 그리고 농민과 연대하여 추곡 수매가 인상운동 등을 펼쳐왔다. 1990년에는 국민연합의 물가폭등, 토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는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에 바탕하여 대중투쟁을 통하여 반민자당투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철거민, 노점상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며, 국민연합의 국민적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본부 구성과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였다. 요구사항은 임대료 동결, 임대차 등록제 실시, 재벌 토지 환수, 서민 택지 확보, 영구 임대주택 대량건설, 부동산 투기근절, 토지주택 소유실태 전면공개였으며, 사용한 운동 방식은 전국 동시다발 대회, 각 부문현장에서 활동 후 기층민중 밀집지역에서의 공동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 또한 ‘5·6 주거문제 희생자 추모제’를 통하여 주택 문제가 민자당의 반민중적 정책의

88) 일반 조합원이 아닌 활동적인 노동조합 관련자들을 의미함.

결과임을 폭로하여 반민자당 투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철거반대 투쟁 및 노점상 자립법 쟁취투쟁을 국민연합과 연대하여 수행하였다. 1993년에는 쌀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농민과의 공동 투쟁의 내용과 고리를 확보해냈다. (노충, 1995 : 144)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대활동은 역시 주로 국민 연합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는데 KBS 방송 민주화 투쟁, 경제 부조리에 대한 투쟁,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수입개방 저지 투쟁, 의료보험 제도 개선, 언론개혁, 성수대교 붕괴 및 부패무능 정권 규탄대회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KBS 방송 민주화 투쟁은 사장 서기원 퇴진 및 민주방송 쟁취로 집약되는데, 노조집행부 재건, 경찰력점거규탄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 KBS투쟁은 방송장악 음모에 맞서는 투쟁의 시발점이었는데, 언론민주화운동 승리의 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연대운동의 형식과 목표가 마련되지 못했다. 투쟁의 배경과 목표에 대해 민민운동 일반의 이해는 사실상 일천한 것이었고 'KBS지키기 시민회의'는 사실상 대중운동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및 구속진상 규명대회는 재벌 부동산 투기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에 사실을 은폐하려는 노정권의 비도덕성 폭로하는 것이었다. 비상시국회의 성취를 위한 공동사업전개, 구속자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사립학교 개악, 교원지위법 제정 및 해직교사 복직투쟁을 타 단체들과 연대하여 수행하였다.

1994년에는 수입개방 저지투쟁을 벌였는데, UR협정서 조인반대투쟁과 UR국회비준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전노대 차원에서는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운동 방법은 각종 집회 참여, 대표자 철야농성, 투쟁기금 모금과 조합원 교육, 서명운동 등을 사용하였다. 전노협 차원에서도 조직적인 참여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전노대 차원에서는 전농투쟁기금 모금운동 전개하였고, 11월에는 조합원 농촌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전노협에서는 본부와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농활에 참여하였다.

이 해에는 의료보험(이하 의보) 연대회의와 연대를 하기도 하였는데, 의보 연대회의에 전노협차원에서 94년 하반기부터 조직적인 결합을 시도하기 시작하였고 전노협차원에서는 민주노총준비위와 함께 집행위원을 파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의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노동조합 위원장단 서명을 민주노총 준비위와 함께 실시하고 지노협 설명회 조직을 위한 사업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제조업 노동자들 사이에 의보투쟁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씩 높여가기 시작하였고, 의보통합 일원화촉구 집회에 민주노총준비위가 함께 결합하여 활동하였다. 하지만, 전노협에서는 조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운동이 의보투쟁과 결합한 것은 사회대개혁투쟁에 대한 노동 대중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된 측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타계층의 투쟁이 조합원에게 정확하게 인식되고 일상투쟁으로 전개되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언론개혁 국민회의에 민주노총 준비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방송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노동진영에서 갖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전노협 차원에서 직접 결합보다는 민주노총을 통해 사업을 하였다. 한편 이해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시 이에 대한 규탄 및 부패무능 정권 규탄대회 집회에 전노대가 주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조직적인 결합 등이 전체되지 않아 노동진영의 사회 대개혁투쟁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94년에 이르러 노동운동이 단순히 국민연합이나 전국연합과 같은 단체들에서 지원을 받는 차원에서 언론의 민주화나 의료보험의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타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상급 단체에서의 이러한 참여가 일반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사회 대개혁투쟁에 연결되어질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평가는 노동자적 관점 수립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노동자의 사회적 책무를 결집하는 수준에서 투쟁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이해가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고 보여진다.

(4) 여성부문

여성문제와 관련된 연대활동은 교육과 정책 간담회 그리고 여성대회 개최 등으로 나누어진다. 1991년에는 전국 노동조합 여성지도자 세미나를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전노협 여성국이 함께 개최하였다. 92년도에는 하반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타 계층 여성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직장 탁아소 추진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조합내 활동, 직장탁아소 설치 및 운영방안과 사례를 발표하였다. 참가 단체는 오리엔트전자(성남), 현대자동차(울산),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아남산업(서울), 협진양행,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이다. 또한 직장탁아소에 관한 비디오 시사회를 가졌는데, 이때 참가 단체는 전노협,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지탁연이었다. 이 해 노동조합 여성부는 일상활동 자료집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함께 작업한 결과였다. 한편, 여성정책 활동으로,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전교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 등 기층 여성들을 대표하는 조직과 함께 민주 대 개혁안 중 여성정책안을 마련하였고 전문노련, 보험노동조합연맹(이하 보험노련), 사무금융노련, 전교조, 병원노동조합연맹(이하 병노련) 등 사무진문직 업종과 함께 여성노동정책 자료집을 발행하였다.

1993년에는 3. 8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각 부문 여성과 연대하여 여성의 힘을 결집,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전 세계 여성의 단결 및 연대성을 고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주제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사회적 평등”(고용, 교육, 성폭력추방)이었는데, 전노협, 업종회의,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하 한여노협),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 대회는 전노협과 업종 노동조합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 노동자들의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개최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노총, 1994)

전노협, 서울여노자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여성노동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는데, 내용은 안정된 고용, 평등한 고용/평등의 조건, 뿌리내려야 할 모성보호/평생일터의 보장을 위한 직장탁아소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이외의 사업으로는 생리휴가 폐지에 대한 대응을 들수 있는데, 정부의 생리휴가 폐지 검토중이라는 발표에 간담회로 대응하였는데, 참여한 단체는 전노협, 병노련, 사무금융노련, 여연, 한여노협, 한국여성민우회였다. (노총, 1994)

1994년에는 93년에 이어서 생리휴가 폐지 반대 활동을 벌였는데, 병노련, 사무금융노련, 한여노협, 여연 등과 함께 정부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 비판과 생리휴가 폐지 반대활동의 일환으로 간담회 개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이는 노동, 여성계가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양의 여성사업장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 선전물 발행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확산되기도 했으나, 임투 준비시기와 맞물려 전체 사업장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활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했다.

(5) 산업안전 보건 부문

산업 안전 활동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인데, 전노협의 활동은 주로 산재추방 대책회의와 산재환자 진료제한에 대한 대책 사업을 벌이는 것이었다. 산재추방 대책회의의 목적은 산재추방의 달에 공동사업의 성과를 모아 산재추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공동 투쟁기구로서 대책회의를 결성한 것인데, 참여단체는 전노협, 산재노협, 원진비상대책위원회, 민정련, 전국노련, 노운협,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이었고, 활동 내용은 대책회의였다.

산업재해추방의 달 사업은 과거에 비해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노동단체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지속적인 체계적인 사업을 위하여 산재추방 대책회의를 구성한 것은 의의가 크다. 이 후 산업재해 추방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각 지역의 노동조합활동에까지 확대되었다. 산재환자 진료제한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서, 전노협, 산재노협, 노동과 건강연

구회,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동대응하였고, 대시민 홍보전, 선전물 제작배포, 지역단체에서 산재환자 강제종결 신고전화 개설, 공청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는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진행되었고 산재환자 강제치료종결에 대한 대책사업은 산재요양제도상의 문제점을 여론화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단위 노동조합의 참여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4. 전노대와 민주노총의 연대활동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비노총운동은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 1991년 창립)을 거쳐서 민주노총(1995년 11월 11일)으로 이어진다. 이 세 단체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 시기적으로 겹쳐짐-비노총운동의 주도권을 이어 받는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다.

전노대 역시 전노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운동과의 연대 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운동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전노협의 운동과 거의 같다. 그 형식에 있어서 정책적 대안과 함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위, 서명, 항의 방문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3년에 하반기부터 시작된 쌀 등 기초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UR 국회 비준 거부 운동도 벌인 바 있다. 이를 위해서 대회에 참여하고 대표자가 철야 농성을 한 바 있다. 광고를 통한 농업지키기 운동을 위해서 광고 기금을 대표자 44인이 각각 만원씩 모금하였으며, 전농투쟁 기금모금 운동을 벌여, 현대 중공업, 대우조선(각각 1,000만원, 300만원), 기아 자동차 등에서 모금하여 전국 농민회총연맹에 전달하였다. 또한 우리 농업 지키기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단협안에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회사내 식당의 주부식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전노협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농활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의 다른 연대

활동으로는,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 자동차 보험 노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활동과 의료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연대 회의에 참석하여 연대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 관련 사업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회의’에 전노대 대표자가 발기인으로 참가한 바 있다.

전노대는 1994년 부터 사회개혁 투쟁(이하 사개투)을 준비하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이하 민노준)은 이것을 이어 받아서 1995년에 사개투를 실시한바 있다. 94년은 준비기로서 5개의 사개투 목표를 설정하였다. “경제 민주화, UR비준 저지등 시장개방반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공안통치 종식 및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지자체 선거등 정치적 대응방안 강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투쟁 목표는 다분히 즉흥적인 측면이 있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진행되던 시장개방 반대운동, 의료보험법 개정 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95년의 민주노총의 사개투로 구체화되는데, 이때는 앞서의 목표와 그 내용과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다. 95년의 목표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 적용 확대, 국민 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세제 및 재정 개혁,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의 네 가지이다. 이러한 목표가 선택된 이유는 이 과제들이 ①전국민적인 사안이고, ②투쟁 주체와 동력이 담보 될 수 있고, ③쟁점화 내지 쟁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사회개혁 투쟁 목표는 사실상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또한 민노준측에서 이와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적절히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데도 실패했다고 평가된다.⁸⁹⁾

89) 한 민노총측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사개투 전개 과정에서 민노준측 사업장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개혁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사개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5. 맺음말

서구에서 노동운동은 더 이상 다른 사회운동을 끌고가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운동이 다른 운동을 주도해본 경험이 없고 현재도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5%, 약 150만정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적은 수의 조직율로는 노동운동이 목표로 하는 노동자의 권익신장, 경제정의 및 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다른 사회집단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한 이익집단의 목소리로 간주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운동은 자본이나 국가가 다른 집단과의 연대속에서 노동을 포위하고 공격을 할 때 극히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는 노동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집단과의 연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노총과 민주노총 양 진영에서는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증대가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넘어서서 경제정의, 사회 전체의 민주화 등을 쟁취하여야만 진정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운동도 활동하는 영역이 틀리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 경제정의와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사회운동의 입장에서 볼때, 노동운동은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갖춘 한국 최대의 사회운동 단체라고 볼수 있다. 즉, 노총은 오랜 조직 활동 경험이 있고 현재도 많은 회원(조합원)과 재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이며, 민주노총은 정부와 오랜 기간 비타협적 투쟁을 하여 온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노총과 민주노총은 사회단체와의 적절한 결합 하에서 훌륭한 사회운동의 기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은 일정한 제약을 갖을 수 있다. 노동운동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조직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회운동 단체를 동원할 경우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몇 개의 단체들로 한정되며, 연대의 폭이 좁혀질 것이며,

나아가서 연대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노총과 민주노총쪽에서의 제한된 자원도 문제가 된다. 각각의 조직이 연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부서나 전담 요원을 갖고 있지 못하며, 관련 부서 차원에서 이러한 연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곧, 하루 하루 일어나는 사안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이자, 사회운동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사업이 결코 부수적인 사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운동의 한 핵심이고 연대에 바탕해야지만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동시에 발전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바탕해서 보다 많은 자원이 연대사업에 투입되어야하며, 상호간의 존중에 바탕한 연대사업을 진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자료 3-1> 노총 여성 연대활동 연보

- 1971년

여협 주최 : 전국여성대회. 논제-“70년대와 인구문제”에 참석(아래에서는 참석 생략)

YWCA 사회문제부 주최 : “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방침”

여협 주최 : “금융계 근로여성을 위한 좌담회”

- 1972년

노총에서는 일반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활동방향에 대해 각계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연대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려고 했다. (노총 72년 사업보고, 135쪽)

YWCA 사회문제부위원회 : “사회문제 및 소비자보호의 건”

YWCA : YWCA 4월 회의-“오늘 우리의 문제”

YWCA : “국회의원과 말한다”

- 1973년

YWCA사회문제부 : “국산품애용과 근로여성”

여협 : “가족법 개정촉진대회”

- 1974년

“김광자여사 두아들 구출을 위한 서명운동” 서명 받아 여협에 협조.

전문직업 여성클럽 : “한국 직업 여성의 진단”

주부클럽연합회 : “임신안하는 해” 캠페인

- 1975년

여협 : “전국여성대회-세계여성의 해와 한국여성의 현실”

여협, 보사부 :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서울 YWCA : “저정년제에 관한 공개토론회”

여협 : 소비자보호운동 실무자 훈련”

- 1976년

여협 : “보사부 주관 소비생활합리화운동”

YWCA 주관하는 근로여성회관건립모금운동에 참여.

여협 : “총력안보대회”

- 1977년

여협 : “전국여성대회-산업사회와 여성”

여협 : “범여성 총력안보궐기대회”

- 1978년

여협 : 전국여성대회

여협 : “근로여성문제 세미나-한국산업발전에 있어서의 근로여성의 위치”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 “근로여성강연회-노동행정에 비친 근로여성의 실태, 산업사회에있어서 여성근로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로여성의 지위와 의식”

범여성단체 : “범여성총력안보 단합대회”

- 1979년

여협 : “전국여성대회-시민사회와 여성”

여협 : “소비자 지도자 교육참가”

여협 : “범여성발전촉진회 준비위원회-유엔여성 10년 사업계획 협의”

YWCA : “물가대책을 위한 긴급소비자 대회”

어린이 복지사업연수회 : “아동복지관련 연수” 참석

여협 : “전국여성대회-자원난시대의 생활전략”

- 1980년

여협 : “전국여성대회-“80년대의 복지사회와 여성”

한국부인회, 여협 : 여성발전세미나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의식구조,

변천에 관한 세미나”, “취업, 보건, 교육에 관한 여성발전 세미나”
 숙대 아세아여성연구소 : “복지사회와 여성문제”
 이대 여성연구소 : “여성근로자 교육에 관한 간담회”

- 1981년

노총 : “근로여성 정책 토론회” 개최
 여협 : 전국여성대회, “근로여성문제 세미나”

- 1982년

여협 : “근로여성문제 세미나”, “여성발전세미나”

- 1983년

여협 : 전국여성대회
 BPW한국연맹 : “변화에 적응하는 창의적 여성-전문직업 확대의 전망”

- 1984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이하 여협)가 주관하는 여성 차별에 관한 시정활동으로 범여성 가족법 개정운동에 참여했다. 그 내용은 ①가족법 개정 서명 활동(단위노조별) ②가족법 개정 기금 협조(뺏지 판매) ③가족법개정 홍보활동 협조(포스타 부착 및 전단 배포)
 여협의 토론회(여성 차별 문제)
 가족계획협회 : 청소년 성교육 교재 발간 준비위원회

- 1986년

사회단체 대토론회 : YMCA주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 1987년

여협 토론회 : “결혼 퇴직 여성의 인간적 조명”, “개헌과 여성 -양대 정당에 묻는다”

여협 : 제 24회 전국 여성 대회; 여성의 시대적 사명-민주화를 가는 길

- 1988년

노총 토론회 개최 : “남녀 고용 평등법“ 토론회

YWCA초청 여성 간부 간담회 : YWCA 직업훈련과정의 개선책 조언.

여협 : 제25회 전국 여성대회

카톨릭 의대 부설 산업의학센터 : “근로 여성과 건강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 사법 행정학회 좌담회

제18회 청소년 지도자 심포지엄 : “민주 발전과 청소년 지도 방향”

- 1990년

한국여성 정치 연구소 : “90년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협 : 전국 여성대회(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여성 교류),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한국부인회 : 탁아 입법 토론

한국 여성 민우회 : “심각한 차별 임금,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성 차별 실태 및 그 개선책”

- 1991년

1) 노총 주최 활동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 : 회원조합 산하 중견간부, 학계, 여성단체 등 250명이 참석.

2)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활동

한국 여성 정치 문화 연구소 : “지방 자치 선거와 여성”, “여성 정치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여성 발전 위원회 : “미래사회와 우리의 선택”

한국 여성 사회 교육회 : “21세기를 향한 가정교육”

여협 : 28회 전국여성대회

여성정치연맹 : “여성과 정치 발전”

여협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 “집단적 노사 자치에 관한 법률시안 연구 발표회”
 서울대 경제학과 : “여성노동력 고용구조와 상향 이동”
 한국여성정치 문화 연구소 : 제8회 학술 세미나
 전문직업여성 클럽 한국 연맹 : “우리의 남녀 고용 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준비위원회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 1992년

1) 노총 주최 활동

여성노동관련 조사연구 결과 발표 :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과제”, 회원조합 산하 간부, 관련기관, 학계, 여성단체 등 200여명 참가.

2)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활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노사관계학회 :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대한 YWCA 연합회 : “14대 여성의회 진출평가와 향후 방안”
 한국통일여성협의회 : “남북한 타아제도의 비교”
 한국여성사회교육회 : “여성사회교육의 현재와 미래”
 여협 :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제14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 1993년

1) 노총 주최 활동

여성고용관련 조사연구 결과 발표 : “여성고용 차별의 자율개선 추진 방안 -남녀고용평등법 인지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각 회원조합 간부, 관련기관, 학계, 여성단체 등 300여명 참가.

2)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활동

한국노동경제학회의 2개단체: “문민시대 노사관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지역탁아연합회 : “탁아관련 세미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12회 학술세미나
한국여성정치연맹 :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
한국여성사회교육원 : “미래사회와 여성의 의식교육”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 :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여협 : 제30회 전국여성대회
한국노사관계학회 : “국가발전과 노사관계 전략”
여협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방향 세미나”

- 1994년

1) 노총 주최 활동

'94 남녀고용평등법 심포지움 : 각계 300여명 참석.

특이점-->그동안 지정토론자에 정부나 기업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례적으로 여연 산하 단체인 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 나옴.

2)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활동

유니세프 : “어린이 권리에 대한 한국인의 행동변화 토의”

여협 : 제31회 전국여성대회

여협 :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고문헌>

- 김금수·박현채 외, (1985), 『한국노동운동론1』, (서울 : 미래사). 김진균(1995), “전노협의 활동 평가와 민주 노총의 과제”, (토론자료).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4), 「공동체 이념의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서울 : 연세대학교).
-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1994), 「'94 전국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 수련대회 자료집」,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 _____,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제 1차 조사연구 보고서」,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 사업보고서」(1990-1993), 전노협, 1991-1994.
-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1995), 「19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지침」.
- 한국 노동조합총연맹, 「노총 사업 보고서」(1971-1994), 한국 노총, 1972-1995.
- 한국 노동조합총연맹(1995),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

제 4 장

한국 신사회운동의 특성 및 노동운동과의 연대

I.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 철 영*

1. 들어가는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 7월 8일 발기인 대회를 가짐으로써 출발을 하였다. 불과 6년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진 경실련이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성장한 것은 오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 과정에 들어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운동의 내용(대안을 가진 비판)과 운동방식(합법적·평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출발하던 1989년은 제 1차 3저호황이 끝나고 국내 경기가 후퇴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극에 이르던 시기였다. 토지소유자의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에, 토지 없는 일반 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초기 경실련 운동가들은 경제 부정의와 망국적 토지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척결 없이

* 경제정의실천연합 전 조직국장

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되 지금까지 재야운동이 설정해왔던 주체와 운동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직시하였다. 시민운동은 특정한 계급·계층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 즉 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경제정의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구속은 물론 개인적인 불이익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영웅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였음에 반해 이제는 보통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운동의 방법도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운동,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이 되어야만 평범한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으며 그 결과 물리적 대결을 하는 운동방식도 국민들에게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합법적·평화적인 운동만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운동방식이었음이 실천적으로 증명되었다.

시민운동은 철저하게 비정파적이고 순수한 입장을 견지할 때에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지 않고 공공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치인들을 적극 지지하고, 집단이기주의나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는 정치세력을 철저히 비판하는 등 시시비비(시시비비)를 가리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약에 “중앙위원 이상의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못박아 놓고 있다. 이 규약은 시민운동이 확실히 뿌리내리기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경실련 발기선언문에 명시한 6가지 실천과제를 보면 출발시의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다.

- ① 모든 국민이 빈곤에서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
- ②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이 소멸되어야 한다.
- ③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을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
- ⑥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해서는 안된다

2. 운동의 목표와 조직

1) 운동의 목표

경실련의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운동의 목표도 확장·발전해 왔다.

(1) 초기 경실련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형평을 추구하는 발전이 되어야 한다. 초기 경실련 활동이 금융실명제의 실시, 토지투기의 근절, 임대차보호의 강화 등에 집중된 것은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위한 것이었다.

(2) 1991년 폐놀에 의한 낙동강 오염사건, 주기적인 수도물 파동 등을 경험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UN환경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는 한국의 환경단체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여 심각한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경실련도 환경의 보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경제정의는 물론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

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1992년에 운동 목표에 환경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가하게 되었다.

(3) 1993년 경실련의 운동 목표로 민족통일 문제가 추가되었다. 이념적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 민족화해적이고 실용적인 통일논의를 이루어내고 나아가 흡수통일이 아닌 북한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우리 민족의 과제이며 경실련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4) 1994년 경실련의 운동 목표에 “정신운동의 성숙”이라는 과제가 추가되었다. 그동안 경실련의 활동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주로 법이나 사회적 제도를 고치는 것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제도를 운용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과 같은 자발적인 시민운동은 국민의 정신적 성숙, 의식의 성장을 주요한 운동 목표로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조직의 운영

(1) 조직체계 및 특성

경실련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몇개의 기관과 조직이 통합되어 움직이고 있다. 시민운동의 본체로서의 경실련과 법인체인 ‘경제정의 연구소’, ‘환경개발센터’, ‘통일협회’, 그리고 시민운동의 대변지임을 자임하는 ‘시민의 신문’ 등은 법적이나 형식적으로는 엄격하게 독립된 기구이지만 활동 과정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외에 경실련 부설로 알뜰가게와 경실련 정농생활협동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등이 있다.

① 경실련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회원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이 회원총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1995년에는 약 700

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되었다.

② 중앙위원회는 1년에 한차례씩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집행(이하 상집)위원, 감사를 선출하고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승인과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상임집행위원을 선임하며 1995년에는 90명의 상임집행위원이 선임되었다.

③ 경실련의 일상적인 집행기구는 상임집행위원회로 월1회의 정기회의를 통하여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결정, 특별기구의 설치 및 폐지, 부설기관의 설립, 고문, 지도위원, 상임집행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연구위원장, 조직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각종 내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경제정의연구소’, ‘환경개발센터’, ‘통일협회’, ‘시민의 신문’ 등은 각각 독립된 이사회를 갖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각 법인의 임원들이 경실련의 중앙위원과 상임집행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이런 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과 활동을 조정한다. 따라서 각 기관은 독립된 조직이면서도 경실련의 큰 틀 아래 통일되어 움직일 수 있다.

④ 경실련의 집행기구로서 사무처, 정책연구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경실련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로서 경실련의 두뇌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각 지역 경실련에도 정책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전국의 정책연구위원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실련의 정책연구위원회에는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활동이 미약하였는데 이제 전국에 40여개의 지역조직이 결성됨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확대하여 각 지역조직의 결성과정에서부터

조직의 지도, 분쟁의 해결 등을 담당하려고 한다.

⑤ 경실련의 의사결정의 특징은 철저한 토론과 합의이다. 공동대표를 포함한 각종 임원의 인선은 철저한 합의와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경선을 한 적이 없다. 뿐만아니라 모든 회의에서 아직까지 표결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것은 개인의 헌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시민운동을 함께하고 있으므로 표결을 통한 분열을 방지하고 합의와 양보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재정 규모 및 확보방법

경실련과 관련된 법인체를 합한 1995년 경실련 중앙의 예산은 약 14억원이며 중앙에 70여명의 상근자가 있고, 지역조직의상근자까지 합하면 150여명이 된다. 각 지역조직의 예산은 독립채산을 하고 있으며 예산을 중앙이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단, 중앙은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사업을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 경실련의 재정수입은 대체로 회원의 회비, 연구용역비, 협찬과 후원을 각각 1/3정도로 해서 확보하고 있다. 재정의 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회원의 회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회비의 비율을 총수입의 1/3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재등록운동, 회원확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운동의 참여자

경실련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가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경실련이 조직된 경우는 지역에서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다. 회원에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있다. 회원은 규약, 내규 결의를 준수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교육훈련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또한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받

의하고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후원회원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경실련은 초기부터 합리적인 진보세력과 양심적인 보수세력이 결합하여 운동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런 회원들이 모여서 일반인들의 상식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런 회원들로부터 나온 비상근 지도력과 사무총장 이하 상근자들이 일상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운동의 경우 자칫하면 상근자에게 의사결정이나 집행의 중심이 옮겨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경실련은 비상근 지도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민운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3. 주요 활동 사업

1) 부동산 투기 억제 활동

1989년 7월 8일 창립 발기인대회를 마친 후에 50여일간 부동산 투기문제를 연구하는 비공식모임을 만들어 연 50시간 이상의 토의를 거쳐 8월 20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경실련은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토지 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보유세는 강화되어야 한다” 등의 5개 항의 토지 관련 규정을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1년에는 수서사건을 계기로 조합주택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 하여 정책 대안 발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강조하였다.

지금도 경실련은 토지소유의 실명화(명의신탁 근절), 토지세제를 개혁하여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을 점차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는 등의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 금융실명제 실시 활동

검은 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오랜 과제중의 하나였다.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수립하여 경제정의를 이룩하려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금융실명제 실시는 계속 미루어 오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노대통령도 이 공약을 어기고 실시를 미루었으며 결국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대통령 긴급조치로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출범 이래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50여회 발표하고, 10여회의 집회 및 캠페인을 통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하여 “금융실명제 실시 요구는 경실련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집중하여 부각시켜 왔다. 지금도 경실련은 차명계좌가 온존하고 예금자보호를 내세워 검은 돈까지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3) 한국은행 독립활동

경실련은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부의 분배를 왜곡하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한다고 진단하였다. 1989년 11월 한국은행(이하 한은)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1994년 3월에는 ‘물가문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공청회를 열고 중앙은행이 맹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물가불안이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한은독립을 촉구하였으며, 동년 5월 20일에는 경제학자 41인의 성명 발표를 통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을 촉구하였고, 동년 10월 26일에는 한국은행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1995년 2월 16일에는 전국 129개 대학 1,054명의 경제학자들이 서명하여 한국은행 독립을 촉구

함으로써 한국은행 독립의 이슈를 다시 부각시켰으나 그 문제는 아직까지 성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앞으로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모든 계기를 통하여 부각시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4)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활동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그 자체가 분배 왜곡일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재벌은 그간 경제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특혜금융, 토지투기, 재정투융자의 지원 등과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을 수탈하여 왔다. 최근 ‘노태우 비자금’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재벌의 성장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돈을 통한 유착의 결과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재벌에 대한 특혜가 축소되면서 경제정책과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정책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까지 재벌 기업의 지배하에 놓일 위험이 있다. 이는 경제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정의가 파괴되고 사회적인 양극화를 확대시킬 것이다.

경실련은 91년 전경련과 경실련 학자들간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실련 문고로 『재벌』을 발간하는 등 재벌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일 또한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5) 세제 및 세정 개혁 활동

경실련은 1990년 하반기부터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제개혁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토지투기의 근절을 위한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양도소득

세를 강화하는 등의 토지관련 세제의 강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간접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세율 인하 등의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4년 정기국회 때는 ‘금융실명제 조기정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계개혁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1994년 8월 인천 복구청 세무비리 사건과 같은 해 11월의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세무행정 개혁을 위한 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 선거시기의 정책캠페인활동

1991년 12월 경실련은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92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치·경제분야에서의 개혁정책들을 여론화시키는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의 선정 및 집필작업을 위한 정책연구위원회 전체세미나’를 통하여 토지, 주택, 금융, 재정, 농업, 노동, 재벌, 중소기업, 정부규제, 대외경제, 교통, 정치제도, 지방자치 등 13개 분야에서 54개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토의를 통하여 4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1992년 3월에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92년 2월에 예정하였던 정당 초청 경제정책토론회는 민자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지만, 경실련은 입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20개 설문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유세장에서 대대적인 정책캠페인을 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정책 공약에 대한 총괄 평가를 통하여 각 정당 공약의 개혁성, 정책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각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경실련은 14대 총선 출마자중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던 당선자 88명과 입후보자로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당선후에 답변한응답자 37명으로 총 125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정책 설문 답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정책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14대 대선을 맞아 경실련은 보다 본격적인 정책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개혁과 민주발전을 위한 정책캠페인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11월 6일 ‘정책대결의 선거문화를 위한 시민의 밤’을 통하여 정책캠페인참여를 다짐하였고, 다른 사회운동단체, 직능단체와 공동으로 때로는 경실련 단독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음 정부가 실천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여 이를 알리고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11월 25일 금융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한국은행 등 14개 은행노조와 공동으로 열었으며, 12월 1일 노동단체들과 공동으로 3당의 노동정책 토론회, 12월 14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하 현총련)과 울산에서 3당 노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1월 17일에는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후보의 거듭된 회피로 미루어오던 3당 대통령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김대중, 정주영 두 후보의 답변을 들었다. 경실련은 이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여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경실련의 정책캠페인은 11월 28일 ‘3당 공약 비교평가 세미나’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경실련의 200여명의 정책연구위원들이 참여하여 각당의 공약을 분야별로 개혁의지, 구체성, 차별성, 현실성, 일관성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3당의 공약, 그 차이를 아십니까?」라는 책자로 발간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대선이 끝난후 경실련은 정책캠페인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캠페인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자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통하여 민자당이 제시한 신한국창조를 위한 10대 과제를 분석·평가하고 그동안 경실련이 제시했던 “금융실명제 실시,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 세제 강화, 돈안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실현, 완전한 지자제 실시 등 13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이번 선거를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

한 지역내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 『우리서울 이렇게 바꾸자』는 책자를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전주, 수원, 울산, 안양 등지에서는 책자를 통하여 지역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비록 책자로 발간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지역의 현안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지방자치선거를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7) 경실련의 환경운동

1991년 폐놀사건 이후 지속되어온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의 활동으로 집약되고 있다. 안전한 식품 및 유기농업 보급 운동의 일환으로 경실련 정농 생활협동조합을 조직(1991. 6)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과 근검절약운동을 위하여 알뜰가게를 설립(1991. 10)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보급함으로써 재활용운동의 확대에 공헌하였다.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위하여 환경개발센터를 창립(1991. 11. 14)하여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운동이 단순히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운동을 넘어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개발센터 설립 이후 ‘대학생 환경세미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1993.1.~4.), ‘유리병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993.4.~9.),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1993.8.~12.),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 개발 연구’(1994. 6~1995. 5) 등의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목동, 상계동, 일원동 소각장 관련 주민운동을 지원하고, 산본시 소각장 관련 주민운동 지원활동, 의왕시 외곽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운동의 지원,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각 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였으며, 노동자 환경교실, 주부 환경교실을 개설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였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민간평가단을 7개 단체 합동으로 구성하여 33개 시범지역의 종량제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다.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단체 해외연수단을 구성하여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환경단체를 견학하는 사업을 시작하여(1994. 5) 이후 지속하여 오고 있다.

환경에 대한 국제 연대활동도 활발히 하여 동북아 및 북태평양 지역 환경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산림보전 및 그린라운드 대책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 워크숍”을 서울에서 주최(1994. 2.)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환경관계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1995년 5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지식인 1,000인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정비를 요구하다. 또한 태백산지역광산촌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태백 일대의 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들과 함께 공동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8) 경실련의 통일운동

경실련은 1993년 8월 7개국에서 12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제1회 세계한민족 청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연변과 백두산, 만주, 서울, 판문점, 포항, 경주를 돌아보면서 청년들에게 민족과 세계에 대하여 균형있게 사고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한국의 분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회 대회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대회를 개최하고, 3회대회는 미국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동북아 경제권과 한민족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동북아시아의 한민족』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들의 성과를 모아 1994년 1월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라는 조직을 창립하였다.

경실련은 통일운동의 3대 방침으로 ①실사구시적일 것, ②시민이 주인이

될 것, ③민족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 등을 정하였다. 또한 통일운동의 7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① 시민사회의 공론을 도출하여 범민족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 ②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③ 통일을 대비하여 제도와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 ④ 해외 동포들과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강화해야 한다.
- ⑤ 통일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⑥ 동북아 평화 및 공동 번영의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 ⑦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통일협회는 각종 통일관련 이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성명을 통하여 의견을 발표함은 물론, 백인 백색 통일론을 모아서 『통일 그 바람에서 현실로』라는 책자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9) 삼풍백화점 붕괴시 자원봉사활동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수백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실련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과는 다르게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였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사건 현장에 찾아가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구조대원들과 함께 붕괴현장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현장에 나와서 어려움을 함께 돕는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실련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서울교대에 천막을 치고 실종자 가족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매일 소식을 모아서 일일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중요한 사항을 대자보로 작성하여 붙여놓고, 실종자 가족들의 회의를 돕고, 서울시나 정부와 대화하는 것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이들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다.

또한 경실련의 형제 단체인 경불련은 다른 캠프를 차리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물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담회,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하여 정부가 이 사건을 올바르게 대처하고 이후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건현장에 시민운동단체들이 직접 찾아가서 실종자 가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된 것이었다.

10) 기타 활동

그외에도 ‘경제정의연구소’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경제정의상을 시상함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부정부패고발센터’는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부정부패 사례를 정리하여 처리하며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4. 운동의 평가와 당면과제

1) 경실련 운동의 특성중의 하나는 언론의 적절한 활용과 협력에 있다. “합법적 방법, 대안의 제시, 적시에 문제제기, 경실련의 성공의 원인으로 경실련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합리적인 대안모색 능력, 사무국 실무자 및 상집 간부들의 헌신적인 태도 등을 열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합법적 시민운동이라는 경실련의 방법론이 시대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우리의 실제 이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정도 이상의 성원을 얻은 결과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경실련, 1991 : 14)”라는 평가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언론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활동방식은 다른

취약점을 안게 된다.

2) 가장 큰 취약점은 회원 참여의 부족이다. 그 동안 경실련의 회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이기 보다는 후원회원이나 다름이 없었다. 즉,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 내는 것은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경실련은 지방조직(서울 등의 대도시는 지구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들의 참여구조를 확대하고, 회원들이 자원봉사 등 참여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정도는 되지 못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원서클의 활성화, 소경실련 운동(과제별 조직의 활성화) 등의 시도가 성과있게 진행된다면 회원참여의 확대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3) 초기에 서울에서 시작했던 경실련은 이제 40여개 지역에 지부가 결성되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제 경실련운동의 지방화를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주로 중앙조직은 전국적인 이슈를 다룸에 반하여, 지방조직들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 지역의 문제들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경실련은 지방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군단위나 작은 시단위 경실련지부들은 농촌지역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도시에서 출발하여 발전해온 경실련이 농촌지역의 문제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 거대 도시의 경우 지구(地區)경실련을 조직하여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에 깊이 개입함은 물론 전체 도시 차원의 문제들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생활비 이하의 월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경실련의 활동이 확장됨에도 지속적인 재정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전체 예산

에서 회원들의 회비가 일정한 비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참여의 확대는 재정자립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의 재정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이러한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단순히 현재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5) 그동안 경실련 내부에서 토론된 문제의 하나가 정부와의 관계, 각종 정부의 위원회 등에서의 참여문제이다. 현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경실련 관계자들이 참여하게되면서 이런 토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기가 주어질 때에 토론을 통하여 하나하나 정리하며 관행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참여를 기본으로 하기에 기회가 주어지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경실련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 대하여도 백(白)이 아니면 흑(黑)이라는 식의 태도를 갖기 보다는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화시대의 시민운동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5. 연대활동의 내용 및 평가

1) 공명선거 활동

1991년 1월 12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고발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지방의원선거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경실련, 흥사단, 여성유권자연맹, 자유지성300인회,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불교도시민연합 등 7개 단체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협의회(이하 공선험)을 결성하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후 공선험은 지방자치선거에서 관권개입금지, 금품향응 금지, 부정선거 금지, 학연 지연에 의한 투표 금지 등의 캠페인을 하였으며 선거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정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2년 초에는 14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선험을 확대 개편하여 55개 단체가 초기부터 참여하였으며 후반기에는 35개 지역에서 시민, 직능, 여성, 종교, 청소년단체 등 400여개 단체가 공선험운동에 참여하여 전국적인 연합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공선험은 “통반장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근절, 정보기관에 의한 후보조정 금지, 선심공약 남발 금지,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였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선심공약의 남발과 금품향응의 금지, 법정 선거비의 준수”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공선험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부정 사례의 고발”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1992년 3월 22일 이지문 중위가 공선험 사무실에서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행위에 관한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수방사 헌병대에 연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공선험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이지문 중위에 대한 법률구조를 함은 물론 진상규명대책위 구성, 전국적 서명운동, 국방부장관 면담, 공선험에 접수된 군부재자투표 부정사례 21건에 대한 국방부에 조사 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군부재자투표 부정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군부재자투표의 관리, 영외투표를 통한 엄정한 감시와 관리, 부득이한 경우는 군부대 안에서 행하되 선관위원과 정당 및 민간인 참관단의 투표참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선거법개정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되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선험은 각 후보들이 ‘정책대결’을 할 것과 국민들이 각 후보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TV 토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통령선거를 치루고 공선험은 자체 평가를 통하여 “상대적인 공명선거, 시민운동의 활성화, 유권자 의식의 향상, 정책대결 요구 급증”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여전한 금권선거, 정당의 외곽단체사조직·직능단체등을 동원한 불법·타락 선거, 특정 재벌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 흑색선전, 지역감정” 등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정책대결을 하는 선거문화의 정착, 통합선거법으로의 선거법 개정,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처리, 지역감정의 극복,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2) 선거시 정책캠페인 활동

94년 말에 있었던 시민단체정책협의회를 통하여 1995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은 공선협 활동과 정책캠페인을 주요한 활동으로 결정하였다. 공선협은 YMCA가 주관단체가 되어 활동을 하고, 정책캠페인은 경실련이 주관단체가 되어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각 지역에서 진행된 지역 정책토론회의 성과를 모으고 다른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책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41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 전국 공동 정책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토론을 통하여 모아진 전국 공통의 개혁과제 111개를 뽑아서 『우리 지역 이렇게 바꾸자!』는 제목의 책자로 출판하였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자치 후보들에게 서명운동을 받아서 발표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전국 공통과제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하여 이를 발표하고 각 후보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정된 통합선거법에서 후보초청토론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정책적인 선거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3)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구성

1994년 1월 개최된 한국시민사회단체공동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주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주요 시민단체들을 망라하

는 연대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합의에 기초하여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여성단체연합, YMCA, YWCA, 통일여성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8개 단체에 연대조직 결성에 대한 논의가 위임되었다. 8개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논의가 점차 확대되어 1994년 9월 12일 35개 단체가 참여하여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를 결성하였다.

시민협은 주요 사업으로 ① 시민단체간의 교류 및 협의활동, ②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간접지원, ③ 대정부, 대기업, 대국제 공동대응, ④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동기념행사 등을 설정하였다.

시민협은 결성 이후 1994년 9월 30일 부패척결 및 개혁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관변단체 육성 폐지 및 민간운동관련 법안 수정촉구 시민대회 등을 개최, 지방자치선거시 후보추천 기준의 발표 등을 하였다. 시민협은 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자율성을 전제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다.

시민협은 시민단체의 국제화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는 개별 단체의 활동을 통하기 보다는 시민협의 활동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UR 대책활동

경실련은 1990년 10월 6일 'UR 농산물협상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월례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UR 협상이 우리 농산물과 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준비하였다. 1991년 1월 5일에는 다시 'UR이후의 국내 농업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1월 9일에는 "UR협상과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원석 교수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쌀수입개방 가능성이 커지고 각계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1991년 12월 5일 '쌀개방 반대 교수단'과 함께 미국 대사관에서 '쌀개방 반대 및 농업회생정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호소문'과 '미국정부에 보내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전달하였다. 성명

을 통하여 “쌀은 단지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슈퍼 301조 폐지, 선진국의 수출보조금 지원제도 철폐,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촉구, 쌀시장 개방 반대”등을 밝혔다.

1993년 3월 22일에는 166개 농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 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이후 UR협상 과정에서 우리쌀과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건의서 발송,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집회와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대책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해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요 각국의 협상 전략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활동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3년 12월 15일 정부는 상당한 양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UR 잠정협상안’을 타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1994년 1월 5일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종합적인 ‘농업구조개혁안’을 제시하고 ‘농업개혁위원회’(94. 2)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35개 단체와 연대하여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UR 최종이행계획서’를 정부가 제출할 때에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하였고, ‘UR 이행 특별법’의 제정 과 ‘WTO 협정의 조기비준 반대’를 주장하여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5) 사회 분쟁조정활동 : 한약분쟁조정

93년 2월 약사법 시행규칙의 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촉발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분쟁은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전국 약국의 폐업, 한의사 자격증 반납 등으로 격화되어,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양대 집단의 이해다툼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인 보사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이를 수습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한약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결성(93. 9. 16)하고 양측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4차례 연속회의를 가지면서 합의안을 마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93. 9. 20). 그러나 약사회의 내부 반발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최종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보사부가 경실련 안의 골격을 받아들여 약사법 개정 확정안을 발표하고(93. 10. 8) 그 해 12월 국회에서 보사부 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통과됨으로써 한약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준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6.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

경실련의 노동자사업은 ① 분배정의를 위한 노동자협의회 ② 노동자회 ③ 노사관계개혁위원회 ④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의 내부조직을 통한 활동과 정책연구위원회내의 노동분과위원회의 정책활동, 사건에 대한 대책활동 등으로 대별된다.

1) 분배정의를 위한 노동자협의회 활동

경실련은 90년 6월 9일 회원들중에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분배정의를 위한 노동자협의회’(이하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여 필요한 노동관계의 제반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노동자협의회는 경실련노동자회가 결성(93. 3. 13)되어 활동하기까지의 노동관련사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협의회는 91년 11월부터 서울, 인천, 안산, 수원, 울산 등지에서 노동조합 지도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92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울산에서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의 노동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주요 3당의 노동, 경제공약 비교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차이를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나아가 3당의 정책 비교·평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동자여러분, 3당 공약의 차이를 아십니까」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노동자들

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92년 11월 한국은행 등 14개 금융관련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은행 독립, 금리자유화, 금융인사권 독립 등 제반 금융자유화의 실시를 촉구하였으며 이 토론회의 발제와 금융개혁 관련 자료들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92년 6월 17일 서울지하철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고, MBC 방송의 파업사태를 맞이해서는 ‘MBC방송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활동(92. 9~92. 11)을 했다. 92년에는 서울 택시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측이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매수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조합측으로부터 “이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경실련이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대책활동을 하였다. 노동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 양측을 면담하고 제반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회사측이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을 매수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러 “92년 임금협상 무효화와 매수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의 발표, 노사 양측과 검찰 등 관련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 노동자회의 활동

경실련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실련안의 회원조직으로 노동자회를 결성(93. 3. 13)하여 활동하였다. 노동자회는 결성대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노동자회는 수원, 안산에 지부를 설립하고 각 지역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토론회를 갖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노동자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임금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토론회’, ‘노동자회 위상 및 활동방향 토론회’, ‘고통분담론 토론회’, ‘고용관련 법률에 관한 공청회’, ‘한국산업보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등을 통하여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노동자회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으로 임금교실, 경영참가교육, 노동자 환경교실 등을 열고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들의 역할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노동자회는 93년의 활동을 정점으로 하여 94년 중반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운동과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키려는 노동운동 간의 원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경실련 노동자회는 사회적인 공공선을 위한 노동운동을 추구하였지만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운동에 익숙한 노동자들에게 경실련이 추구하려는 노동운동은 쉽사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둘째, 경실련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사회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 안에 노동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외부의 노동단체와 서로간에 필요한 경우에 연대사업을 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문제제기들이 있었다. 이는 서로간에 노선의 차이가 있어도 노동운동 내부에서 노선간의 조정을 하며 시민운동과 연대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통일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논리였으며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이었다.

셋째, 노동운동 안에 경실련 노동자회가 확산되지 못하였다. 시민운동의 한 분야조직으로서의 노동자회는 노동운동 안에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기존 노동운동가들이 경실련 운동을 개량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경실련은 “독자적으로 노동자들의 조직을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노동자 조직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부 평가를 하고 사실상 노동자회의 활동을 중단하였다.

3)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사업

93년 10월 경실련 정책위원회 노동분과 위원, 바른경제동인회, 경실련노동자회 등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조간부 수련회, 노동자를 위한 강좌,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다. ‘국제화 시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에 대한 심포지움(1994. 2)을 통하여 국제화개방화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합리적인 조정, 사업주들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인적 자원을 중시하고 육성할 것,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한 역할까지도 감당할 것을 촉구하였다.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1994. 6.)를 개최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합리적인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자동차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등 격차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소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을 하였다. 현대, 대우, 기아 등의 자동차 사업장과 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각각 경영자와 노동자측에 대하여 설문과 면접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홍장표교수(부산산업대)가 정리하였다. 이 결과는 경실련이 금속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불공정거래와 임금격차에 관한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정무장관실의 지원으로 주로 비노총계열의 노조지도자들에게 독일, 스웨덴, 미국의 노사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연수(1994. 6. 12~26)를 추진하였으나, 노동계와 경실련 내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끝낸 후에 “경실련 실무자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참가자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면서 경실련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4) 노동분과위원회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노동분과위원회’를 두어 노동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경실련문고로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는 책을 출판하였다. ‘노동분과위원회’의 토론을 통하여 노동법개정과 공기업 노동운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동법개정으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해제(사업장에서 복수노조는 금지되 연합단체의 복수조직은 허용한다),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의 철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개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1994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걸쳐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실련강당에서 농성을 하였다. 경실련은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기업주와 정부에 이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①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②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불법취업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할수 있는 첫단계 조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995년 초에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네팔 노동자들의 농성이 명동성당에서 있었다. 경실련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국내 노동법을 적용하여 그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였다. 9일간에 걸친 농성의 결과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아직도 이들에 대

한 차별대우를 철폐하는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센터'를 개설하였다. 상당한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으면서도 본격적인 상담기관이 없는 대구에 지역센터를 개설하고 그 일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조사,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련의 외국인 노동자 마을과 함께 중앙경실련의 센터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6) 노동운동에 대한 바람

노동운동이 세계적으로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내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기업간의 경쟁의 격화, 노동자들의 구성에서 생산직 비율의 감소, 노동자들의 의식의 변화 등이 모두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처럼 분배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를 통하여 주체성을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측 또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한 주체성, 적극성, 창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는 격화되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로 인식하여 가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도 이런 내외의 변화에 맞추어 그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운동은 분배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으로부터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강화를 통한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 중앙은행의 독립을 포함한 금융자유화를 통한 물가의 안정, 세계개혁을 통한 공평과세와 부동산투기의 억제, 의료

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노동자들의 감시와 고발 등 노동자들이 임금 이외의 활동,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노동운동의 활동 내용이 보다 풍부해질 때에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커짐은 물론 이런 일련의 개혁조치는 노동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과 보다 폭넓은 연대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요망된다.

8. 맺음말

경실련은 불과 6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대의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와는 달리 경실련을 둘러싼 운동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경실련식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과 함께 대안을 창출하는 운동”,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운동”은 더이상 경실련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사회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됨과 동시에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나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한 여론 조작 등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

경실련은 보통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체임을 표방하였지만 정말로 보통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의 자기 정립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다. 도리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는 경실련이 시민운동체로서 자리잡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제 경실련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전문가들의 참여와 대안의 제시”라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보통 시민들의 일상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시켜서 명실공히 “전문가와 보통 시민들이 함께하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실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자기 활동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바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재정의 확보가 결코 시민운동으로서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실련은 그 동안 주로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주력하여 왔는데 이제는 민중운동과의 연대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여야 할 것이다. '5. 18 광주학살범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 경실련이 이 문제를 재야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한 것 등은 이런 시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민중운동단체들은 자기 집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민중운동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서 이를 극복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민중운동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의 인식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이 노동자회나 경실련 대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이 기존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그룹과 경쟁을 하려는 듯이 비쳐졌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선 사안별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중운동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민중운동도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신뢰가 더욱 커질 것이며 보다 튼튼한 연대가 형성될 것이다. 아직은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만길·유재현 엮음(1996), 『통일 그 바람에서 현실로』, 비봉출판사.
- 경실련(1990), 「경실련 출범 1주년 기념자료집」.
- (1991), 「경실련 출범 2주년 기념자료집」.
- (1992), 「경실련 출범 3주년 기념자료집」.
- (1994), 「경실련 출범 4주년 기념자료집」.
- (1995), 「경실련 출범 5주년 기념자료집」.
- (1995), 『우리서울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 경실련통일협회(1994), 「창립기념토론자료집」.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1992), 「상반기 공선험활동보고서」.
- 박세일(1994),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경제정의』 1994년 봄호, 도서출판 경실련.
- 배무기(1994), “세계변화와 신노사관계모델”, 『경제정의』 1994년 봄호, 도서출판 경실련.
- 시민사회단체전국공동정책캠페인(1995), 「우리지역 이렇게 바꾸자」.

II.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이 대훈*

1. 들어가는 말

참여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뜻으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발족한 지가 아직 2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 이 글은 그러한 한계를 전제로 해서 임시적인 정리의 성격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200여명의 창립회원으로 창립되었다. 참여연대의 창립에 관한 논의는 1993년부터 사회운동 및 학계 법조계 등 여러 분야에서 각각 별도로 시작되었는데, 별도로 논의되던 흐름이 하나로 만나 공동의 논의를 형성하게 된 것은 1994년 2월부터이다. 새로운 운동체의 출현에는 나름대로 그 사회에 대한 진단이 따르게 되는데, 참여연대의 창립 주체들은 사회발전 주도세력의 부재, 사회규범의 위기,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 등을 한국사회의 위기 또는 위기에 가까운 문제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필요성, 새롭고 참신하면서도 정치 지향적이지 않은 운동체의 필요성, 효과적인 여론화를 이룰 수 있는 운동체의 필요성, 사법개혁 등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초기 참여연대 창립을 이끈 문제의식이 되었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던 별도의 논의가 공동의 논의로 모아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다양한 전문가층과 사회운동의 결합에 의해서 새 단체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동인식과 당시의 '민주화' 관념을 한 단계 넘어서는 진일보한 '민주주의'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공동인식의 일종의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인권'도 창립 논의에 참여했던 인권운동가들과 법조 인사들에 의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되어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국장

새 단체의 지향으로 확인되었다.

94년 5월 15일 첫 발기인 모임에는 약 20여명의 인사들이 모였는데 구성은 사회과학계 및 법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운동가로 되었다. 이후 4차례의 준비모임에서는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거쳐 단체의 명칭과 기본취지, 사업내용과 조직체계에 관한 기초가 토론되고 합의되었다.

단체 창립의 취지를 요약하는 명칭 논의에서는 자기완결적인 인상을 강하게 주는 참여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보다 개방적인 ‘참여민주사회’가 더 선호되었고 ‘참여’의 취지를 횡포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시민의 실천적 개입과 제한의 뜻으로 하였다. 또 ‘가족’과 ‘연줄’이 시민사회의 내적 연대성을 대신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연대’로 표현하여 ‘연합’과 같은 명칭보다 더 개방적인 모습을 취하고자 하였다. 일부에서 ‘시민연대’ 대신 ‘민중연대’를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 및 연관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이미지 및 구분이 매우 특수하고 역사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적인 구분을 극복해야 하며 또 ‘시민운동’은 전통적인 민주화운동과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한다는 적극적인 취지로 단체 명칭에 ‘시민’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단 외국어의 불완전한 번역어인 ‘시민운동’을 이데올로기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참여연대의 ‘시민운동’이 ‘풀뿌리 민’의 사회참여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이 적극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단체명칭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로 잠정 합의하였다. (이후, 이 명칭이 너무 길어 혼동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로 두 번 축약 개칭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기초로 약 4개월의 추가 논의과정 및 창립회원 영입과정이 진행된 후 9월 10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 250여명의 내외빈을 모시고 창립대회를 가짐으로써 참여연대는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창립대회에서는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를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운영위원장에 이삼열, 정책위원장에 김대환, 시민위원장에 양길승, 집행위원장에 안경환 등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창립된 참여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현재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나 “우리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절감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이제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민주국가의 국민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운동의 목표와 조직

1) 운동의 목표

참여연대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창립한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현재의 위로부터의 제한적 민주화 추진방식을 ‘여론 게임의 정치’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동시에 참여연대가 내건 ‘참여민주사회’의 기치는 앞으로의 사회발전의 이정표를 제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민(民)의 감시와 참여에 기초한 권력의 사회화 또는 권력의 민화(民化)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또 그렇게 민주주의의 사회적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야만 진정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안이었다.

참여연대가 굳이 별도의 단체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취약성과 미성숙 때문에 일상적 권력감시운동이 필요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90년대식 담론형성이 필요

하다.

② 제도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층의 요구와 취향까지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운동체가 필요하다.

③ 시민행동의 다양성과 다양한 대안제시 방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채 수용되지 않은 전문가층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④ 이른바 ‘재야’와 ‘시민운동’ 그리고 나아가 노동조합과 같은 기층 민중단체와도 친화적인, 즉 ‘연대의 촉진’을 수행할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창립된 참여연대의 활동목적은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체 입법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업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①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활동 및 시민들의 의사형성을 위한 토론행사를 실시한다.

②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 및 기업과 언론 등 공적 민간기구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한다.

③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다.

④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고 이를 개혁한다.

⑤ 광범위한 운동체간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참여연대의 사업 목적은 국가권력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감시, 정책과 대안 제시, 시민행동을 통한 인권 및 복지 개선이며, 사업기조는 대안연구 제시, 감시와 비판, 고발자보호운동을 통한 참여, 사회단체간 연대성 고취이다.

2) 조직의 운영

(1) 조직의 특성

참여연대에서는 1995년 9월 현재 주요 연구 및 활동기관으로서,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인권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공익소송센터,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연관된 여러 개의 시민모임 및 전문가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연구 및 활동기관은 임시조직은 아니지만 또한 고정된 것도 아니다. 특히 추가로 권력기관의 감시 활동을 할 필요가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시민감시센터를 둘 수 있다. 각 연구, 활동기관은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운영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는데, 참여연대활동기조내에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가 다양한 시민모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위계질서화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중앙 사무처는 중앙조직의 실무를 주로 맡고 각 연구, 활동기관의 활동을 측면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참여연대의 조직운영 원리는 수직적이라기 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형이라 할 수 있다.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전체 회원 총회와, 연 2회 주요 사업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대의기관으로 있으며, 여기서 운영위원은 활동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당연직과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초청된 상당수의 선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구조는 각 연구, 활동기관의 대표와 약간명의 선출직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월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 매일매일의 모든 사업의 집행이 논의된다. 보다 일상적으로는 축소된 상임집행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모든 활동기관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이다. 각 활동단위의 논의 및 사업은 정기적인 보고자료와 심의자료로 문서화되어 회람된다. 공동대표와 중앙임원들은 주별로 단체활동에 관한 정보와 보고자료를 받게 되며 회원들은 각 분야별로 참여하는 모임과 월 1-2회의 회원통신, 그리고 2개월마다 발간되는

공식잡지인 「참여사회」를 통하여 참여연대의 활동을 인지하게 된다.

(2) 활동기구

① 정책위원회

참여연대의 전망과 주력 사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내오면서 동시에 주체별 위원회를 두어 일상 사업도 전개하는 정책기구인데 사회복지와 사회운동의 결합을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생활최저선운동을 배태해 낸 것이 첫 사업이었다. 현재에는 재벌문제와 경제력 집중에 대처하는 분과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분과를 추가로 두고 있다.

②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 개혁문제를 매개로 사회운동단체간에 폭넓은 연대를 조직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시민운동의 전형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되어 현재에는 별도의 기구로 독립되었다. 사회복지 개혁운동을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라는 운동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운동방법은 공익소송과 입법청원 및 여론화인데, 공익소송으로는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위법적인 기금운용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의료보험 적립금 전용에 관한 고발(94년 12월 5일)과 노령수당 지급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94년 12월 23일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으로 70세로 제한한 것에 대한 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다.

여론화 방법으로는 95년 1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한겨레신문 복지보건면에 17회에 걸쳐 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여론선도를 꾀하였다. 아울러 국민생활 최저선확보에 대한 복지정책 책자가 발간되었고 95년 3월 17일에는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교수 193인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③ 시민위원회

다양한 시민모임의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시민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는데 청년모임, 언론감시모임, 자원봉사자모임, 정보민주화모임 등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끝이어서 위원회 산하로 상설 시민참여학교가 개설된다.

④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 시민운동의 본격적 전개와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여론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하에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이라는 자발적인 사법피해자모임, 법정모니터팀과 법률지원단을 두고 있다. 사법감시 센터는 토론회와 책자발간, 기사 게재 등을 통해서 검찰의 위상과 역할, 변호사제도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기대, 사법개혁 과제의 종합적 제시, 사법부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사회에 알려왔다. 특히 95년 2월 26일부터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사법개혁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게재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21세기에 대응하는 법학 교육 및 사법시험의 개혁, 사법 제도의 개혁, 사법의 민주화, 신뢰받는 수사와 재판의 모습, 양질의 저렴한 재판, 변론 받을 시민의 권리, 시민 생활과 조화되는 사법이란 무엇인가, 시민의 사법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선진국의 되기 위한 최소 요건, 다양한 분쟁 유형에 대한 처리 방법 개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사법의 상, 법조 일원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법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는 「사법감시」지의 발간과 열린 토론 행사로서 ‘열린 법정’의 개최가 있다.

⑤ 의정감시센터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운동방법은 역시 토론회와 입장 발표, 의회 모니터, 입법청원 및 시민 캠페인 등이다. 그간 토론회 주제는 오늘의 의회, 의회개혁, 의정감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정보공개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서울시 의정 1년 평가 등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정책활동도 꺾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의 법·제도 개혁을 위한 것과 시의원 및 지역단체와 함께 하는 공동 정책활동이 포함된다. 다수의 지역운동 단체들과 함께 추진한 활동으로서, 이는 현재 서울시의회의 시의원들과 함께 결성한 ‘시정개혁을 위한 시의원-시민단체 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더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96년부터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운동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센터를 별도로 발족시켜 활동을 전개한다.

⑥ 인권센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적어도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민활동 전개를 목표로 설치되었다. 특히 사회복지개혁과 연관되어 이른바 사회적 인권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작성과 회의참가 활동, 그리고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자행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특별사업을 전개한 것 등이다. 후자는 현재 특별위원회로 상설화되어 3년짜리 국제 연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⑦ 내부고발자지원센터

95년 10월 28일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 각층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정의로운 고발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취지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내부의 정의로운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 있었다. 이 지향은 95년 말부터는 “맑은사회만들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으로 통합되어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맑은사회 만들기운동은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각계 각층의 ‘맑은사회 시민선언’ 제정운동, 해외도피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부패추방 시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⑧ 공익소송센터

공익소송을 시민운동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익소송운동에 대한 홍보와 이론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나 세금분야처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이다.

⑨ 기타

이 외에도 여성특별위원회를 두었으나 소규모 토론회와 여성문제 판결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정도의 활동을 전개하는 수준이다.

3) 운동의 참여자

(1) 회원, 임원 상근 활동가의 구성

회원수는 아직 적어서 약 8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임원급(비상설직 전문위원 포함)의 회원은 약 250여명이다. 회원은 회 정관에 동의하여 그 목적에 찬동하며, 정기적인 활동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을 가진다. 사무처 및 활동기관에 상근하는 활동가는 현재 22명이다. 상근 활동가들의 경력을 보면 교수, 변호사, 대학강사, 인권운동, 종교계 사회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언론계 등이다. 또 사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상근자에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다. 상근자의 다수는 청년운동과 인권운동 출신이다.

3. 주요 활동사업

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이 운동은 여론화, 분야별 연대사업, 법률개정 등 제도화 사업 단계 등 세 단계로 추진되었고 이와 병행해서 시민 교육사업과 지방자치제 연관사업을 진행하였다.

여론화 단계에서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소개하고 선언하는 기자회견, 대표적인 공익소송제기(노령수당 확대 청구소송, 국민연금의 공공자금화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간지에 시리즈 기사연재(12회), 유엔 주최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사회복지관련 민간보고서 제출 및 홍보, 사회복지학회에서의 주제 발표, 사회복지 예산증액과 제도개혁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교수 195인 공동기자회견 등이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각 분야별 연대사업 단계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초등학교 장애우와 일반 학생들이 함께 하는 ‘어깨동무놀이 한마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이하 민노준)와 함께 한 ‘연금제도 개혁토론회’, 한국노인의 전화 등 노인복지단체들과 함께 한 ‘노인복지토론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와 함께 한 ‘서울시 보육정책 토론회’가 추진되었다.

법률 개정 단계에서는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노인복지법 개정 청원(1만명 서명)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문제 전반과 각론 그리고 대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학교가 연 2회 개최되어 90명의 수강생을 배출해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원들과 분야별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와 환경보건의료 워크숍’, ‘서울 시정 개혁을 위한 시의원-시민단체 네트워크’ 결성 등을 추진하였다.

현재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로는 ① 운동단체와 언론의 반향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며, ② 국내 처음으로 공익소송운동 영역을 개척해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여론화와 아울러 그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③ 그 동안 중앙정치 사안에 밀려 사회운동의 이슈로 제기되지 않던 사회복지문제를 사회운동과 재결합시켰으며 그럼으로써 복지분야의 시민단체들과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간의 연대를 다졌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①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안보,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구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데,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측면이 크게 부족했고, ② 노동조합 등 사회복지 개혁의 중요 주체들에게서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③ 워낙 낙후한 복지제도를 개혁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책을 개발해 내는데 시간과 역량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운동은 때마침 민노준에서 전개한 ‘사회개혁투쟁’과 연관되는 면이 있었기에 국민연금제의 개혁에 관해서 공동 행사를 하는 등 연대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96년 노동-시민단체 공동 사회개혁과제를 내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전례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노조의 교육프로그램에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주거 등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노동조합과의 연대사업

사안별 지원사업은 이른바 ‘탄압 저지’의 양상으로 여러 번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95년 6월 7일 참여연대가 제안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시민의 한국통신 만들기 토론회’는 한국통신 사태를 노동계 이외에서 접근해서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예이다. 물론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탄압저지’의 활동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인지되었다.

보다 큰 주제를 가지고 노동조합과 연대한 것은 ①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 결성(95년 5월 17일)과 활동, ② 민주노총과 시민. 사회단체간의 정책연대를 추진한 것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환경, 교통, 여성 등 지하철과 연관성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지하철의 종합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그 핵심중의 하나로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연대활동이었다. 이는 노사문제를 포함한 특정 사업장의 문제를 ‘공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후자는 2월 사회개발에 관한 공동보고서 작성 및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 공동 참석, 11월 2일의 '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공동토론회, 11월 7일 민주노총 발족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연대사업의 흐름으로서, '노동자의 시민권 회복'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연대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특히 후자의 흐름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운동계의 공감대를 점점 더 획득해 나가 최근에는 12월 노동-시민단체 간담회 및 정책협의 모임, 96년 2월 초 노동-시민단체 공동정책 워크숍, 96년 2월 '96년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합의 선언'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중 적지 않은 수가 참여연대의 발의와 기획안 제안으로 진행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를 시민사회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불건전하다고 판단해왔다. 참여연대는 노동조합과의 연대 기준을 ① 노동단체의 민주성과 자주성, ② 노동자의 시민권 회복이 갖는 중요성, ③ 사회발전상 노동조합이 갖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가 공감하고 있는 민주주의관, 인권관, 사회발전관이 모두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긴밀한 연대가 사회적 연대의 가장 중요한 연대관계이며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규범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아래로부터 다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권력감시운동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은 사법감시, 의정감시, 인권 및 외교감시로 구분된다.

① 사법감시는 사법감시센터를 통해서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업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평결성향 분석 토론회 /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법개혁 관련자 초청 행사 /

‘열린 법정’이라는 제목의 사법피해사례 청취 모임 /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등의 제목으로 개최된 검찰 개혁 토론회 / 법정모니터팀의 구성과 방청 및 서류모니터 /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판례성향 분석/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등의 제목으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 / 조선일보에 연재한 ‘사법개혁’ 시리즈 기사 / ‘사법 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이라는 사법피해자 및 법률지원단의 모임 결성 및 시민법률상담 / ‘정경유착 철저수사, 검찰 독립 촉구’ 검찰청 앞 시위 / 『사법개혁』 단행본 책자 출판 / 사법감시 소식지 「사법감시」의 발간 및 전 검사 및 판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편 및 가두 배포 /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화 등이다.

사법감시운동은 새로운 운동분야이면서도 상당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법부에 관련된 중요한 권력감시운동이다. 지금까지는 시민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사법성역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러한 사법감시운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 사법기관에게 일정한 긴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권력기관의 투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법감시운동은 중요한 운동분야로 정착될 것이며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 제자리를 찾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운동은 노동 여성 빈민 등 사회약자층의 단체들과 연대해서 분야별 판례성향 분석, 판사별 판례성향 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여론화를 통해 사법감시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시민참여의 새 장을 개척할 것이다.

② 의정감시운동은 의정감시센터가 주관하고 있는데 활동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정감시운동은 아래와 같은 초기 형태의 사업을 거쳐서 앞으로 지방자치관련 사업과 국회감시사업으로 분화되어 더 깊이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오늘의 의회, 의회개혁, 의정감시’ 토론회 /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법률’ 입법청원 /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자료집 발간 /

‘한국의 기초질서와 싱가포르형 질서문화’ 토론회 / ‘의료분쟁법 제정’에 관한 공개토론회 /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 및 성명서 발표 / ‘정국 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정당 시민단체 시국토론회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 보건 복지정책 워크숍’이라는 이름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 초청 행사 / 서울시의회 의정감시백서인 『서울의 정치』발간 및 출판 기념 토론회 / ‘돈세탁방지법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 서울시의원-시민단체 정책협의 모임 / ‘공명선거와 선거개혁의 과제’ 토론회 등이 있다.

③ 인권 및 외교감시는 주요 국제인권기구나 국제회의에 별도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별도의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활동에 대한 직접적 감시와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활동 대상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95 아펙회의 등이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 및 회의참석 활동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노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어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권고안이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다른 시민단체들간의 바람직한 연대활동 사례가 되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4. 운동의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의 초기 활동중점은 단체와 활동방향에 대한 사회적 위상 및 공신력을 높이는데 있었고 이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창립 이후의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빠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적 요인은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순발력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대응성, 그리고 언론 및 홍보관계에서의 적극성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빠른 성장은 외부적으로 참여연대의 필요성과 긍정성에 대한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창립시 참여연대는 나열적인 사업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다짐을 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단체의 활동 목적에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대안이 설정되어 있으며 또 ‘참여민주사회’를 지향한다는 포괄적인 이념을 갖고 있으므로 상당수의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관성을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무차별적인 종합적 시민운동체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과 일정한 관성이 존재하기에 이른바 단체의 종합화 경향과 전문화 경향간에 긴장감이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이른바 ‘전략사업’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

시민대중단체로 서는 것이 참여연대의 기본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라 ‘선 위상 확보’라는 활동 방향으로 인하여 대중적 토대는 현재 취약하다. 1차 년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2차 년도에는 대중적 토대를 쌓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특히 과제로서 20-30대의 회원 다수 영입, 20-30대층 대중단체와 연대성 강화, 지역별 지역운동단체협의와의 관계 설정, 주요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발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대중적 토대는 ① 자체 회원수 증대, ② 주요 대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③ 지역운동단체와의 관계설정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참여와 기여는 참여연대의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나, 창립 초기의 긴장이 줄어들면서 그 수준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뒤바꾸기 위해서 참여연대는 분야별 전문가 참여구조의 특수화, 전문가급 상근역량 확보를 통한 전문가 참여구조 효율화, 실무 활동가의 전문가화, 참여연대에 대한 참여의 가치를 이념화(비정당적 시민운동의 가치의 이념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근 활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보통 과도한 실무와 밝지 않는 앞날 때문에 사회운동에 장기간 종사하는 활동가는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속에 출발했지만 상근 활동가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상근 활동가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본적인 생활임금과 절제된 활동

시간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활동가의 전문성 확보와 예우전통의 수립, 건강한 시민사회 지도자상의 정립, 사무운영설비의 시스템화(정보통신 담당자의 설정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투자 등)와 재정충원사업과 상근자 수 확대 그리고 상근자-자원봉사자 팀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조건이 맞는 상근자들에게 석사과정 수료를 병행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에 꼭 참석토록 권하고 있다. 또 상호 예우와 새로운 인간관계 전통을 위해서 봉건적 호칭을 모두 금지하고 보다 평등한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훈련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활동과 병행해서 정규고등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지원하는 일이다(96년도 4인). 두번째로는 장기 해외 연수프로그램이다(95년, 미국 시민노동권 단체, 1년). 기타 다양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모색하고 있다. 활동가들의 경제적 여건의 신장을 위해서는 급여의 인상과 활동에 수반하는 수익(집필, 기고, 강의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역사적 비전의 설정과 제시에 대해서는, 1차 년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참여민주사회’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시민행동의 가치, 권력감시 및 견제운동의 가치, 총보수화된, 그리고 한계에 부딪힌 한국의 대의정치제도에 대한 대안의 문제, 연대성의 가치, 새로운 사회적 지도력 형성의 중요성을 담론화하고 전파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창립 반년간의 40%선을 거쳐 현재는 30-35%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사업별 독립채산제를 권장한 까닭에 실제 많은 사업이 본부 재정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정적 자율성을 갖고 진행된다. 본부 재정 및 취약한 사업기구의 재정은 창립기금, 사업수익, 내부 모금, 출판물의 기업광고로 충당하고 있다. 재정부담이 큰 사업은 계획과 집행실무력이 갖춰져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차 년도부터는 맑은 사회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회원 확대, 후원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출판기념회나 기타 수익사업 확대로 재정구조를 보완할 예정이다.

6. 27 지방자치선거와 4. 11 총선을 놓고 시민사회와 정치개혁의 문제와 관

련한 논의와 평가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참여연대는 지자체 선거결과 드러난 지역분할구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 지역분할구도의 책임을 오로지 정치권에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본다. 지역주의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할 지라도, 이미 한국사회는 지역주의가 시민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고 지역주의의 대중적 영향력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지역주의의 문제가 시민운동의 중요 관심사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는 지방자치센터를 신설하여 새로운 차원의 사업을 전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에 내재된 지역주의 외에도, 공익 및 인권 의식의 부족, 참여의식과 합리성의 부족, 무임승차주의, 개인주의적 보신주의, 이념적 편견, 봉건적 권위주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수반한 왜곡된 정치관 등이 모두 민주주의의 심화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사회부터 출발하는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지자체 선거의 결과와 총선을 놓고 시민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정치세력화 논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아울러 있었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의 일부가 정치세력화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시민사회의 과제를 정치개혁이라는 협소한 차원에 종속시키는 결과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당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사회의 형성과 근본적 발전이라는 과제를 염두에 둘 때, 시민사회운동세력이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기 전에 자신의 중심과제를 즉각적인 정치개혁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당분간 정당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중요 사회운동단체간에 보다 긴밀하고 보다 깊이있는 연대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의 과제로 설정한다.

5. 연대사업의 내용 및 평가

사회운동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연대사업은 상당기간 동안 사안별 임시적

접근형태를 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래도 노동조합과 주요 시민단체들 간의 수평적 연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상설적인 형태의 연대관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서술한 민주노총 발족 전과 직후의 8개 노동-시민단체들간의 연대사업과 정책협의의 급속한 발전과정을 통해 시사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사회 최대 단일집단인 산업노동자의 시민권 획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기업집단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 사안에 대해서 맺는 단체협상이 기업내 규범화를 위해서 관건적이듯이, 노동조합이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맺는 ‘사회개혁과제에 대한 합의’가 “사회규범이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아래로부터 맺어나가는 중요한 발전과정”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갖는 역할은 핵심적이라 할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노동조합운동과의 연대를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95년 상반기 지하철 안전문제를 놓고 진행된 지하철 노조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과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활동은 그러한 예이다. 또한 95년 11월 민주노총의 발족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관건적인 발전이었다. 이에 따라 그 순조로운 발족과 정부의 무력개입을 막기 위한 국내외 여론활동을 펼쳤다. 노동조합운동의 급속한 발전과 나름대로의 한계를 염두에 둘 때, 그리고 노동조합이 민주화과정과 통일과정에서 갖는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또 재벌의 폐해에 대한 민주노조의 잠재적인 견제력을 염두에 둘 때, 민주노조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체계적인 협의와 협력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건이라고 본다.

6. 연대활동의 필요성과 전망

현재 참여연대는 다른 상설적인 연대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이른바 ‘전선체’라고 하는 조직형태가 그 독보성의 의의를

상당히 잃었으며 그와 다른 연대체계가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연대의 원칙은 유연성, 수평성, 근본성, 비배타성 등으로 잠정 설정하고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유연성과 비배타성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 신축적으로 연대활동과 수준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어느 특정 집단은 안된다”며 상당한 배타성을 띠었던 지금까지의 고정된 형태의 연대운동과 그러한 이념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이기도 하다. 수평성이란 사회운동 이슈의 다변화와 유기적 체계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운동단체간의 연대가 비록 각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되 가급적 평등하게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근본성의 취지는 환경과 인권, 여성, 또는 사회보장제 등 어떤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현대사회의 핵심문제인 노동문제와 산업관계를 도외시키고는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있다.

1) 노동운동과의 연대

이 글에서는 정치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운동과의 연대에 대해서만 말한다. 노동조합은 현대사회에서 최대 규모의 단일한 동질집단일 수 있으며 또 단체협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진로를 결정하는 한 주체이므로 그 중요성은 더 강조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6. 25전쟁과 냉전의 여파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산업사회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만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여론상 배타적인 사회도 드물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일종의 금기가 형성된 듯하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노동조합의 복원과 금기의 타파는 노동조합운동의 적극적인 대사회 연대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연대 대상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시민단체들과 교회와 교육계 등 사회기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재벌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내용중에 적지 않은 내용이 점점 더 사회적인 안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의 비자금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이다. 노조의 독자적인 협상내용과 시

민운동의 목표에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과 시민운동단체들이 아래로부터 연대하여 공동의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쟁점을 유발하거나 제도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규범의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에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규범화를 시도하는 뜻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 체계는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단체협상 또는 집단적 합의를 맺기에 합당한 조직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별 노동자 대표기구, 산별 노동조합, 기업집단별 노조협의회 등의 체계일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운동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조탄압-외부지원’이라는 연대방식에서 탈피해서 ‘사회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운동과 시민운동의 역할’, ‘사회적 연대를 연대주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사회운동과 수평적으로 연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정당성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은 노조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역할에 대한 설파가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설득이다. 아울러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운동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흔히 간주되는 노조가 새롭게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에 시기적절하다. 아울러 사회운동 지형에 상당한 과도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신속한 연대가 가능한 연대사업구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평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장기간의 내부 여론화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

우선 다수의 단체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출발하는 연대사업의 남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단체마다의 특성을 검토해 특정 사업을 특정 단체에 위임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주요 단체마다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연대사업부를 확대하거나 정책부서와 연관된 연대활동 담당자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슈별 연대도 중요하지만 ‘사회운동 지도자양성’을 위한 내적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비전의 교류와 종합, 상근활동가의 자기개발과 후임 양성의 체계화, 새로운 사회운동가 본보기 만들기, 사회운동내 권위주의와 비합리성 타과의 본보기 만들기 등 내적 연대의 과제는 많다.

7. 맺음말

요약하면 참여연대는 “권력이 집중된 곳마다 시민 감시의 눈길과 개입을!” “생활 속의 운동 -복지문제의 운동화!” “투표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희망과 진취성을 제공하는 사회운동으로!”라는 정신으로 출발하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나마 참여연대가 실험하고 또 검증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부실하고 후진적이며 또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공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부패하고 집중된 권력이 많고 또 그 폐해 또한 매우 크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노동운동 처럼 아직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또 과거처럼 탄압받는 사회운동 분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일 것이다.

한편 5. 18문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에서 보이듯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아직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상 우리 사회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인다. 단 사회운동단체들이 그러한 잠재력을 적절한 이슈와 친근한 방법론, 그리고 깊이있는 비전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참여연대의 그간의 활동은 부족하나마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었고, 생활의 문제 즉 사회복지문제를 ‘삶의 질’이라는 담론으로 본격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민주화운동의 전통 위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남겼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활동이 우리사회에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러한 시도가 새로운 전통으로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참여연대는 더 힘차고 더 분명하게 “시민의 바다”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다중의 공론으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체계적인 전망까지 세워야 하는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자료 1> 참여연대의 주요활동 내용

- 헌법재판소 판결성향 분석 토론회 및 여론화
- 서울시의회, 의원 1년 의정활동 평가 및 여론화
- 사법개혁 과제와 방법에 대한 여론화
- 부정부패방지 시민운동(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
- 부정방지기본법 입법과제 토론회
- 격월간 잡지 '참여사회', 소식지 '사법감시', '지구촌 인권통신' 발간
- 복지관계 법개정운동 :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 사회복지학교 개설
- 월례 국제연대 포럼
- 해외진출기업문제 현지 조사 및 '좋은 이웃되기' 시민포럼
- 서울시 의회 복지 및 행정개혁 관련 조례 상정
- 주요 국제회의의 참가(사회개발정상회의, '95 아펙회의 등)
- 한약분쟁 조정 시민법정(추진중)

<자료 2> 연대사업 내용

- 5. 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민간위원회
-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지하철개혁 시민협의회 추진
- 국가보안법관련 국내, 국제 심포지움 주최
- '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공청회 및 공동기자회견 개최
- 시민교통환경센터 창립 지원 및 자매단체 결연
- 시정 개혁을 위한 시의원-시민단체 네트워크 결성 및 운영
- 아파트 주민 법률학교 운영(고양시민회)

<참고자료>

이하 자료중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모두 참여연대에서 발행한 자료임.

-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사법감시센터, 1994.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법안 자료집」, 1994.
-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고서), 민변 등 9개 단체, 1994.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사법감시센터, 1994.
-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사법감시센터, 1994.
- 「공익소송운동」(자료집), 공익소송센터, 1995.
-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자료집」, 의정감시센터, 1995.
- 「노인복지문제 자료집」, 1995.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자료집), 1995.
- 「사회개발정상회의 참고도서 1,2,3」, 1995.
- 「사회복지학교 교육자료집」, 1995.
- 「서울의 정치(서울시 의정감시백서)」, 한울, 1995.
- 「아시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연대의 전망」, 1995.
- 「오늘의 의회, 의회 개혁, 의정감시」, 의정감시센터, 1995.
- 「지구촌 인권통신」(계간 해외진출기업 인권소식지), 1995.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건·복지 정책자료집」, 환경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95.
- 「지방자치와 지역매체의 역할」, 1995.
-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995.
-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 박영률 출판사, 1996.
- 「부정부패방지 입법관제」(토론회 자료집, 법안), 1996.

「사회개혁과 노동조합의 역할」(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등 8개 단체, 1996.

「해외도피 부정재산, 찾을 수 있다」(홍보자료), 1996.

「한국 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 95-96.

1996, 2.

「참여사회」(격월간 잡지)

「사법감시」(격월간 잡지)

「자치+참여」(격월간 잡지)

Ⅲ.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 금 래*

1. 들어가는 말

한국여성단체 활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898년 당시 여성을 억압 하던 구습으로부터 벗어나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여성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찬양회’가 조직되었고 1899년에는 일부다처제에 반대하여 일부일처제를 요구하며 7일간의 시위를 벌인 ‘여우회(女友會)’가 조직되었다. 20세기 들어 개화기 여성들은 많은 여성교육기관을 창설하여 여성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한일합방 이후 여성단체활동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채보상운동, 구국애국운동, 농촌계몽운동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목·자선활동이 전개되었다. 그후 1927년 ‘근우회’의 창립으로 모든 여성단체가 통합되었으며 여성운동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과 항일운동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통합된 근우회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그후 공백기간을 거쳐 6. 25동란을 겪고 195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적으로는 여성의 힘을 하나로 묶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는 UN자문기구인 세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여성운동의 역량을 키우고 세계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을 느껴 김활란 박사를 비롯한 여성 선각자들에 의해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가 설립되었다. 개별단체 활동도 수월치 않던 시기에 제각기 다른 설립 목적과 활동영역을 가진 독립적인 단체들이 여성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연대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여성운동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할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수 있겠다.

1959년 8개 회원단체로 시작한 여협은 1995년 9월 현재 회원이 34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단체 회원을 모두 합치면 약 100만명에 이른다(여협 소속 회원단체명은 뒤의 자료1에 정리되어 있음).

2. 운동의 목표와 조직

1) 운동의 목표

여협은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남존여비 사상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어 헌법에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여성이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또한 받고 있다. 아직까지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고정관념하에 사회적 제도와 관습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힘들게 하고 여성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타파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이 국민으로서 남성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게 하는 것이 여협의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 있다. 그러므로 여협은 우리사회가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각종 사회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또 하나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운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2) 조직의 운영

(1)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여협은 단체가 회원이 되며 개인 회원은 없다. 초창기에는 여성단체가 많지 않아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지도력 있는 인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개인회원제를 일부 도입해 병행하였으나 협의회 성격상 단체 대표자가 아닌 개인이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개인회원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단체만이 회원으로 되어있다.

법인인가(사회단체는 등록)를 받아야 여협에 가입자격이 있으며 정회원은 국내 여성단체로서 전국 지부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여성부 조직체로서 전국지부조직을 갖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3년이상 활동한 단체여야 한다. 준회원은 지부조직이 없는 국내 여성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여성부 조직체이다. 협동 회원은 국내외 외국 여성단체와 교포 여성단체,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는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매년 사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결기구

의결기구로는 이사회 및 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매월 개최하여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상임 임원과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정. 준회원의 단체장으로 하며 상임 임원은 3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상임 임원 후보는 정회원 단체의 전. 현직 임원이어야 하며 여협 회장은 회원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단체장 포함 4인)과 준회원(단체장 포함 2인)이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회원 단체의 임원이어야 한다.

(3) 자문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로는 조직관리위원회,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출판공보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가 있고 이사회 결의로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로는 근로여성위원회, 소비자보호 위원회가 있으며 수시로 필요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학계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재정

여협의 재정은 일반 찬조금, 행사모금, 재정위원회 모금, 광고수입, 임대수입, 회비, 국고보조, 기관지 구독후원금, 사업별 지원금 등으로 충당된다. 1년 예산은 약 5억 정도이다.

(5) 의사결정과정

1년간의 사업계획은 자문기구인 각 분과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이사회, 총회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 실시한다. 그 밖에 수시로 생기는 제반 문제들은 매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협의, 의결되어 집행하며 간혹 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요 사항은 서면 보고되며 모든 회원단체는 매월 발간되는 기관지 「여성」을 통해 협의회 활동을 주지하게 된다.

3. 주요 활동사업

1)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

(1) 가족법 개정운동

1945년 대한민국수립 후 헌법은 남녀평등 사상을 기조로 하였으나 민법상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1953년부터 1955년 사이 11개단체가 주동이 되어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후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성계 활동이 시작되었다. 여협은 이러한 활동을 주동적으로 하는 단체들로 구

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 상담실을 통해 한국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위치와 문제점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자연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1953년부터 1989년 대부분이 개정되기까지 40년 가까이 지속된 운동이며 동성동본불혼제 폐지와 호주제 폐지운동은 아직도 계속되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판결 추구를 위해 대법관들에게 편지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1995년 9월). 37년간 이 운동에 동원된 전략은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여성 연대기구가 두 번 결성되었으며 국회 청원, 공청회, 가두시위, 서명운동, TV토론, 신문지상토론, 홍보물제작, 설문조사, 법에 관한 홍보교육, 관련기관 건의, 국회의원 설득작업, 사례 발표회, 각 당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로비활동, 우호적인 의원 감사패 주기, 반대세력 설득작전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 운동은 이 시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 40년간은 계속 실패한 운동이었다. 실패 요인은 확실한 반대세력(유림)이 있어 그들의 세력이 정치권에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어른 노릇을 하고 있는 유림계층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반면 여성계 주장은 중앙단위의 일부 여성의 주장으로 치부되었고 각 지역에서 정치권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단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법이란 것이 해당되는 사람외에는 일반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일에 여성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였고 성차별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계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37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1980년대말에 와서는 사회인식이 바뀌어 가족법의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게 되었고 유림도 어느정도 묵인하게 되어 여성계의 마지막 공략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었다.

(2) 한국여성개발원, 정부제2장관실,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활동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내 여성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여협은 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하였다. 1973년 전국여성대회에서부터 대통령 직속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기 시작하여 1974년과 1976년 정부에 '여성문제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하고 이후 계속해서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기까지 건의활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한국여성개발원이 연구기관인 관계로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1986년부터 다시 정부 내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1988년 정부제2장관실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여성관련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회내에도 여성문제를 전담할 필요성이 생겨 1994년 6월 61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으로 '국회 여성특별 위원회'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들은 여성단체의 건의로 국내외적인 상황과맞물려 하나씩 결실을 보게 되었다. 여성전문연구기관과 행정부, 입법부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음으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 셈이다.

1973년	9월	대통령직속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 건의
1974년	9월	대통령직속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 건의
1975년	9월	대통령직속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 건의
1976년	9월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치 건의
1977년	8월	여성부 설치 건의
1977년	9월	여성부 설치 건의
1980년	11월5일	여성문제전담기구 설치 건의
1981년	8월	여성문제전담기구 설치 계획 발표에 즈음한 건의문
1981년	11월	여성정책 실천 촉구 서한
1985년	5월	여성발전을 위한 건의
1985년	9월	여성부 설치 건의

- 1986년 11월 여성부 설치 건의
- 1994년 6월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청원
- 1994년 7월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축하회 공동주관

(3) UN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을 위한 활동

UN이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979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다. 한국도 이 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비준을 하여야 하나 가족법 개정 등 불평등한 법을 가진 상황에서 비준을 계속 미루어 이를 촉구하는 건의 및 청원을 하여 마침내 국회에서 비준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2) 여성의 정책결정직 참여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낮고 참여 분야도 한정되어 있던 1960년대부터 여협은 여성의 활동 분야를 넓히고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건의 및 로비활동, 격려회, 축하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였다.

(1) 정책결정직 참여 확대

1963년 보사부 부녀국이 존폐의 위기를 당했을 때 정면으로 존속을 건의하고(1963년 1월) 1963년 보사부 부녀아동 국장을 여성으로 해줄 것을 건의(1963년 12월)한 이후 1964년 12월 여성국장을 위한 취임 환영회를 개최했다. 1969년 9월에는 정부내 여성 근로자를 전담하는 과의 발족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이의 설치를 건의 하였으며, 1970년도부터는 여박사 축하회를 열기 시작한 이래 여동장, 여성구청장, 여성의원, 여성장관, 여류비행사 등의 축하회를 개최함으로써 능력있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였다. 1972년 말에는 제9대 국회에 여성의원을 다수 기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는데 관선 의원의 20%이상을 여성에게 줄 것과 지역구 의원 공천에도 여성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은 오랜 시

간이 걸려 최근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 연대'란 범여성계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에 여성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3년 12월	보사부 부녀아동국장 여성으로 해줄것 건의
1966년 9월	여성공무원 등용 촉구 건의
1967년 4월	정치 풍토 개선과 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정치지도자에게보내는 건의문
1972년 12월	9대 국회 여성의원 20% 참여시킬 것, 지역구 의원 여성 공천 확대 촉구 건의
1978년 9월	정부 각부처 여성 진출 적극 지원 건의
1985년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와 정치의식의 고양대책 심포지움
1986년	여성정치의식화 교육 실시(5회)
1987년 7월	공청회 개최-개헌과 여성, 양대정당에 묻는다.
1988년 4월	여성의 국회진출을 위한 공청회
1988년 6월	서울시 여성국장 탄생 축하회, 여성국회의원 축하회
1989년 10월	오늘의 정치. 사회적특성과 여성-전국여성대회
1990년 1월	지방의회 여성진출을 위한 여성계 협력 방안 모색회의
1990년 3월	민자당최고위원방문 : 지자체 여성참여보장촉구
1990년 12월	민자당최고위원방문 : 지자체 여성참여보장촉구
1991년 1월	지자체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보완 요청 건의문 전달
1991년 3월	기초의회 여성후보자 지원 전단 제작. 배포
1991년 4월	기초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축하회
1991년 10월	여성의 정계 진출을 위한 정당 지원 요청
1992년 2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992년 3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제14대 전국구 의원 공천 관련 성명서
1992년 6월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

- 1992년 10월 "새시대의 주역, 여성의정치참여" 전국여성대회 1992년
12월 공명선거 캠페인
- 1993년 3월 여성장관 3명 탄생 축하모임
- 1994년 8월31일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

(2) 여성공무원 진출 확대

1978년 2월 체신교환 및 타자여자공무원 정년 연장을 건의했고 1983년 6월 서울시가 계량기 검침, TV시청료 징수원 채용을 남자에게만 국한시킨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이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어 여성들도 채용케 하였으며 1984년 10월에는 서울시가 지하철 공사 직원 채용을 남자로 제한한 것을 항의하여 여성 역무원도 채용하게 만들었다.

1984년 2월에는 여성이 대부분인 기능직 공무원의 조기정년제 철폐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1987년 1월에는 총무처시행 시험계획공고에 항의하는 공문을 관련부처에 발송하였다. 군필 남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의 공무원 진출기회를 봉쇄 하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최근에 와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 폐지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국방부, 재향군인회, 국가보훈처 등의 반대가 워낙 거센 데다가 이를 결정하는 위원 멤버가 1명외에는 전원 남자라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1993년에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하여 여성공무원 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 의장, 법원 행정처장, 총무처 장관 등을 방문하여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차별 철폐를 약속받았다. 그 결과 1993년 12월 공무원 수당 등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지침이 발표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국회 여성 공무원들의 정년이 연장되었다.

(3) 근로여성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활동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위주 정책으로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여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여협은 초창기인 60년대에 직업 여성을 위한 숙사를 개설하고 여차장 처우 개선 좌담회, 한국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근로자 지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저소득 여성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취업여성문제에 사회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마다 개최하는 '전국여성대회'에서 근로여성의 평등권 보장과 여성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제도 마련 및 직업재훈련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1983년부터는 여성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1986년 근로현장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여성 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매년 세미나, 좌담회, 연구조사 등을 통해 근로여성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협이 직접 처리한 대표적 고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교환원 정년차별 사건(1983년-1993년)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통신공사)가 여자들이 절대 다수인 교환원의 정년만을 55세에서 43세로 낮추자 김영희씨는 이 조치가 남녀차별대우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1983년 1월 14일 정년무효확인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은 남녀고용차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투쟁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여협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기자회견이나 언론홍보를 하고 여성차별정년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건 당사자인 김영희씨에게 제1회 '올해의 여성상'을 시상하여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지원을 하였다. 1983년에 시작한 이 재판은 1989년 4월 19일 교환직렬직종은 여성전용직종으로 보아야 하고 이 직종을 다른 직종과 달리 정년을 낮게 정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 결과로 인하여 김영희씨는 복직이 되었고 통신 공사는 소송중이던 1984년 6월에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환원의 정년을 50세로 연장하였고 현재 교환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상 53세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 정년

연장조치에 따라 다른 직종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되자 새로운 정년 차별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통신공사는 1992년 12월 31일 53세인 김영희씨를 정년퇴직시켰다. 이에 김영희씨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 하고 1993년 3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정년퇴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고 1993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1993년 9월 "교환원 정년은 남녀차별적 규정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 승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통신공사측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93년 9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결국 1994년 9월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 1994년 12월 원직 복귀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한 권리도 개인이 10년씩 외로운 투쟁을 해야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여협은 이 사건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② 한국전력공사 사원 모집광고 사건(1989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1989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남녀간에 자격요건의 차이(64년 1월1일 이후 71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남자, 70년 1월1일 이후 71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미혼 여자)를 명시한 사원모집광고를 냈다. 이에 여협은 이를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발하였는데 노동부는 관할지방사무소인 서울 동부 노동사무소에 이 사건을 이송하였다.

지방노동사무소는 당해 공사의 인사규정을 심사하여 여성의 결혼이 신규채용조건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응시자격기준에서 남녀간 연령상의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규채용조건이 근기법 제5조와 고령법 제6조 위반임을 적시하여 당해 공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시정지시를 내린바, 당해 공사측이 이를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③ 목포대학교의 기혼여성 해고사건(1990년)

목포대학교는 기성회에서 4년내지 10년간 근무하던 기혼여성 근로자(임시

직) 6명을 1990년 3월 5일 재정 형편과 신청인들의 근무불충실을 재임용탈락의 이유로 제시하며 구두해고 하고 3월 17일 그 자리에 미혼여성을 대체 임용하였다. 이에 해고당한 여성 근로자 5명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라 1990년 3월 28일에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6월 15일 전남지노위는 이 신청사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 원직복귀명령서를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원직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던 중 목포지방 노동사무소의 이행촉구가 있자 지노위의 명령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지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여 소급발령을 한 것은 아니고 임금소급지급명령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해 근로여성들에 대해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1월 1일자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발령하였다. 그러나 당해 근로여성들은 이러한 인사조치는 지노위의 원직복귀명령과 상치된다고 하여 11월 5일 임명장을 반환하면서 근무를 거부하고 전남지노위와 목포지방 노동사무소에해고당시로 소급발령하여 임용장을 교부해 줄것과 해고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한 호봉승급 조치 및 그에 의한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여협은 목포대학교에 의견서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관계관을 만나는 등 당해 근로여성의 원직복귀를 촉구하였다. 이에 학교측은 2월 28일 원직복귀의 재발령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지노위의 원직복귀명령이 있는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복직되지 못하고 있던 중 노사간의 타협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여협은 이 사건을 7개월간 지원하였다.

④ 진주 MBC의 임신, 결혼퇴직사건(1990년)

위 방송사에 1985년에 입사하여 아나운서로 근무해오던 근로여성이 1989년 10월 결혼하자 그 직후 1990년 1월 1일자로 총무부로 발령되어 도서출판, 음반취급 등의 단순 업무에 배치되었다. 또한 1986년 프로듀서로 입사해 근무해오던 근로여성을 결혼 후에 불성실,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업무상 불필요하다고 하며 1990년 3월 26일에 위 아나운서와 함께 해고하였다.

이에 당해 근로여성들이 여협의 도움으로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하였다. 1990년 5월 16일 경남지노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원직복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방송국측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1990년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 1991년 8월 25일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고법은 1992년 5월 30일에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함을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여협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원하여 긴밀한 협조하에 재판을 진행시켰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여론화시키는 등 지원을 하였다.

이밖에도 미혼 여사원(이경숙)이 1983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이 여성은 25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배상금을 산정하여 판결하자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여협은 후원단체로 지원을 하였다.

1968년 9월	정부 공무원훈련기회 여성에게 개방할 것 촉구
1969년 9월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재취업확대,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 시정촉구, 행정관청에 여성근로자 전담하는 과발족요청, 노동 단체도 여성상임부서를 두고 여성조합원 권익옹호에 만전을 기할 것. 전국농촌에 탁아소 운영, 지원 건의
1971년 4월	저소득 근로여성문제세미나
1975년 9월	'산업사회와 여성' 전국여성대회
1975년 11월	불우근로여성의 당면과제와 국가개발 세미나
1976년 7월	4. 5급 공무원 채용시험관계 시정 건의
1977년	근로여성문제 위원회 설치
1977년 3월	제일은행 여행원 공개입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건의
1978년 9월	근로여성 승진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요구, 건의
1982년	근로여성의 인력개발과 그 활용 세미나
1983년 4월	여성고용촉진법 제정 촉구

한국 신사회운동의 특성 및 노동운동과의 연대 177

1983년 10월	근로여성문제좌담회 - 차별정년 무효확인 소송을 계기로 본 여성차별문제
1984년 4월	미혼여사원 윤화사건에 따른 법원판결에 관한 건의
1984년 10월	신입사원 공채에 관한 건의
1984년 11월	취업상의 남녀차별에 관한 토론회
1985년 10월	9급 행정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건의
1986년 4월	여성차별정년 철폐를 위한 좌담회
1986년 8월	근로여성고발창구 개설
1986년 11월	사립중고교사 채용상의 남녀불평등 철폐 촉구 성명서
1987년 4월	결혼퇴직에 관한 공개토론회
1987년 10월	근로여성의식 및 실태조사
1988년 5-10월	100시간 노동상담 실무자교육 실시
1989년 4월	김영희씨 여성차별정년 무효확인소송 승소 축하회
1989년	60시간 노동상담 실무자 교육 실시
1989년 8월	채용, 배치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세미나
1989년 10월	"여성차별 정년의 실태와 전망-입법, 사법, 행정부를 중심으로" 세미나
1990년 7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탁아실태조사
1990년 8월	근로여성고발사례발표회 - 진주MBC건
1990년 10월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토론회
1990년 12월	근로여성차별 사례집 발간
1991년 10월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1991년 10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세미나
1992년 6월	여성인력의 불안정고용실태 및 그 대책 간담회
1992년 10월	삼성그룹에 남녀차별철폐 인사제도에 대한 지지공문 발송
1992년 10월	제조업 근로여성의 육아실태에 관한 조사
1992년 11월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1993년 5월	남녀차별 정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1993년 8월	여성공무원 차별철폐 건의를 위한 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면담
1993년 9월	여성공무원 차별철폐 건의를 위한 총무처장관면담
1993년 11월	공무원직에서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관한 연구결과 - 발표 및 보고서 발간 -
1993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향에 대한 세미나
1994년 11월	여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994년 11월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1994년 12월	검찰의 용모제한 기업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3) 여성의 세력화·조직화를 위한 활동

여성의 힘을 하나로 묶어 여성의 힘을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협의체인 여협의 존재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다. 이 힘으로 여성 관련 문제가 정책으로 채택되게끔 압력을 가하고 여성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다.

한 단체의 힘은 미약하나 몇십개 단체로 구성된 여협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 이를 가시화 하는 행사가 '전국여성대회'이다.

(1) 전국여성대회

매년 전국에서 3,000여명의 단체 지도자가 모여 1년간 이룩한 여성정책을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고 지도자간의 단합을 도모한다. 또한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 및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송부한다. 이 행사에는 고위 정책결정직에 있는 인사들이 초청되는데 대통령내외를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대회에 참석하여 전국에서 모인 여성의 열기를 확인하고 여기에 채택된 건의문이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1962년 여성대회를 시작한 이래 금년으로 3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 전국 여성지도자연수

회원단체 및 전국의 지방 여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에서는 전국여성대회의 주제 방향을 정하고 여성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운동의 전국확산을 도모한다.

(3) 여성정책토론회

여성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성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 및 중요 인사를 초청해 여성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복잡한 부처 업무로 여성관련 업무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관을 초청함으로써 그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챙겨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여성정책을 건의함으로써 장관에게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1991년 5월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초청
1991년 5월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 초청
1992년 6월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후보 초청
1992년 6월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후보 초청
1994년 3월	서상목 보사부장관 초청
1994년 5월	김숙희 교육부장관 초청
1994년 7월	최형우 내무부장관 초청
1994년 9월	권영자 정무제2장관 초청
1995년 2월	김중위 환경부장관 초청
1995년 4월	이형구 노동부장관 초청
1995년 6월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 초청
1995년 11월	김기재 총무처장관 초청

4) 바람직한 여성상 부각 활동

(1) 용신봉사상

일제시대의 여성 선각자로서 농촌지역 계몽과 교육에 힘쓴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 여사를 기리기 위한 상으로 1963년부터 매년 평생을 사회발전에 헌신한 여성에게 시상하고 있다.

(2) 올해의 여성상

이 상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여성으로서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자랑스러운 여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3) 마스크 모니터링 활동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현존하는 남존여비 사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마스크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여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1984년부터 마스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마스크에서의 성차별을 시정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성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니터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 결과를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마스크를 통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드라마에 있어서의 여성비하 및 성편견의식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여성 MC의 역할 증대 및 여성방송인 육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광고에 있어서의 여성 상품화 문제를 다루어 광고시정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광고업계에서 견제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1984년 11월 8일	제1기 모니터 교육(인원 32명)
1984년 12월 7일	제 1차 모니터 보고서 송부
1985년 2월15일	뉴코아백화점 광고 시정 촉구->시정조치
1985년 2월23일	방송심의위원회, 각 방송사에 '여성상에대한 편향적인 묘사 억제 권고' 결정
1985년 5월 6일	KBS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혼자서도 잘'

한국 신사회운동의 특성 및 노동운동과의 연대 181

- 1985년 11월15일 해요'프로그램에 여아 출연권고 결정
방송관계자와의 간담회(인원 60명-방송작가.
연출가. 학자. 시청자)
- 1986년 12월 4일 매스컴 모니터 세미나
주제:여성과 대중매체(드라마,어린이,광고 등 3
개 분야별 토론)
- 1987년 6월18일 (주)쌍방울 실버벨 스타킹, 뉴인나 미드리오 광
고 시정조치. 조선맥주 광고 해명 및 시정조치
- 1987년 10월28일 여성의 상품화, 허위 과장광고 전시(소비-11월
2일 자주간 전시회)
- 1987년 12월 1일 매스컴모니터 세미나(주제 : 여성과 광고)
- 1988년 12월 7일 매스컴모니터 세미나(주제 : 영화포스터-진단과
대책, 외설 영화 포스터 전시)
- 1988년 12월 외설적인 영화포스터 제거운동. 서울시에서 극
장주에게 영화포스터 시정 경고조치/문화공보
부에서 영화광고 물 단속/공연윤리위원회에서
음란. 퇴폐 광고물 고발장구 설치
- 1989년 2월 음란. 외설잡지 분석, 시정촉구
- 1989년 6월14일 '광고와 소비자'세미나
- 1989년 10월24일 과장광고, 과대광고, 외설. 퇴폐풍조 조장-28일
광고 전시(소비자주간 전시회)
- 1990년 3월 여성경멸격언 연재한 [관보]발행총무처에 항의
- 1990년 10월12일 월간 '신부'9월호 내용및광고에 대한 항의
- 1990년 11월15일 매스컴 모니터 세미나(주제 : 대중매체에 대한
국민평가운동방향)
- 1990년 12월 「매스컴 모니터 활동보고서」발간(제 1차)
- 1990년 12월 3일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및 「퇴
폐,과장,과소비,성차별 광고 전시회」개최

1990년 12월	「인쇄매체 광고실태 조사연구 보고서발간
1993년 2월	남녀공동진행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토론, 보고서 송부
1993년 3월 5일	방송 연기자과 시청자와의 만남-좋은 드라마를 위한 간담회(50명)
1993년 12월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부인식조사」 보고서발간
1994년 12월	TV드라마 내용 및 인물 분석 보고서 발간 및 발표
1995년 11월	「정치드라마의 현실과 미래」토론회 개최

5) 국제 활동

세계 8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여성운동단체와 연계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여성계 활동을 소개하는 등 민간외교를 담당하고 있다.

여협은 1976년 제7차 ‘아세아여성단체연맹’(FAWA)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1982년에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였으며 홍숙자 회장이 세계여협 회장에 선출되어 국제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여성운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오찬행사를 여협 초창기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방 외국인을 위한 간담회가 1년에 몇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 1963년 6월 ICW 창설 75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여협은 국제회의에 대표를 꾸준히 파견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여성계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에 2명, 1980년 코펜하겐 세계여성대회에 6명,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는 8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는 126명이 참석 하는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6) 출판홍보활동

여성단체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여성의식 확산을 위해 1964년 9월 월간지 「여성」을 창간하고 연11회 발간하고 있다. 또 외국에 한국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계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1965년부터 영문으로 「Korean Women」을 연1회 발간하고 있다. 그밖에 활동영역별로 조사연구보고서, 홍보책자, 활동보고서 등을 수시로 발간하고 활동상황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7) 소비자보호운동

경제가 불안정했던 1960년대 여협은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1965년 ‘소비자각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소비자각성운동을 펼쳤다. 1966년 이스라엘 국제소비자세미나에 대표를 파견한 여협은 국제사회에서의 소비자운동의 대세를 파악하고 1970년 3월 소비자문제만을 전담하는 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면서 전문적으로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조직화할 필요를 느껴 여협은 여협의 자산과 사무실을 기초로 경제 기획원에 등록을 하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이하 소협) 발족에 산파역을 하였다.

여협의 회장이 소협 초대회장을 맡고 소협이 독립할 때까지 사무처를 여협에 두는 등 오늘날 소비자보호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여협은 오늘날까지 소비자교육, 조사,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소비자운동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8) 환경보존운동

1970년대 들어서면서 여협은 공해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여성」지에 서울대 기우식 교수의 “도시의 공해문제”를 게재하고 공해문제 현황을 소개하였다. 1971년 전국여성대회 주제를 “인간환경의 위기”로 정하

고 1972년 2월 ‘환경보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5월말 유원지 일대에 쓰레기통 비치 활동을 펼치고 맑은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2년 6월에는 UN세계환경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1973년에는 “자원고갈의 위기”를 여성대회주제로 정하였으며 70년대를 일관하여 환경과 공해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통 난, 쓰레기 수거 방법, 자원난 등 생활에서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나 사회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회원단체에 대한 교육내용이 환경문제로 주로 구성되고 조사사업도 환경오염, 식품오염, 쓰레기 재활용 등의 문제로 진행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협의 사업방향 큰 두 줄기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만들기”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만들기”이므로 환경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요활동이 될 것이다.

9) 기타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사회계몽 및 대사회활동은 일제시대부터 여성단체의 주요 활동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받은 여성선각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었다. 그런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여협은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 성숙한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건전가정가꾸기운동, 세계장애자의해 기념 심포지움, 세계아동의해 기념행사, 불우이웃돕기, 질서지키기 캠페인, 깨끗한 거리 만들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공청회, 백화점 사기세일 항의 캠페인,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명선거캠페인 등 사회속에서 함께 숨쉬며 공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4. 운동의 평가와 당면과제

1) 운동의 평가

여성운동의 성격상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나 정치인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활동이 축적되어 사회분위기도 바뀌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여성정책이 채택되기 때 문이다. 가족법을 놓고 보더라도 37년간은 계속 실패했으나 현재 시점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시도한 전략이 좋아서 성공했느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지난 37년간의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반면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은 광역의회 선거법까지 바꾸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50%이상을 여성에게 준 것을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하나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이 세계 137개국중에서 90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면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더구나 목표를 여성참여 20%로 보면 아직 실패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열매를 맺은 것은 성공한 사업이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성공을 향해 진행중인 사업일 뿐이다. 여협의 활동에 대해 자체 평가를 간단히 하자면, 지난 36년의 역사속에서 때로는 굴절되고 때로는 실패했어도 여협은 여성운동의 구심체로서 여성에게는 꾸준히 후원자 및 대변자의 역할을 해왔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운동의 문제점

여성운동의 최대 걸림돌은 첫째, 유교문화에 근거한 뿌리깊은 성차별의식과 사회편견이다. 사회전반에 깊숙히 자리잡은 성차별 의식은 평등한 법과 제도 마련을 어렵게 만들며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사회화된 여성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며, 문제의식을 느끼는 여성들 또한 견고한 벽속에 혼자 갇힌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들을 잘 조직화해서 여성운동의 주요 에너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누가 해주겠지 하는 무임승차 심리가 작용하여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원은 적다. 그런 이유들로 여성은 국민의 과반수이며 유권자의 반을 넘지만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지도층이 전부 남성이라는 것이 여성운동의 큰 장애요인이다. 이는 여성문제를 체험하고 공감할 기회가 없는 남성들로서는 여성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지도 않고 어느정도 절실한 문제인지 설명을 들어도 본인의 문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책과제 중에 여성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셋째, 여성학 연구자와 여성운동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자들은 한국 실정에 맞는 여성학 이론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이슈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해주며 여성단체 또한 연구결과를 현실화시키는 상호보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극히 일부에서 부분적인 협력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넷째,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산적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단체들은 모금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어 실제 운동 자체에 참여야 하는 노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인원이 부족하므로 직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 구상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전략이 앞서가야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3) 운동의 당면과제

그동안의 여성운동의 성과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평등은 어느정도 보장이 되고 있으나 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과정이 당면과제로 남아있다. 남녀고용 평등법이 있어도 기업들은 실제로 채용에서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성을 배제시키고 승진, 교육, 임금, 정년 등에 있어서도 묵시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 이를 단계별로 감시하고 평등권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 및 경제분야의 고위직에 여성 참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50%에 육박하나 특정분야에 저임금군을 이루고 있어 공무원 등 정책 결정직 및 각급 의회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이 시급히 요청되고있다. 또한 정보분야 과학계, 공학계 등 특정분야에의 여성진출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하고 여성 인력의 고급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여성 참여가 극히 저조한 분야에의 여성 진출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밖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성문화(性文化)를 바로 잡는 일, 중산층 전업 주부들의 무력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건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 노령화에 대비한 사회 지원 체제 구축, 육아지원 등을 위한 활동, 남녀간의 의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남성 교육 등 아직도 여성운동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5. 연대활동의 내용 및 평가

여협은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관계로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협의체 자체가 수십개 단체로 이미 연대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성격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단체가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 아니면 내부에서 연대활동 자체에 대해 불만이 나올 소지가 많으며 협의체가 다른 개별 단체와 연대하는 것에 대한 자격 시비가 곧잘 일어나곤 한다. 그런 연유에서 가족법 개정을 위한 두 번의 연대활동에서 처음에는 회

원단체와 같이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나 나중에 구성된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에는 후원단체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협의체란 특성때문에 연대 기구 자체에 별도의 참여자격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그런 협의가 잘 성립되지 않으면 회원단체의 반대로 참여가 어렵게 된다. 또한 연대활동을 하다보면 협의체가 다른 개별단체와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회원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처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성계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는 연대활동을 해왔는데 '90년대 들어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90년대 들어 활발해진 연대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여성단체끼리의 연대는 비교적 성공적이거나 남성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다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위주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연대는 여성단체를 똑같은 참여단체로 평등한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 여협은 들러리 정도가 되거나 연대목적이 변질되어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해 여협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1) 여성단체와의 연대

활동목표가 같은 여성단체와의 연대는 초창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장기적인 연대활동을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밖에도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이경숙씨 교통사고 배상사건'이나 '변월수씨 성폭력 사건'을 후원하는 등 여성관련 이슈에 대한 여성단체간의 연대는 타단체와의 연대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1)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헌법에서 이미 남녀평등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新民법 기초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고려치 않아 여성계에서는 1953년부터 이태영박사를 중심으로 건의서 제출, 국

회의원 방문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7년新民법이 제정되기까지 좌담회 10회, 강연회 134회를 개최하였다.

그후로도 여성계는 끈질기게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다가 1973년 6월 28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이하 촉진회)를 결성하게 된다. 여협의 이숙중회장이 촉진회 회장을 맡고 61개 단체에서 1,200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개항의 개정요강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송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부산, 목포지회를 결성하였다. 이 촉진회는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하나의 정식단체를 만든 것으로써 회칙 및 상근 직원까지 두었으며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끈질긴 노력으로 197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가족법 일부가 개정된다. 또한 가족법 일부 개정과 아울러 1978년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되어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았다. 그동안 촉진회는 61개 회원단체를 통해 서울 및 지방에서 300회 이상의 강연회를 열었고 신문과 잡지 등에 200회가 넘는 지면을 통해 가족법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등 활약하였으나 1977년 가족법 일부 개정으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 촉진회는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여성들간의 결속력과 열성이 높았으나 법개정 과정에서 일부의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회는 가족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세력이었고 국민들에게 가족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1984년 7월 18일 여협 산하 26개 회원단체와 15개 비회원 단체 등 41개 단체대표들이 모여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이하 연합회)를 발족시킬 것을 결의하고 이태영 소장을 회장으로 7명의 부회장과 실무자를 선임하였다. 이후 조직확대를 위해 사회단체에도 협동회원 가입을 요청해 83개 단체가 가입하게 되었다. 여협은 협의체인 관계로 회원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회원단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후원 회원단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연합회는 1989년 가족법이 개정될 때까지 백만인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개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끝맺음을 하였다. 그러나 연대형식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83개 단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중간에 참여 단체장들이 바뀌었고 유럽과의 지루한 대치가 몇몇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을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 목표를 위한 연대활동은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짧은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참여율과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여성계에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고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할당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1994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 일정비율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는 후 여성계 요청에 의해 한국여성개발원이 할당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을 주선하였다. 이에 그동안 할당제를 주장해왔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대표들이 모여 한시적인 조직체로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기로 하고 할당제 우선 목표를 '95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로 하고, 여성 할당 1차 목표를 20% 정도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1994년 8월 31일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 연대 규약은 연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으로는 공동대표 2인(여협 회장과 여연 회장),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2인을 두고, 기구로는 참가 단체가 파견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활동은 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었다.

재정은 참가단체에서 공동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는 참여단체에서 공동 참여하여 집행하되 연락처는 여협과 여연 사무실로 하였다. 연대활동의 첫 사업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여성할당제 도입에 관한 설

문조사를 하였다.

운영위원 단체들이 분담하여 국회의원의 기명 답변을 취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1995. 3. 3) 민자당의 대표위원(1995. 3. 3)과 민주당 총재(1995. 3. 10)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여야 합의로 통합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광역의회에 1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이 10%의 상당부분을 여성에게 할애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통합선거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명시에 관한 건의문을 민자당,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민주당 총재를 제차 방문하여 광역의회에 더 많은 여성 할당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91년 선거시 광역의회에 8명이던 여성의원 수가 95년에는 55명으로 0.9%에서 5.67%로 늘어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20% 목표에는 못미치지만 91년에 비하면 7배가량 늘어난 숫자로서 짧은 연대활동 기간에 비추어 볼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연대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론·홍보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여론의 환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작업의 실시 및 결과발표를 통하여 '할당제'의 의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긍정적인 사회 여론을 도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점은 특히, '할당제'라는 용어의 의미조차 인지되지 못했던 현실을 타개하고, 여성의 과소대표성으로 인한 여성차별 현실의 재생산 고리를 끊어내어 향후 2,000년대의 남녀 공동참여, 공동책임 사회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대활동의 귀중한 성과로 남겨질 것이다.

② 정부 및 정당 압력활동으로 인한 제도도입의 기틀 마련

지방의회 여성의원 20%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당에 20%의 여성을 공천해 줄 것과 당선가능성이 많은 2인의 선거구에는 반드시 여성을 공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도입정신에는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례대표 의석 전부(10%)를 여성에게 할애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당 압력활동으로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유권자(일반 여성대중)의 인식 변화의 전환점을 제공

본 연대의 활동은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는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같은 조건이라면 능력을 갖춘 여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 의식변화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여성단체의 광범한 연대망 구축의 발판을 마련

이제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던 여러 여성단체들이 연대틀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이후 여성사안에 대한 광범한 연대의 계기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 여성의석의 확대

1991년에는 광역, 기초를 합해 모두 0.9%에 불과하던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1995년 제2기 지방선거를 통하여 광역의회의 5.67% 기초의회의 1.58%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본 연대활동의 큰 수확이라 평가되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향후 여성정치진출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4) 한국 여성NGO위원회

한국여성단체들은 국내 여성단체들간의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고 1995년 제4차 UN세계여성회의의 NGO포럼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31일 '한국여성NGO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동대표로 여협, 여연, 유권자연맹 회장이 선출되고 9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었다. 별도의 실무자를 두고 UNDP, 정부, NGO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

였으며 96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위원회 활동은 UN세계여성회의를 위한 국내 차원의 준비활동과 회의 기간 중 한국과 한국의 이슈를 부각시키는 활동과 회의 후 평가 및 회의결과를 국내여성운동과 연결시키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96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여성포럼 준비와 개최로 계속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여성단체가 총망라되어 연대하여 국제적인 활동에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다는 점과 세계여성운동에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영향력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2) 시민단체와의 연대

여협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회원단체로 참여하여 다른 시민단체와 공동목표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1) 김보은·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보은·김진관 사건의 법률지원과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위하여 '92년 3월 3일 4개 여성단체와 8개 대학을 중심으로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심 재판후 확대 공동대책위원회(전국 56개 여성, 사회단체와 학생대책위)를 결성하고 21인의 공동변호인단과 9인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법적 지원과 사회여론 환기를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대책위 활동에서 실무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재정은 참가 단체가 분담하였으며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사업방향과 활동을 결정하였다.

조직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위원장 : 박상희(김부남 사건 공동대책위원장), 최영애(성폭력상담소장)

여성, 사회단체-전국 56개 단체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8개단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

민연합, 김부남사건대책위, 대구지역 성폭력대책협의회(8개단체), 대전YWCA, 바리터수원여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당시 26개단체),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학생대책위-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학생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이대대학원 여성학과

이러한 공대위 활동 결과 항소심 공판에서 김보은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진관은 징역 5년 선고(9. 14)를 받고 대법원 상고기각 후 '93년 3월 대통령특별사면 발표'로 김보은 실효 사면, 김진관 잔여형기의 1/2감형을 받았다. '93년 5월 10일 공동대책위원회는 자체 평가후 해체되었다.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성폭력 중 가장 터부시되어온 근친강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낸 사건으로 그동안 몇몇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온 성폭력 대책활동을 제 여성, 시민, 학생단체간의 조직적 결합과 전국적인 응집력으로 한단계 발전시켜 성폭력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공조체제를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평가된다.

(2) 성희롱대책시민연대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를 바로잡고 '서울대우조교성희롱사건'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1995년 9월 29일 공대위를 발족하게 되었다. 서울대 우조교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성희롱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을 갖고 여론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항소심 패소 후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성희롱대책시민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 활동의 실무는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은 참가단체가 분담하고 있다. 서울대 성희롱사건 공대위와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출발하여 연대 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방송개혁국민회의

1993년 10월 여성단체 및 사회운동 단체, 종교계의 언론대책위나 모니터 모

임, 그리고 언론관계 시민운동 단체와 학술단체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여 ‘방송바로세우기 시청자연대회의’(이하 시청자연대회의)를 발족시켰고 이 연대회의는 94년 9월에 방송사 노조협의회와 방송현업인 단체, 법조계, 문화계, 교육관련단체, 노동계의 47개 단체가 참여하는 ‘방송개혁국민회의’로 확대 된다.

이는 시민언론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보완적 협조자의 위치에 있던 언론노동운동이 시민언론운동과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설 기구화를 통해 언론 전반 또는 방송관계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개혁까지도 요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시청자연대회의’는 방송의 저질 상업주의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고 동시에 공공방송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시청자 주권을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방송법제의 개혁과 방송프로그램의 개혁, 그리고 시청자 의식개혁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에 비해 ‘방송개혁국민회의’는 문민정부하에서 방송구조 변화가 국민의 요구와는 상반되게 진전되고 있으며 정부가 상업방송이나 방송매체의 허가를 독점하고 무분별하게 남발함으로써 저급 외래문화의 범람이나 방송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협은 방송모니터 단체로서 ‘시청자 연대회의’에 참여하였으나 11개 단체와 같이 ‘방송개혁 국민회의’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면서는 애초의 연대참여 목적이 희석되고 다른 정치적 쟁점에 주력하게 되어 최근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0월 14일 ‘김영삼 정권 실정 규탄 및 민주개혁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5. 18 국민위원회, 의료보험연대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이하 민주노동준비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등과 공동 개최하면서 5. 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촉구, 근로자 파견법 도입, 전임자 축소 등 노동악법 개악 저지,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재벌의 방송소유 반대 등 방송법제 개혁 촉구 등을 주제로 내세웠다. 이는 순수하게 시청자 운동 차원에서 연대한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 또한 10월 26일 방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특정당과 공동 주최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색을 띠

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시청자 운동 단체는 시간, 인력 등의 여건상 이름만 걸게 되고 방송사 노조 등 이 연대사업에 전력할 인원이 가능한 한두개 단체에 의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어 타 단체는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면서 의견 개선 기회도 없고 애초 목적이 상실되어 여협은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이 연대활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4)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95년 지방자치 4대 선거를 앞두고 YMCA, 홍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명선거캠페인, 공명선거 감시활동, 후보초청토론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을 목표로 구성 제의를 해 와 여협도 동참하기로 하고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 두 단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고 심지어 공동대표 단체 조차 모르는 사업과 기자회견 등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공선협을 별도로 발족시키게 됨에 있어 여협은 서울지부가 없는 관계로 서울 공선협에는 참여치 않음을 밝혔으나 나중에 참여단체 명단에는 여협이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뜻이 좋다고 중간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한 두 단체가 남의 단체 이름만 빌려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껴 탈퇴하게 되었다. 공선협은 시대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연대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나가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보여진다.

3)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

(1)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직장내성희롱 금지조항신설과 근로자과건 법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노동단체가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4년 여연과 민주노총 준비위 명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을 시작하였고 '95년 4월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고평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성희롱 공대위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 설득작업을 하였다. 그후 2차 청원위원회 확대를 위한 교섭이 진행되어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금융노련),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무금융노련), 여협, 여연 등 10개 단체가 연석회의 후 7월초 고평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을 하였다. '95년 7월 15일 임시국회에서 고평법이 전격 개정되자 즉각 국회여성의원에게 고평법 개정의원 입법 추진을 위한 공문을 전달하고 조문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10월 9일 공대위가 발족하였다.

공동대표는 사무금융노련, 금융노련, 여연이 맡고 있으며 참여단체 10개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등이다. 이 공대위는 현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무실을 정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국회일정과 국회내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문제로 공대위가 출범하였으나 파견법 개정 반대운동이 추가되면서 주요 전략과 방향에 단체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6. 연대활동의 필요성과 전망

1) 노동운동과의 연대

근로여성문제는 여성운동 차원에서 푸는 것보다 노동운동 차원에서 노조활동을 통해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과거 노조내에서 여성 조합의 문

제를 중요 이슈로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남성들로 구성된 노조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여성문제를 가장쉽게 포기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UN에서는 2,000년까지 사회 각급직에 여성 참여가 30%이상 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노조대표에 여성노조원 수만큼의 비율로 여성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30%는 여성대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여성계 주장이 노동계에도 반영되어 노조내 여성 대표성 확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활동 전개를 위해서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체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여부 모니터링이나 최근 발표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노조와의 연대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 조만간 연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 사회운동과의 연대

여성운동이 인권운동이고 균형잡힌 민주발전을 위한 운동이므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운동단체와는 연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문제 해결은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남성들이 동참할 때 훨씬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사회구현과 민주발전을 위한 활동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연대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선거때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 국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의 감시활동, 행정낭비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활동, 생활에서의 안전점검 활동 등에서 각 분야의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7. 맺음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여성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시키기 위해 1959년 8개 단체가 모여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며 33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국내 최대

의 여성협의체로 성장하여왔다.

가족법 개사무금용노동조합등을 통해 불평등한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여성개발원, 정부제2장관실,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행정부, 입법부에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근로여성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근로현장에서의 문제를 상담하는 근로여성고발창구를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왔으며 공직 및 정치에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협의체로서 여성을 하나로 묶어 세력화 조직화하였으며, 외국 여성단체, 외국기구와의 국제적인 교류를 한국여성계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교류로 한국여성계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여성운동의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960년대부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시작하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창설에 산파역을 담당하였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환경보전운동에도 활동영역을 확대시켜나갔다. 그외에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을 주도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였다.

여협은 독자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전개하였는데 여성문제와 관련한 여성단체와의 연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최근에 다른 주제로 시민단체와 한 연대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협의체인 관계로 한개의 단체 자격으로 다른 단체와 다시 연대하는 것은 조직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자면 여성문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습과 인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운동 측면에서 볼때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의 성과를 간단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많은 부분을 성취하였으나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6년의 역사속에서 여성계를 대변하는 협의체로서 정치 사회의 격변기를 겪으며 때로는 굴절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성이 여성이라

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며 여성계의 힘을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여왔다. 여협은 한국여성의 발전과 함께 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료 3> 회원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한국여학사협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중앙부인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부녀복지연합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우먼스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우리웃협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분회, 대한영양사회, 국제여성승공연합, 통일여성안보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퇴역여군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참고자료>

-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총회책자, 1995.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5), 「매스컴모니터 활동보고서 III」.
한정자(1985), “한국의 여성단체 활동”, 「UN여성 10년 평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활동보고서」, 1995.

IV.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1. 들어가는 말 : 운동의 역사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970년대 이후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각계의 여성들이 80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부문의 여성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결성되었다. 1984년 이래 종교계, 민주화운동단체의 여성분과, 여성 연구자, 과제별 여성 조직 등은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여성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민주화를 위한 여성의 통일적인 행동을 조직하는 꾸준한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연대활동의 결실로서 1987년 2월 18일 21개의 여성단체가 가입한 여연이 발족하였다.

발족 이후 여연은 해방 이후 단절되었던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사를 이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의 실현은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의 실현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성운동을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노력으로 제한적이거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점차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연은 보다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대중의 실질적인 권익대변체로 발전하기 위해 사업내용과 방식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2. 운동의 목표와 조직

1) 운동의 목표

여연은 87년 발족 당시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의 방향하에 여성운동세력 간의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 쟁취를 위해 노력함” 그 목적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여성운동과 사회민주화의 통일적인 수행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후 여연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조직이 점차 회원단체로 가입하면서 사회민주화와 다양한 여성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토대로 여연은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의 여성이 받는 모든 불평등과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민주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여성권익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95년 정기총회에서 여연은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 여성복지, 민주, 통일 사회의 실현”을 운동의 목적으로 재규정하였다.

2) 조직의 구조와 운영

(1) 주요 의사결정구조

① 총회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사안에 따른 임시총회(의장 혹은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시)를 개최한다. 각 회원단체에서는 3인의 대의원을 파견한다.

②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평상시의 최고의 의결기구로 년 4회의 정기중앙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고 있으며 여연의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회원단체에서 대표 1인씩 참가한다.

③ 집행위원회

월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고 있으며, 여연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각 위원회 위원장, 지역 여성단체연합 대표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여연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연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논의구조의 역할을 한다

(2) 각종 위원회 (각 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95년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① 정책과 사업위원회

수도권 지역의 사무국장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며, 여연 사업과 회원단체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기별, 사안별로 정책을 협의하고, 여연의 중장기적 과제와 주요 사업에 대한 회원단체의 참여 강화방안을 주요하게 고민한다

■ 주요사업

- 여연과 회원단체의 “중간지도력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함.
- 여연 회원단체 활동가 의식 및 근무실태 조사함.

■ 평가

회원단체 상호 간의 현안 과제를 협의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과 교류의 폭에 넓히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회원단체 사무국장들이 사회운동 전반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하고, 여성운동의 대응을 조직적으로 논의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가들의 재교육 및 지도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

회원단체 중 여성 노동문제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산하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를 주요 구성원

으로 하여, 평생평등권노동권 실현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 등을 기획, 실행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통제에 대응하여 여성노동자의 조직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주요 사업

- 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재·개정운동을 함. (타 여성단체, 노조와 연대 활동)
- 간접차별 금지 및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위한 법제도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을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전개함. : 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함.
-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성노동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여성 권익보호와 모성보호 확대활동을 함.(출산휴가 90일 확대 등) : 법 개정운동을 전개함.
- 비정규직여성의 고용안정 확보사업 : 여성의 비규정직고용형태의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함. 각종 토론회 전개, 파견법 제정반대운동 등을 전개함.
- 직장 탁아소를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의 확대활동을 함.
- 여성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를 위한 방안 마련하기 위한 활동 : 고용보험법과의 연관성 연구중임.
- 여성의 고용, 직업훈련 할당제 실시를 요구함. :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30%의 할당제 실시 요구함.
- 노동조합내 여성간부들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함.

■ 평가

여연은 발족 이전부터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 노동자 교육활동, 현장투쟁 지원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제·개정되는데 기여하였으며, 결혼, 임신퇴직, 조기정년제 폐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90년을 전후로 하여 산업구조 조정 등이 진행되면서 생산직을 비롯한 전 부문에 걸쳐 비정규직의 확대, 신인사 제도 등의 신종 인사제도 등

새로운 노무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전문연구역량의 충원이 시급하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노동조합 내 여성간부 및 여성조합원들과의 연대 강화,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조직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다.

③ 지역위원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단체 전체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역여성운동의 조직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여성운동조직 상호간의 유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여연 사업에 대한 지방 여성단체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담당한다.

■ 주요활동

- 권역별 수련회 : 영남, 호남, 중부의 권역 회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

■ 평가

단체간의 역량의 편차가 심하며, 그에 따라 여연 사업과의 결합도도 매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지방여성단체의 역량을 평균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여성정책의 개발과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통일·평화위원회

개인과 단체의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사업 및 공개토론 등을 조직하고, 방위비 삭감운동과 군축을 위한 여론활동을 담당하며, 방위비의 사회복지비용으로의 전환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통일운동과 관련된 민족회의 등과의 연대사업을 담당한다.

■ 주요활동

-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책활동
-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활동 : 엽서쓰기, 토론회, 피켓시위 등
- 통일운동관련 교육사업 : 년 1회 회원단체 교육, 통일교재 제작 등
- 8. 15 기념 통일행사

■ 평가

현재 통일평화위원회의 역량에 비해 여연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통일, 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운동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과제로 채택되고 있다. 실제로 여타의 사회운동단체로부터의 평화, 통일관련 연대 제안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위원회의 과제는 우선 기획, 집행력을 높이고, 통일방안 등 이론적인 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일상화할 수 있는 인력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⑤ 정책전문위원회

여성관련 각 부문의 전문 연구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사업으로는 여연의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미리 발굴, 연구하며, 여성운동의 전문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주요활동

-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토론회 등 개최
-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대책활동
- 방과 후 이동보호를 위한 토론회 등 실시

■ 평가

위원들의 여연과의 결합력이 다소 낮으며, 보다 일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체계정립이 시급하다. 정책전문위원회의 강화는 여연의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나, 중요도에 비해서는 구성의 긴밀도가 매우 낮다.

⑥ 국제협력위원회

회원단체와 개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여성운동의 현황을 국제

적으로 여론화시키며, 한국 여성운동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는 사업을 한다. 또한 국제 여성운동의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연대에 능동적,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 주요 활동

- 북경 세계 여성회의 참가를 위한 회원단체 조직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 및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화 활동.
- 여연 홍보용 영문 자료 발간(부정기) 등

■ 평가

자체역량이 취약하며, 논의구조 자체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운동의 국제연대가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위원회는 시급히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곳이다.

⑦ 특별위원회

여성운동에서 시기별, 사안별로 요구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조직적 대응력을 높이는 각종 사업을 담당한다.

■ 주요 활동

매년 그 해의 핵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95년도에는 ‘지방의회 여성 20% 진출’이 주요사업이었다.

■ 평가

- 특위는 일상적으로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기획,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자체 완결도가 높은 편이며, 목표한 사업에 대한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안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제별 사업 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⑧ 사무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정책, 조직, 홍보, 선전, 총무 등으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현재 총 6명의 상근 인력이 있다. 각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기획, 실무진행 등에 대한 책임과 여연 조직의 관리 등 실질적인 여연사업을 추진하는 중심기능을 하고 있다.

3) 참여 회원단체 현황

80년대에 급성장한 진보적 여성단체들을 중심 회원으로 하여 출발한 여연은 95년 9월 현재 총 3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여연의 회원의 형태는 정회원, 준회원, 참관회원으로 구분된다.

(1) 회원의 자격

여연의 목적을 수락하는 단체로서 2년 이상의 활동실적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지도력, 상근인력이 있는 단체에 한한다.

(2) 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 : 여연의 준회원 단체로 여연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총회에서 준정원단체로 인준한 단체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23개 단체)

② 준회원 : 2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사업실적을 갖춘 여성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을 제출한 후 이사회회의결을 거친 단체,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권리는 정회원 단체와 같다. (현재 4개 단체)

③ 참관단체 :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회의결을 거친 단체에 해당된다. (현재 3개 단체)

(3) 회원단체의 구성 분포

① 10개의 지방 여성단체(거창,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수원, 전북, 제주, 충북여민회)

② 17개의 과제 중심 여성단체(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광주여성

의 전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미술연구회, NCC여성국,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 ③ 참관단체 :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 순천우리여성회

(4) 회원의 의무

정관과 제 규정 및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납부 및 각종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권리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여연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6) 평가

① 8년간의 활동을 통해 여연은 진보적 여성운동체로서의 대중적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제반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도 대등하게 참여하는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기층 여성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소외된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조직화를 위한 활동에서는 모든 여성조직의 모범으로 활동해 왔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대안적 정책을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정부 각 기구의 여연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반영율이 매우 높아졌다.

② 그러나 대안적 여성운동체로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원단체의 성장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매 사안에 대한 동원력 등이 다소 낮아진 점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③ 지역 회원단체의 대중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연관한 사업방향 정립, 주제별 조직과 부문별 회원 조직의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④ 중간 여성지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제자립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3. 주요 활동 사업

1) 탁아문제 대응 활동

(1) 목표

민간보육시설의 확대와 직장탁아시설의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 활동 등을 전개한다.

(2) 주요활동

혜영, 용철사건 위령제/ 탁아문제 비디오 ‘우리네 아이들’ 제작/ 탁아입법 쟁취 서명운동/ 탁아문제 토론회 개최/ 민자당의 날치기 탁아입법 통과 규탄대회/ ‘탁아실태와 올바른 탁아정책의 방향’ 자료집 제작/ 민간비영리탁아소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조례청원운동/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운동(개정 정원)/ 직장탁아소 설치를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3) 평가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범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여론화하고, 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 직장탁아소의 설치, 지역 탁아소의 확대와 탁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

(1) 목표

직장내 성차별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육아문제의 사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감시 및 압력활동을 전개한다. 여성노동운동과 여성운동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일하는 여성의 고용실태(불안정 고용, 고용불평등)의 실상을 폭로·선전하여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구체적 실천투쟁 사례 등을 발굴해 나간다

(2) 주요 활동

① 노동조합 지원활동

지하철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공동지원, 전교조 합법화운동 지원, 미국인 회사인 피코의 폐업반대 지원, 코스모스 위장부도 반대운동,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공권력 투입반대운동 등 자본철회, 위장폐업, 구사대 폭력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함.

② 모성보호 운동

단체교섭 중 여성조항 쟁취를 위한 정책지원으로 산전후 휴가 확대, 수유시간 확보, 육아휴직 쟁취에 기여함.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운동 전개함. 모성을 파괴하는 직업병 사례발표회 등 전개함.

③ 고용불안정 대책활동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비정규 고용확대 반대운동/

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토론회 및 집회/ 고용안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토론회(교육활동 중심)/ 시간제 고용에 대한 노동악법 개악철폐 성명서 발표하고 정부부처에 전달 및 면담/ 시간제 고용에 대한 내부 설명회/ 정부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대책활동/ 신중 결혼, 임신퇴직 및 조기정년 철폐를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9급 행정공무원 여성차별 채용반대 공청회 개최/ 사무직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공개강좌 개설

④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

의료보험에서 출산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고용보험 급여에서 육아휴직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의 주제를 연구함.

⑤ 기타

용모차별 기업에 대한 고소, 고발 및 각종 캠페인/ 직장내 성희롱과 신인사제도 등 간접 차별의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앞 집회, 국회 노동위원회 의원을 면담함/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고용할 당제 도입을 위한 대정부 활동(서명운동, 성명서 채택 등)/ 군복무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위한 성명활동

(3) 평가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등의 활동에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평생평등 노동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통해 여성 노동자 및 노조와의 연대가 긴밀하게 진행되어, 현장의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 현장 노동자 및 노조와의 연대성을 보다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평등노동권의 실질적 쟁취에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성폭력 추방 및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1) 목표

성폭력 양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이자 인권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여론화 한다. 성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제도 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전체 여성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여성운동의 외연을 확대시킨다.

(2) 주요활동

성폭력특별법 시안 마련 및 청원활동, 공개토론회, 정당초청토론회 주도함/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 서명운동/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74개 범여성,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앞 시위/ 성폭력추방 문화제/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서울대 우조교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책위 구성 및 기자회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토론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모의 법정/ 성폭력추방 모범 시민과의 만남(도곡동 청소년 성폭력사건 기자회견)/ 교육용 소책자 발간 및 상징물 제작 판매

(3) 평가

①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이며,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② 성폭력추방 상징물, 소책자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시민의 관심과 구입이 급증하였다. 성폭력추방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획득에 성공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해 9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에 있어 친고죄가 여전히 적용되고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라는 기존의 잘못된 법은 개선되지 못했다.

③ 여연과 기타 여성단체,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문화제, 거리행진 등을 조직함으로써 성폭력문제가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조직간의 연대

를 강화하며, 여성운동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여연 회원단체는 지방과 수도권 회원단체가 이 사업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상담소'의 개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특별위원회가 해소되면서 여연 중앙 차원의 성폭력 대책 기구와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④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현재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친고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4)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참여 확대 사업

(1) 목표

① 20% 지방의회 여성진출을 목표로 여성단체의 선거대응력을 높이면서, 발굴된 여성후보를 중심으로 여성 정책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

② 지방자치시대 여성운동의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③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여성 유권자들의 올바른 역할과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한다

(2) 사업내용

- 여성단체 공동활동 :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결성 및 공동활동/ 각 정당 면담/ 국회특별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 지방의회 여성후보 노고격려회 등 공동주최
-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대책회의와 연대하여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함.
-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 여성일정비율 할당제 도입방안 연구 및 각종 토론회에 참가함.

- 20% 지방의회 여성의식 확보 홍보 브로셔를 발간함.
- 여성의원 후보발굴, 교육사업, 선거 지원 자원활동 : 17명 진출하여 14명 당선
- 지방의회 여성정책 캠페인 및 시민사회단체공동정책 캠페인 공동진행
- 과제개발 위원회 구성 : 후보발굴을 하지 않은 단체로 구성함. 지방의회의 의정교육, 자치시대 지역여성단체의 역할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 조직 : 남, 녀를 포함한 각계의 인사로 구성, 각종 모금사업과 지원활동을 전개함.

(3) 평가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목표로 전체 여성단체의 상설적인 연대를 구축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조성 및 정부, 정당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정치에서의 여성할당제는 고용에 있어서도 채택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로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② 여연과 회원단체에서 지역활동을 열심히 전개한 여성지도자중 17명이 입후보하여 14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낳았다. 여성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방자치를 통해 생활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의 연장선이라는 목표가 옳았으며 후보들의 참신성과 조직적인 지원,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서 실시할 여성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펼친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대안세력으로 부각되었으며 대중적인 공신력이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로 차기 지방의회에는 상당히 많은 여성이 진출할 것으로 파악된다

③ 여성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성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여성후보에게 제안하고 사회적으로 여론화하여 여연과 후보, 여성후보의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적 신뢰감 형성에 기여했다.

④ 남은 과제로는 각 정당에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

하고, 지방단체의 지방의회 및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며, 의정감시활동 등에 대한 조직화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통일·평화운동

(1) 목표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에 조직적으로 결합하며, 여성이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의식화, 조직화한다.

(2) 주요사업

- 핵폐기장 설치 반대운동
- 걸프전 파병반대 어머니 모임 결성 및 파병반대운동
-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세미나, 년1회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재' 발간, '여성평화한마당' 개최
- '남북합의서 이행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및 양심수 석방운동
- 북한 핵문제의 일괄타결과 북한 제재반대 캠페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토론회
-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엽서쓰기, 각종 정책토론회, 가두 캠페인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역할' 토론회 중 남북한 여성 왕래 성사

(3) 평가

① 여연은 방위비 삭감운동과 여성에 대한 통일교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세에 따라 다양하게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와 군축, 통일문제는 여연 사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② 이를 위해서는 통일운동에 보다 역점을 둘 '통일운동 지도력'을 육성하고, 회원단체의 일상사업에 관계없이 통일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을 지

속하여야 한다

③ 통일 이후 여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와 올바른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

6) 사회민주화운동

(1) 목표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며, 사회성원 간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2) 주요사업

- 최루탄 추방운동
- 세금비리사건의 금융실명제의 도입
- 12. 12 반란자의 기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집회
- 5. 18광주항쟁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가두 시위

(3) 평가

① 정치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은 진보적 여성운동체로서의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여성의 정치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②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회원단체의 결집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4. 여성운동의 당면과제

1) 조직의 측면

여연이 여성권의 등 여성들이 답답하게 여기던 문제를 사회여론화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사회행동을 보여줌으로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공신력은 상당히 높아졌다. 정부 등에 대해서도 여성정책 개발, 실행의 중요한 의견수렴 대상으로 부각되었다(고용할당제, 학교급식,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탁아, 각종 여성관련 입법, 성폭력 규제문제, 여성복지 등). 여성사안 이외에도 12. 12 사건, 5. 18 광주민중항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사회단체 전반에 여연이 진보적 여성운동의 핵심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는 여연이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대변체 역할에서 나아가 풀뿌리 여성조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여성단체의 경우인력과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대구, 경남, 부산, 충북, 충남, 제주, 광주, 인천, 수원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연 산하 단체들은 지역구심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국에 지부를 갖고 있는 여성의 전화, 여성노동자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해 자치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업과제의 측면

(1) 95년 제 4차 북경여성대회 채택한 38개의 북경선언과 361개의 행동계획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여성운동의 실천과제화 하고 정부, 기업에서도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2) 95년 정부가 발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제도와 관습의 장벽으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극소수에 머물러 있다. 정치, 고용, 사회조직 등 모든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 좋은 보

육환경의 타아소 확대및 정부의 지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체계 마련,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여성농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5)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직장내 성희롱,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전담부서로서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정무장관(제2실)은 각 부처간의 조정기능만 있고 여성정책에 대한 입법권과 예산집행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은 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남녀평등을 추진할 '여성부'가 필요하다.

(7) 자원 사용의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여성이므로 여성운동에서 생활환경운동의 과제를 개발하고 여성환경운동가를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8) 지역 여성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생활과제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생활자치운동을 담당할 여성지도력의 발굴과 훈련이 필요하다.

(9) 여성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고 미디어분야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10)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여성들의 활동은 통일될 때까지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인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배상요구, 방위비 삭감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운동 등

3) 기타

(1) 각 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자립 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력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5. 연대활동의 내용 및 평가(91년대 이후부터)

1) 정치·사회·민주화 및 통일을 위한 연대활동

(1) 고 강경대 치사사건에 대한 대책활동

① 취지

1991년 6공화국의 공안통치 속에서 명지대학생 강경대군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사회를 만드는 역할에 여성들도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의 이기적인 모성을 반성하고 사회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가정도 지켜질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인식으로 여성들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② 활동내용

각계각층이 참여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동시에 많은 여성대중이 참여해서 투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집회, 선전활동 등을 하였다.

- 여연 독자적으로 고 강경대 치사사건을 항의하는 기자회견 및 농성에 돌입함(91.5. 4-5. 25)
- 백골단, 전투경찰 해체 및 폭력정권 여성규탄대회(91.5. 8)
- 고 강경대 및 6인 열사 추모국민장 참여(5. 14-5. 18)

(2)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1993- 1994)

① 취지

쌀 및 기초농산물의 개방에 반대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 과제에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게 되었다. 1993년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94년에는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② 활동내용

-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공청회 참가(93. 3. 22)
- 여연 주최 '우리쌀 지키기'홍보책자 가두홍보(93. 7. 26)
- 우리쌀 지키기 긴급 공청회(93. 11. 2)
- 여연, 교회여성연합회 공동주최 '쌀수입 개방반대' 국회앞시위(93. 12. 6)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대회' 참가(93. 12. 7)
- '미국의 부당한 수입개방 압력과 정부의 굴욕적인 신사대주의 통상외교에 항의하는 인간띠잇기' 참가(93. 12. 8)
-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가입.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 참여(94. 2)
- 국회개원시 UR국회비준 거부위한 국회의원에게 리본달아주기(94. 2. 15)
- 'UR 국회비준 거부서약서' 전달식 및 각 정당 대표와 간담회(94. 4. 8)
-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대회' 참가(94. 4. 9)
- 모내기 일손돕기 범국민운동 참여(94. 5. 22)

(3) 12. 12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대책 및 5. 18 국민위원회 참여
(94-95년)

① 취지

군사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발표되고 5. 18 학살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발표되면서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에 모든 시민, 사회단체의 단결과 연대가 요구되었다. 여연에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② 활동내용

- 12. 12반란자 기소축구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구성(94. 11)
- 기자회견, 공동집회 등에 참여(94. 11-12)
- 여연 독자적으로 '여성 200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독자적인 집회를 개최(94. 12. 5)

- 5. 18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위원회 활동
- 5. 18 학살자처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가입해서 1차
- 9차 국민대회 참여
- 국회앞에서 '5. 18학살자 처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성대회 개최 (95. 10. 17)

(4)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가입

① 취지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높아지면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체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4년 7월 종교계, 민족단체, 전국연합, 민예총, 흥사단 등 62개 단체가 모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를 결성하였다. 여연은 남북여성교류, 방위비삭감운동 등 여성평화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해 오다가 전체 통일, 평화운동 세력과 연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랜 논의를 거쳐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 연대구조에 여연은 상설적으로 가입해 있다.

② 활동내용

- '1994 서울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개최
- 8. 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개최
: 정신대 사죄배상 추구를 위한 여성한마당 개최, 평화 군축의 거리 설치

(5)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① 취지

1992년 세계적인 평화, 군축의 움직임에 맞추어 군비를 축소하여 남북의 경제활성화와 민중의 복지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독교민회', 'NCC여성위원회',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반핵평화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

등이 '여성복지 확대와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1993부터는 반핵평화운동연합이 빠지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평화통일위원회'가 추가로 가입하였고 명칭도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② 활동내용

- 여성복지 확대와 방위비 삭감을 위한 결의대회(92. 9. 18)
-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는 편지쓰기(92년-95년 계속사업)
- 방위비 삭감을 위한 토론회 개최(93년, 94년 개최)

(6) 정치·사회민주화, 통일 연대사업 평가

① 5. 18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운동은 그동안 대립적인 양상까지 보여왔던 시민운동단체, 민민운동단체가 연대해서 공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방향에 대한 분열없이 효과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② 통일운동, 평화운동의 연대에 있어 전체 통일운동과 함께 연대하는 부분은 약했지만 여성평화운동의 다양한 내용을 개발하고 여성대중을 이끌어냄으로써 통일, 평화운동의 지평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③ 방위비 삭감운동은 평화군축운동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여성운동에서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삭감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다른 평화운동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④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해서 공동 투쟁기구에 가입해 연대활동을 하였다. 결합정도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동원역량은 낮은 편이다. 이는 여성들이 집회나 농성 중심의 활동방식에 결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오히려 여성 독자적으로 여성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방식이 대국민 여론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컸다.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조건이나 장점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이하 범국민연대회의)

(1) 취지

범국민연대회의는 1994년 4월 11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 6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여연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모성보호급여를 의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확보하기 위해 연대회의에 가입하였다.

(2) 활동내용

- ①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토론회, 심포지움, 국회공청회, 집회 등의 활동으로 대국민 여론활동을 전개했다 .
- ② 95년 11월 현재 통합의료보험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제출했다.
- ③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압력활동 전개했다.

(3) 평가

- ① 여연에서는 보험적용 확대범위에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건강진단과 분만시 본인부담금 제외를 요구하였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였다.
- ② 시민,노동,여성,농민,의료인 등 각계 각층에서 연대회의를 구성해 2년간의 연대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과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 등 노동조합과 농민단체에서 모두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찬성함으로써 공동전선을 펴나가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3)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

(1) MBC 파업 대책 및 공정방송 실현 대책활동(92. 9-10)

① 취지

MBC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실현투쟁을 지원하고 대통령 선거시기 언론과 정부의 언론통제를 규탄하는 범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② 연대활동

-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가입
-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가두선전, 시청자대회, 공권력투입 규탄대회에 참가
- MBC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로모임에 여성계 인사 참여

(2) 근로기준법개정요구안 마련을 위한 연대활동(92. 9-11)

① 취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안을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여론화한다.

② 활동내용

전노협, 병원노련, 사무금융노련, 전문기술노련, 전교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신탁은행노동조합, 흥국생명노동조합, 여연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여성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자료집 발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선전활동을 전개

(3) '무권리, 이중착취 용역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공개토론회공동주최(93.3.27)

① 취지

불법적으로 확대되는 용역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파견법 제

정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개토론회 개최

② 활동내용

전노협, 사무금융노련,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여연이 공동주최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4) 노동부의 여성노동정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관한 공동활동

① 취지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에 여성계와 노동계가 연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노동정책에 반영해 나간다.

② 활동내용

- 노동부의 '근로여성복지계획안' 공동대응사업(94. 1)
: 여연 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노협, 업중회의와 공동주최로 국무총리 앞으로 건의문 발송,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한 청원서 제출(94. 12. 3)
- 모집, 채용시 용모제한 철회 청원서 제출(95. 1)

(5)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및 직장내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95. 10)

① 취지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핵심적인 조항인 간접차별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빠져 현장의 서명을 받아 재청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활동내용

- 참가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유통노동조합, 한국

성폭력상담소

-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금지 및 성희롱 금지조항을 신설할 곳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국회앞 집회 개최(95. 10. 31)
- 홍보전담 및 만화대자보 제작 배포

(6) 근로자과건법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95. 10)

① 취지

통상부에서 근로자과건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근로자과건법 입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연은 과건법이 도입되면 주로 여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에 중심으로 참여하였다. 공대위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공공기관 노동조합대표자회의로 구성되었다.

② 활동내용

- 국회의원의에게 과건법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함
- 국민회의, 민주당 대표 면담해서 과건법 반대를 당론으로 이끌어냄
- 과건법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앞에서 집회를 개최함.

(7)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 평가

① 현장 노동조합과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여성노동정책을 마련한 것은 최초로 노동조합과 여성운동이 공동실천활동을 한 것으로 여성운동의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의 기초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대활동의 성과로 여성노동관련법안을 개정하는 활동에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나서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활동은 초기에 여성계가 주도해서 진행해왔지만 95년 10월 국회에 재청원할 때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국회앞 집회도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노동조합에서는 간접차별의 문제와 성희롱의 문제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파견법은 여성계와 노동계가 반대여론을 조직하고 민주당과 국민회의의 당론으로 이끌어내는 등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유보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③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비교적 활발했던 것은 여연 회원단체 중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민우회가 꾸준히 여성 노동사안에 대한 정책개발과 노동조합과의 공동대응을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회청원, 공동캠페인, 공동집회, 선전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내에 여성노동자 문제를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여성대표자회의(또는 여성위원회), 여성노동문제 전담부서 등이 주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계와 노동조합 간의 연례적인 여성노동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협의를 필요하다.

4)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1) 성폭력 및 여성인권 대책사업

① 활동내용

- 경찰에 의해 강간당한 대구 강정순 대책활동(91. 7-8)
-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 활동(91. 9-12)
- 김보은, 김진관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 활동(93)
-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92)
- 성희롱 대책 시민연대(95)

② 활동방식

여성단체, 종교단체, 여학생회 등과 연대하여 서명운동, 건의문 발송, 집회, 향의방문 등 지속적인 여론 조성과 대정부 압력활동을 통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갔다.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① 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여성교회, 새세상을 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기독여민회, 가톨릭여성복지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전국여교역자협의회, KNCC여성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불교인원위원회 여성위원회, 두레방, 이화민주동문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신대연구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위원회, 대한감리교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한국불교여성연합회, 대한감리교여교역자전국연합회(23개 단체)

② 활동내용

■ 대일본정부 활동

1992년 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정기시위를 195차(95년 12월 현재) 전개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압력활동, 증언집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 제출(일본검찰에서 접수 거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민간위로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민간위로금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 대 유엔활동 및 국제활동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유엔이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4년 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보고서가 1995년 말 나올 예정이다. ILO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인 P. N 바그와티는 1994년 9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시아 피해자 및 일본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남북여성이 공동포럼을 개최해 연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의 여성단체, 학자, 변호사. 양심적인 일본 국민들이 집회, 시위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피해자 할머니 생활보호활동

1992년 정신대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정부에서는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시불 5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지불하고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

(3)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연대 모임

① 취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치관련법 개정안(중선거구제와 전국구 병행, 1인 2표제 도입, 국민이 선출하는 모든 선출직에 어느 한성이 80%를 넘지 못한다. 정당공천시 여성할당제 도입, 선거시 자원봉사제 도입과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의하기 위하여 10개 여성단체로 구성하였다.

② 활동내용

- 여성계가 공동으로 청원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청원서 제출함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성과를 가져옴

(4)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① 취지

1995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치분야에서 20% 할당제 도입을 요구하기 위해 1994년 8월 범여성연대를 구성하였다. 6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연대는 1995년 사업으로 국회의원 할당제 도입, 공공부문의 고용 및 승진, 직업훈련에서의 일정비율 여성할당제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② 활동내용

-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여성할당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및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 각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해 할당제 도입을 촉구
- 통합선거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명시에 관한 건의문 제출하였고 그 결과 비례대표 의원 중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애하는 성과가 있었음.
- 공무원 여성할당제 도입에 관한 서명 및 건의문 제출

(5) 제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한국NGO위원회

① 취지

제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의 민간 여성단체 98개가 모여 한국NGO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 활동내용

- NGO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한국 NGO포럼 개최
- 북경 세계여성대회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한국 여성단체 활동과 나이로비 이행전략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북경 세계여성대회 준비를 위한 동아시아 포럼 참가
-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의 날 행사, 일본군위안부문제 캠페인, 성희롱문제 캠페인, 아시아,태평양 문화의 밤 행사 참여, 인터내셔널 심포지움 참여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6) 여성연대에 대한 평가

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한국NGO위원회 구성, 선거법개정을 위한 여성연대 등 여성권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여성계가 연대해 공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범여성연대는 공동사안에

대해서는 단결하는 여성계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대협은 여성운동이 4년간 끈질기게 벌여온 운동으로 참여단체가 돌아가면서 수요 정기시위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참가단체가 이름만 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정확히 분담하는 모범적인 운동선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연대운동 만이 아니라 국제 연대운동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여론화시키는데 상당히 성공하였다.

5) 시민, 환경단체 연대활동

(1) 환경사회단체협의회(환사협)

92년 ‘지구의날’ 행사,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 민간단체들의 협력과 역할이 고조되면서 여성운동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환사협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연 차원에서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면서 활동내용이 미흡했다.

(2)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 연대활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YMCA 전국연맹과 자율적인 사회,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수립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3)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사안별 연대

95년 지방자치 선거 국면에서 선거법 개정, 공동정책캠페인 활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4) 시민, 환경단체 연대활동 평가

① 환경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은 여연이 열심히 하지 못했다. 여연의 회원

단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환경운동 차원에서 연대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1994년 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 결성시에 여연이 가입 제안을 받았으나 시민협 가입에 대한 찬반이 나누어져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여연의 회원단체 구성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곳도 있고 노동자, 농민 등 민중운동단체도 있기 때문에 시민협에 가입하면 여연이 시민운동단체로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보다는 사안별 연대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여연의 조직 실정에서 적절한 것이었다. 단, 회원단체에서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하기로 해서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6) 연대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1) 연대사업의 비중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여연은 민족민주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 노동조합운동 등연대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이유는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의 사안에 있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참여시키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여연이 이름만 걸고 연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여연에서는 명의만 거는 연대사업은 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막상 요구가 올 때는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름을 같이 걸고 재정을 분담해 힘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그 연대활동이 자기 조직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연에서 사회운동, 노동조합 운동과 연대할 때는 자기 운동-정책의 측면, 동원의 측면-에서 여성운동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체 운동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을 때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연대사업에 있어 각 단체의 참여와 책임을 동등하게 해나가야 한다.

연대하는 사안에 따라 주된 책임을 지는 간사단체가 있게 마련인데 간사 역할을 하는 단체가 참가 단체의 의견 수렴과 공유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함

으로써 연대사업 후 종종 불신이 쌓이는 경우가 있다. 나머지 단체는 이름만 걸고 재정만 분담하는 모양새가 되기 쉬운데 이러한 연대방식은 극복하고 각 단체의 실정에 맞게 참여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연대활동의 필요성과 전망

1) 노동운동과의 연대

(1) 노동운동과 연대의 과제

전체 상용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육박하고 있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은 80% 이상이다. 1990년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인력정책이 추진되고 그 주요전략으로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후퇴에 신축성을 가지면서 2차 노동시장을 구성해주는 노동자군이 여성노동자이다. 정부와 자본측의 이러한 여성노동시장 전략으로 인해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와 주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인력을 단지 저임금, 단순노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임금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 남녀분단현상은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변화되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전체 노동조합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① 노동시장내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및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도입이 필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가 확립되고, 신인사제도 등 간접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가내하청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② 모성보호 확대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확대가 이

루어져야 한다.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유급육아휴직제 도입, 지역및 직장보육시설 지원, 여성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

③ 노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일정 비율로 여성지도자를 포함시키는 적극적 조치 및 여성지도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여성대표자회의 구성, 대의원 및 중앙위원회에 일정비율로 여성 참여, 상임집행위원회및 집행국에 일정비율로 여성참여, 조합원연수 및 교육시에 여성조합원의 참여를 장려, 남녀조합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직업의식 고취하는 교육실시 등이 필요하다.

④ 국내 여성노동관련 제도와 법을 ILO 권고사항과 4차 세계 여성대회 행동강령의 권고조항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의료보험통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위의 과제를 노동조합 운동의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 과제로 설정하고 권고문을 채택하고 단위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지도, 권고해 나가야 한다.

(2)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최근 노동운동의 현안 과제를 여성운동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여성운동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의 요구가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앞으로도 연대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자과건법 도입 반대,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직장탁아소설치 등 주요 여성노동과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청원, 홍보여론화, 캠페인 등을 함께 펼치면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활발해 진 것은 여연 산하 단체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면서 노동조합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현재는 여성운동

이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만이 여성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여성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 조합원의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성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여성노동문제 해결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해 나가면서 동시에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나가야 하므로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여성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각 계급·계층의 문제나 전 민족적인 문제에 여성운동이 함께 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남녀 모두의 과제이다. 북경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기구, 비정부기구와 노동조합의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이 50%가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여성문제 해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성희롱문제를 공동대응하기 위해 성희롱 대책 시민연대를 구성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향후 여연의 연대사업 계획

(1) 가정폭력 방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반도 평화실현 등 여성인권문제와 평화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여론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2)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범여성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이행 모니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이행 감시기구, 정부조직에 여성부 신설 등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방안 마련 등 여성 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여성단체와 노동조합과의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필요하다.

(4) 평화문제, 지속가능한 개발문제 등 전 지구적으로 연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국제연대를 통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간다.

7. 맺음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창립 이전부터 '생존권지원대책위원회'라는 여성단체의 공동활동을 토대로 해서 상설적인 연대구조로 발전시켜 왔다. 결성 초기부터 90년대 초까지는 기층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많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기층 민중운동이 발전하면서 여연은 지원사업 보다는 독자적인 여성운동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활동에 주력해 왔다.

이제 여연활동에서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여성운동의 주요 세력으로서 여성 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운동으로 연대의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에서 여성 노동자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의 필요성을 다시 정리하면,

(1) 여성노동자 문제는 여성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시간제, 파견제 노동 등 노동시장에 들어설 때부터 성차별을 당하는 문제,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임금, 승진등에서 결과적으로 여성이 차별당하는 문제,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직장내 성희롱문제,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과제(여성고용할당, 기술훈련 기회 확대, 개발정책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 등)는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고정적인 성역할 분할 구조를 제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전체 상용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40%를 육박하고 있고 노동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여성노동자의 숫적인 비중은 매우 크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자본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을 이중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진정한 여성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여성운동에서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3)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자의 주요 구성원인 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정책이 여성노동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노동자 만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시장의 분단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변화되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노동운동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만 국가와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고용 불안정성의 제도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여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과 국가, 자본에 의해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어 노동운동

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면 국가와 자본의 공세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문제 해결없이는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노동조합 운동 조직에 관행화되어 있는 여성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부족, 여성지도력 발굴 경시 등 성차별적인 장벽을 변화시켜 나가야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조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은 더욱 굳건히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4> 여연의 연혁(약사)

- 1984~86년

여대생성추행사건대책협의회 구성 및 공동활동

2. 12 총선시 '여성유권자선언' 발표

1, 2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개최(1회 주제 :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2회 주제 : 민주화와 여성 생존권)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공동활동, 여성노동자생존권지원 대책위 구성 및 활동

'KBS - TV시청료거부운동 여성단체연합' 구성 및 공동활동

부천시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대책활동을 위한 여성단체연합 구성

- 1987년

2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정식 발족(지역과 부문의 21개 여성조직이 가입)

이우정 회장 취임(89년까지 회장 역임)

제3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4. 13 호헌조치 반대운동 및 최루탄 추방운동, 민주헌법 쟁취 여성정책협의회 구성,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운동

- 1988년

AIDS추방운동, 맥스테크 위장폐업 농성지원

제 4 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 1989년

제 5 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24개 여성단체의 연합체로 성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 가족법개정특위 구성 및 대책활동
 평화위원회 신설(현재는 통일평화위원회로 개칭) 등
 인신매매 및 매춘특위 구성
- 1990년
 이효재 회장 취임 : 92년에 연임
 제 6회 한국여성대회 개최(여성운동상제정 : 권인숙씨 수상)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탁아운동 및 탁아입법 제정 활동
 성폭력(대구 강정순씨 강간사건 대책활동) 및 인신매매 대책활동,
 9월 여성주간 선포 및 각종 선전 및 문화 활동 전개
- 1991년
 제7회 한국여성대회 개최(올해의 여성운동상 : 강정순씨 수상)
 ‘아세아의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참가
 정신대 대책활동-신고전화 개설,
 걸프전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결성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가입 및 공동활동
 쌀수입 개방 반대운동
- 1992년
 조화순 회장 취임
 제 8 회 한국여성대회 개최(올해의 여성운동상 : 박영숙, 김학순씨 공동수상)
 성폭력특별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참가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결성 및 활동
 14대 총선 대책활동 전개 : 여성유권자 선언 등

- 1993년

한명숙, 이영순, 이미경 공동대표 취임
제 9 회 한국여성대회 개최(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 서울신탁은행 노조 여성정책실 수상)
서울대우조교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책위 구성및기자회견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대책위 가입 및 활동
여성고용관련법에 대한 토론회 개최
여성통일마라톤 개최
여성평화의집 입주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및 성폭력 추방 문화제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가입 및 활동

- 1994년

이미경, 한명숙, 이영순 공동대표 취임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특별사업본부 및 후원회 결성
지방회의 여성의원 3년 활동 평가 토론회 개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가입 및 공동활동
제10회 한국여성대회 개최(올해의 여성운동상 : 홍미영 지방의회 의원 수상)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가입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의 가입 및 연대 활동
정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대한 대응활동
고령법 개정 청원(여연, 민주노총 준비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준비 NGO 한국위원회 가입
외국인근로자 농성지원대책위 및 활동,시민의 철도, 지하철 만들기 토론회 공동주최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가입 및 공동활동

- 1995년

95년 현재 과제별, 지역별의 27개 회원단체와 3개의 참관 단체로 구성

이미경 한명숙 공동대표제

제11회 한국여성대회 전개(1,200 여명 참가)

학교급식 및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토론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지원

선거법 개정연대활동, 지방의회 10대 여성정책과제 발표

살기좋은지역사회 만들기 10개 지역 포럼 추진

해방 50주년 8. 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가입 및 활동

성희롱 추방 시민연대 가입활동

‘고용할당제’ 도입에 관한 서명 및 각계에 입장 제출

제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가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결성 및 공천할당제, 비례대표제 도입촉구 활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파견근로제 도입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

<참고자료>

「민주여성」, 1-19호.

「총회자료집」, 1-9차 88-95년.

V. 환경운동연합

황 상 규*

1. 들어가는 말

1) 연혁

(1) 환경운동연합 이전 시기

우리나라에서 공해문제로 일어난 최초의 주민운동은 1966년 부산 화력발전소 매연반대운동이다. 이후 70년대에 들어 울산, 여천, 광양 공단에서 반공해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반공해 주민운동은 거대한 국가 및 자본층의 힘에 억눌려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했으며, 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의 성격에 머물렀다.

제도적인 측면을 볼 때에도 1963년에 일본을 본 떠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그나마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67년부터였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도 거의 편성되지 못했다. 1977년 들어 환경보존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고 1980년 환경권⁹⁰⁾이 헌법에 명시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80년대의 폭압적이고 암울한 사회적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회운동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공해를 반대하는 생존권 수호 차원의 저항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70, 80년에 걸쳐 독재권력에게 경제성장 제일주의는 부동(부동)의 가치였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곧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었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90)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특히 1982년 설립된 한국공해문제연구소⁹¹⁾는 80년대 반공해운동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냈다. 1983년부터 징후가 발견된 ‘온산병’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1985년 본격적인 공해병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공해문제가 이제 더이상 ‘강건너 불’이 아님을 환기시켰다. 당시 환경청은 온산주민들의 증세를 ‘공해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성질환’(?)으로 판명되었다며 같은 해 10월부터 9천 1백여가구에 대한 전면적인 이주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조직과 청년, 대학생들의 조직도 생겨났는데,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86년 9월 창립)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87년 10월 창립 : 84년에 창립되었던 반공해협의회(84년)의 후신)가 그것이다. 이 두 단체는 중심 주체들과 운동의 방법론상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해추방운동이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 있었다. 직선제로 치른 87년 대선 이후 넓어진 합법공간에서 이 두 단체는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되는데, 이 조직이 바로 1988년 9월 결성된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이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때 부산, 광주, 목포 등에서도 공해추방 조직들이 구성되었다. 1989년 창립된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1989년 창립되어 1992년에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으로 개칭했던 광주환경공해연구회, 1988년에 창립된 목포녹색연구회 등 피해주민의 이해를 대변하여 기업과 정부에 맞서 싸우던 진보적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돋보였다. 1991년 3월에 발생한 폐놀사건을 계기로 대구지역과 마산·창원지역에서도 환경단체가 결성되었는데 대구 공해추방운동협의회와 마산·창원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가 그것이다.

전국 각지의 환경단체들이 1993년 4월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란 새로운 틀로 통합하게 된 데에는 동시성, 광역성, 다발성을 띠는 국내 환경문제와 새롭게 제기된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90년대

91)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이후 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89년-91년), 교회환경연구소(92년-현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의 다소 급박한 환경위기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2) 환경운동연합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4월 2일 창립되었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활동하던 8개 환경단체⁹²⁾가 단일한 조직 명칭과 동일한 목표 아래 통일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 후 1차년도에 4개 지역에서 새롭게 지역단체가 건설되었고, 2차년도인 95년 12월 현재 23개⁹³⁾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 운동의 목표와 조직

1) 운동의 목표

(1) 강령에 나타난 운동 목표

운동의 목표는 운동의 주체가 인식하는 문제 또는 모순관계를 타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있는데 각 운동의 주체들이 무엇을 문제로 또는 모순관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목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운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유형에는 크게 소재중심적 설정, 생활(생산부문포함)양식적 설정, 가치철학적 설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중심적 설정 --> 생활 및 생산양식적 설정 --> 가치철학적 설정의 순으로 갈수록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데 반해, 그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다. 소재중심적 설정은 운동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서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데 용이하고 분명한 반면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92) 공해추방운동연합(서울,이하소재지),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부산), 공해추방운동협의회(대구), 환경운동시민연합(광주),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마산창원),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울산),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진주), 녹색연구회(목포)

93)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마산창원, 목포, 진주, 춘천, 원주, 전북, 서산태안, 경기북부, 충주, 거제, 시흥, 고창, 남해, 과천, 서천, 속초(23개지역)

서 기능주의적 한계를 지니는 단점이 있다.⁹⁴⁾

환경운동연합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가치철학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의 강령 서문은 환경운동연합의 운동 목표를 설정한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환경은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 또한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대기의 온전한 상태를 보전하며 바다, 강, 산에서 생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계속 서식하길 바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오존층 파괴, 온실 효과, 산성비, 산림파괴 그리고 방사능의 공포등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환경위기의 최대 원인은 자연의 상태를 무시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과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동속에 있다. 그리고 성장정책의 소산인 국민 일반의 소비적 생활 태도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다. 특히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특별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사회 건설이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를 맡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환경운동연합이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운동의 목표는 22개 강령으로 표현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재중심적인 운동의 과제와 생활 및 생산양식의 변화를 꾀하는 운동의 과제가 주를 이루며 가치철학적인 측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항목도 다수 있다.

94) 수질오염부하량을 100ppm에서 50ppm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경우 등

① 가치철학적 범주

1.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운동의 주체인 피해지역 주민과 각계각층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조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의 일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 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이해와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사회평등과 민족통일의 실현이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② 생산 및 생활양식의 범주

1. 우리는 생태계에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 파괴적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부의 편중과 도시 과밀화에 반대하며, 부의 사회적 재분배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소재중심적 범주

1.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우리 쌀과 농업을 지켜 국토 환경 보전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을 전 사회구성원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산 단계로부터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사치품의 생산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유해 독성물질의 발생이 최대한 억제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골프장, 간척사업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에 반대하며, 안전하고 재생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핵개발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군비감축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환경문제의 주된 책임당사자인 선진국이 환경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재정 부담에 성실히 나서도록 노력한다.

(2) 운동 목표의 변화

환경운동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운동의 한 부분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인데, 80년대 이후 꾸준한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환경운동연합이 걸어온 길과 그 운동 목표를 보더라도, 정세의 흐름에 따라 운동의 목표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4월을 전후로 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주요 정세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88년 공추련 창립선언문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독점재벌과 그 비호자인 군사독재, 한반도를 식민지 쓰레기장으로 여기면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93년 환경련 창립 선언문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도시화를 경과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 개인들의 무절제한 소비생활”을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잡고 있다. 이는 공추련 당시의 공해추방, 반핵평화 운동을 민족민주운동이라는 큰 운동의 한 축으로 본 구조적 인식에서 벗어나 체제내화(體制內化)된 환경과피의 메카니즘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물론 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성격의 변화와 한반도에서 미군 핵무기가 철수된 상황을 감안한 측면도 주목할 대목이다.

주요활동 및 사업의 설정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88년 공추련 창립선언문에는 “공해추방 반핵주민운동의 지원, 공해문제와 핵무기의 사회적 모순구조 지적, 민족민주운동의 전체적 과제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을 명시했다. 한편 93년 환경련 창립선언문에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과피, 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하며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의 질서를 되찾고, 자연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는 운동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운동이 앞서고 대중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의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합한 삶의 양식과 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2) 조직의 운영

(1) 조직의 구성 및 운동의 참여자

환경운동연합이 지향하는 세 가지 조직방향은 대중성, 전문성, 운동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뛰어난 몇사람의 선도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운동을 통한 대중적 문제해결 방

식을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대중적 토대는 환경운동연합의 재정적, 운동적 토대와 일치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명실공히 회원을 비롯한 대중의 조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회원의 재정적 지원과 운동에의 참여와 날카로운 비판과 힘있는 격려는 환경운동연합의 튼튼한 토대로 작용한다. 창립 당시 5천명에 못미치던 회원들의 수(실질적인 숫자임)는 1차년도에 1만명을 넘었고 95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2만명에 이르고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 각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참여는 환경운동연합의 도덕적, 이념적, 실천적 측면을 지도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 지역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학자, 교수, 변호사, 종교인, 의료인, 사회운동가, 예술가, 주부, 사업가 등 300여명의 지도위원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조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조직에서 활동하는 상근 활동가들은 환경운동연합의 ‘눈과 귀’이자 ‘손과 발’인 동시에 환경운동의 ‘매개체’이다.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회원들의 정성어린 참여와 위로부터 오는 지도위원들의 역량을 동력으로 시의적절한 역동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70여명의 간사들은 그야말로 환경운동연합의 구체적 얼굴이다.

회원의 자격은 환경련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고, 중앙 환경련은 각 지역조직으로 구성되며, 개인 및 단체 회원들은 해당 지역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련의 의사결정과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조직체계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조직과 23개의 지역조직이 유기적인 네트워크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전국적 사안에 대한 대처, 정책개발 및 정책적 대

응, 지역단체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지역조직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지역사안에 대처하면서 환경교육, 환경범죄감시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총 150인 이내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이다. 대의원회는 공동대표를 비롯 지역단체 회장과 지도위원 중앙 조직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 의결 및 집행기관은 중앙집행위원회이다. 대의원 30여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지역단체는 지역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상설 의결기구로 집행위원회가 존재하고 상근 간사들로 구성된 사무국은 사무국장 지휘 아래 사업집행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도위원회가 있어 조언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재정의 규모와 용도

환경연합은 각 지역단체별로 독자적인 재정운용을 기본으로 한다. 주요 수입은 회비, 찬조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이다.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업이나 정당 등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제공하는 기부금은 받지 않고 있다. 지출내역은 사무실 유지 및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이다. 사무실 유지 및 운영비, 사업비 정도는 현재의 수입으로 충당되나 간사 인건비는 각 지역조직들의 사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 회원의 증대, 정부지원 확보, 출판사업 및 기획사업을 통해 균형있고 안정된 재정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조직은 지역단체가 내는 분담금과 수익사업 이익금을 수입원으로 하나, 중앙과 서울조직의 경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기도 한다. 중앙의 경우, 출판사업과 연구소 운영은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규모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연 예산이 2천만원 정도에서 3억원까지 다양하다. 예산 규모는 지역단체의 사무실 규모, 간사 수,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3. 주요 활동사업

1) 연구조사활동

현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부설 민간 환경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환경정책, 법률, 경제, 사회, 환경론, 환경관리, 생태학, 에너지, 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보급 / 환경관련 자문 및 교육 / 중장기적인 연구과제 수행 / 국내 국외 연구단체와의 교류 등이 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민간환경보전활동 강화에 관한 연구(93년)
- ② 안산시 생태도시화 프로젝트
- ③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연구 조사활동
- ④ 은행나무 해충에 대한 조사활동

2) 환경정보 통신망 운영

환경운동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환경공해정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95년 현재 환경정책, 전문단체, 전문인, 환경기술, 환경자료 등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환경공해정보 통신망은 환경련 산하 자료정보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곳을 통하면 단행본 4,000여권, 외국서적 1,000여권을 이용할 수 있고, 국내외 환경관련 정기간행물 60여종과 환경관련 시청각 자료 250여종, 3,000컷 이상의 필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홍보출판활동

국내외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에 대한 정보를 폭넓은 시각과 다양한 기사로 전달하고 공해의 심각성과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환경련은 매달 「환경운동」지를 발간하고 있다. 93년 6월 창간된 이후 95년 12월 현재 통권 30호를 발행하고 있다. 그의 출판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을 위한 환경백과』, 푸른산 출판사
- 『환경의 이해』, 환경운동연합 출판부
- 『녹색혁명가 페트라켈리』, 나남 출판사
- 『그린피스』
-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선택」(비디오)

4) 환경교육활동

환경운동에 있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다음 세대인 어린이,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활동은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풍부히 담아내고 있고, 매년 개최되는 환경전문강좌는 환경운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환경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시민환경대학, 어머니환경대학, 대학생환경교육, 어린이환경학교 및 환경캠프, 환경전문강좌 등이 있다.

5) 환경오염대책활동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유형은 크게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문제 등이 있는데, 특히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수질오염의 경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과 지천들의 오염도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93년 10월부터 환경련 등 민간 환경단체들은 환경처와 공동으로 환경위반업소의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수질오염 사건 중 그 충격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91년 두산전자에 의한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구미공단의 두산전자에서 폐놀을 유출시켜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킴에 따라 영남지역은 물론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고, 오염기업에 대한 응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해문제의 주된 가해자가 '기업'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일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기업들의 환경인식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6) 생태계 보전운동

(1) 지리산 양수댐 건설반대운동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양수댐을 건설하려 함에 따라 93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해 지리산 양수댐 건설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양수댐 건설예정지는 새매와 황조롱이등 2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등 우리나라 생물종의 30%인 1천 2백 60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자인 한전은 개발이 불가능한 8등급의 녹지를 7등급이라고 조작하여 건설허가를 받아 냈에 따라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환경련 등 환경단체들은 관계장관을 고발하는 등 지리산 양수댐 건설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2) 강원도 인제 군사훈련장 반대운동

국방부가 군 제병합동훈련장을 강원도 설악산 주변 인제군 일대 4,200만평에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계획은 전세계적인 탈냉전과 평화, 환경보전의 추세에 반할 뿐 만 아니라 건설과정상에서 대규모 산림파괴와 폭격소음과 진동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7) 반핵평화운동

환경보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핵발전소 건설과 핵폐기물처분장 설치를 반대하는 활동으로 구성되는 반핵평화운동은 공해추방운동연합이 출범한 88년 이후 지역주민운동과 함께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과 굴업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반핵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이슈가 되었던 89년 핵발전소 11, 12호기 건설 반대 운동과 안면도 반핵 항쟁 그리고 최근의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운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 반대운동(89년)

핵발전소 11, 12호기 모형에 심각한 안전상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이 건설을 추진하여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핵발전소 건설이 전기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믿으며 그 문제점에 이의를 달지 못하던 시기에 핵발전소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후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2) 안면도 반핵항쟁(91년)

91년 11월 정부가 안면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는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안면도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자신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이 정부의 비민주적인 독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승리의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안면도 반핵항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 지역차원의 한계내에서 꺼지지 않은 불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3)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95년)

91년 안면도에서 패배한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계획은 94년 연말을 틈타,

인천 앞바다에 있는 굴업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굴업도 인근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 식의 정부의 정책은 변화가 없었으나, 그후 지질의 안전성 문제로 1년만에 백지화 하기에 이르렀다. 이 투쟁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여론과 정부에 대하여 힘겨운 투쟁을 벌인 결과 안면도 이후의 또 하나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나 대체 에너지문제에 대한 연구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시급함을 일깨워주었다.

8) 국제 연대

환경문제가 주요한 국제문제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국제적인 환경단체와의 교류, 연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각종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교류 및 방문과 국제회의 참가도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다. 94년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 사건 때 그린피스와 교신하며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항의 활동을 전개한 경우나 소각장 반대 집회시 그린피스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얻고 이후 상호연대로 이어 나간 것은 국제 연대활동의 한 표본이었다.

94년 4월에 환경운동연합 초청으로 그린피스 선박이 우리나라 해안을 돌며 환경, 반핵캠페인을 벌이고 인제 군중합훈련장 건설이 생물다양성 협약에 위반되고 평화 공존에도 어긋나는 개발사업이라는 항의편지가 시에라클립을 비롯하여 각국의 환경단체에서 날아 오는 등 국제적 대응이 부쩍 활발해진 것은 지속적인 국제연대활동의 귀결이었다. 실천과 구체적 목표를 위한 연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 계획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국제연대활동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4. 운동의 평가와 당면과제

1) 운동의 평가

88년 창립된 공해추방운동연합 시기와 93년 환경운동연합 창립이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상황의 변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국민 의식수준의 발전, 국제 정치상황의 변화, 환경오염정도의 심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운동조직으로 눈을 돌려 보아도 회원수의 급증, 상근 활동가 수의 증가, 참여 전문가 수의 증가, 지역조직 수의 증가, 사무실의 확대, 재정규모의 증대, 사회적 영향력의 증가 등 여러 변화가 관찰된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리우회의는 환경운동의 스펙트럼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운동단체도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련의 이시재 정책위원장은 1992년 이후의 환경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환경운동〕, 1995. 11월호, 59쪽)

- ① 환경운동이 전문 환경단체에서부터 일반 사회단체로 확산되었다.
- ② 환경운동연합, 배달녹색연합 등 전국적인 환경운동단체가 생겨났다.
- ③ 환경운동의 대상이 기업의 산업공해 중심에서 생태계 문제, 생명운동,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쓰레기문제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 ④ 운동조직이 거대화되면서 조직운영, 인원확보를 위해 막대한재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업협찬, 정부의 프로젝트사업지원금 등에도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 ⑤ 환경운동참가자들이 지식인 중심에서 신중간층, 학생 등 환경주의자들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 ⑥ 활동가들이 종래의 민주화운동, 반체제운동 출신보다는 환경관련 전공자들로 바뀌고 있다.
- ⑦ 언론 및 기업의 환경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다.

⑧ 환경운동에 있어서 국제연대가 활성화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최근 10여년동안 양적인 성장에 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핵심 슬로건이 '공해추방, 반핵평화'에서 '환경'으로 부드럽고 폭넓게 바뀐 것과도 관련되는데, '환경'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시야는 넓혔는데, 이를 이슈화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에서는 다소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5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대응한 지방자치선거는 앞으로 우리 환경운동 진영에 있어 미래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진영은 잃든 좋든 앞으로 정기적으로 조성될 지방자치선거 국면에서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논의는 환경련을 포함하여 각 환경단체들이 미래의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2) 운동의 문제점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환경운동연합 시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임원 및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와 회원들의 광범위한 관심 덕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안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 발전된 환경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다시 스스로에게 냉엄한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점은 논의 수준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전개해 볼 수 있겠으나, 그동안 이슈화된 쟁점을 중심으로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험있는 활동가들의 역량 축적의 어려움

88년 공추련 이후 수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환경운동에 참여했으나, 경제적 이유나 인간관계나 일관계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

우가 많았고,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의 경우도 재충전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경험주의의 한계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 비효율적인 조직운영

10명내외의 조직과 50명이 근무하는 조직은 근본적인 조직운영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에 안주한 나머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하여 조직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업무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수준도 아직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3) 비민주적 조직운영

‘민주집중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쪽에서는 ‘집중’만을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민주’만 강조하여 상충되기도 한다. 시시콜콜히 따지고 드는 ‘작은 관리’는 시민, 사회단체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큰 틀에서 아래를 믿고 밀어 주면서 전체의 중요 사안을 집중 점검하는 ‘큰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⁹⁵⁾

(4) 재정문제

회원들의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나머지 재정 문제 해결은 기업이나 기관의 협찬, 후원, 연구용역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5) 장기적인 운동전략의 부재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에 대한 확신과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생태학적 사회관과 지속가능성이 구현된 사회라는 개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순수 시민단체로 있으면서 이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95) 「말」지, 1995년 12월호 203쪽 ‘시민, 사회운동단체 경영분석’을 분석할 것.

이야기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근본적인 생태주의를 환경운동에 들여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하여 녹색당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 정치권과의 긴밀한 연계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환경운동의 전략은 또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 ?

3) 운동의 당면과제

이제 창립된 지 2년반이 지난 환경련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조직을 체계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회원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과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 취약한 재정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것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것이다.

학계의 일각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운동에 비하여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을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불균형, 즉 모순 속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이 발을 딛고 서있는 그 경제적 사회적 토대는 무엇인가, 또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이념의 토대는 무엇인가. 혹자는 생태학적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모든 사회조직과 인간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가. 현재 우리 운동의 수준은 아직 이런 문제들에 이렇다 할 접근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자세와 역할은 항상 존재한다.

① 환경피해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이 요청된다. 공해문제나 핵문제 등 소재중심에서 '환경'이라는 넓은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환경'이 구체적인 현장을 떠나 있는 공허한 개념이 될 때는 그

운동도 관념적인 운동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하향식 운동을 지양하고 상향식 운동 방식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는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중앙조직과 지역조직 사이의 의사결정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생태학적으로도 건전할 뿐 아니라, 매우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직의 자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게 된다.

③ 중장기적 운동전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운동의 전략적 과제라는 것은 마치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 이 전략은 우리 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등과의 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 노동운동과의 연대

1) 운동의 토대

모든 사회운동 사이에는 연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연대의 가능성이 구체적 현실속에서 항상 연대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운동이 걸어온 역사성과 운동의 이념(전략), 방법론(전술), 대중적 토대의 차이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에도 일반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생태적 조건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하여, 공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이슈로 하여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환경보호의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을 우리 환경운동의 일반성이라고 한다면, 일제 식민치하와 예속적 군사독재권력의 성장제일주의 정책과 민족분단이라는 왜곡된 '사회'속에서의 환경운동이 갖는 - 서구유럽사회에서는 볼수 없는-측면이 우리 환경운동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꾸준한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다원주의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산, 계급 및 계층의 다양화, 과학기술혁명 및 정보화의 비약적 진행, 사회복지 및 문화수준의 향상, 지역자치의 확산 등이 그 변화이다.

환경운동의 목표 설정과 운동 방법의 결정도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조건 위에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덧붙여 환경운동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누릴 풍요와 물질적, 정신적 만족이 어떤 것인지 규명해내고, 그것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 - 환경(수질, 대기, 토양, 하천, 바다 등 생활계)파괴, 자원 및 에너지 고갈, 인구문제, 국제갈등,(핵)전쟁-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발전의 개념에 있어서도 환경운동의 관점은 지금과 같은 무제한적인 물량소비 패턴을 지양하고, 인간의 생활에 가장 유익한 적정한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현재의 성장위주의 GNP 논리에 반대하고, '녹색 GNP'의 도입을 주장한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즉, 우리는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달에 따라 더 적은 원료와 에너지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만족과 사회문화적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현실화시켜 내고자 하는 것이다.

2) 환경운동의 사회관

현재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운동은 현재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몇가지 관점 - 생태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지방분권적), 평화주의-을 가지고 있다.

(1) 생태주의

제한된 조건내에서 무제한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자연법칙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의 환경을 인간과 자연의 공통된 부분이고, 인간의 생존은 생태

계의 순환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과의 능동적인 동반관계’를 강조하는 것인데,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는 소비의 증가추세를 멈추고 덜 소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일정한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의 효율이 향상되어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2) 평등주의

정치적 평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실업,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유아·청소년·노인·여성문제, 정치와 경제의 독점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등주의는 앞서 말한 생태주의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생태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해결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민주주의

정치중심의 다원화, 지방 분권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원칙 또한 생태주의와 평등주의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 또는 현 체제의 관성에 따라가는-(지배)계층에 맞서 이러한 변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적이고 분권화된 정치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의 다수가 군비경쟁을 통해 국가안보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설득력있는 대안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하나의 디딤돌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생태주의와 평등주의가 민주주의 원칙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4) 평화주의

작계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차별과 탄압을 반대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선진제국의 착취와 지배관계를 반대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쪽에서는 군사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뿌려

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기형적인 국제관계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공할 파괴력을 갖는 핵, 화학, 생화학 무기에 반대하는 것도 이 평화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3) 노동운동 속에서의 환경문제

(1) 경제성장의 논리가 환경을 지배하던 시기

고도 경제성장의 논리가 지배하던 7,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자연자원)은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설사 환경문제가 좀 발생하더라도 경제를 위해서는 덮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었다.

1985년 온산병 논쟁으로 온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집단이주 여부가 결정될 즈음에 공장측과 주민들과의 대립이 첨예할 때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피해받은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측은 일차적으로 조합원들 대부분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 피해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가 환경오염방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 할수록 임금인상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지기 때문이었다.

(2) 산업재해, 직업병 등 작업환경문제에 접근한 시기

경제성장의 논리가 환경을 지배하던 이 시기에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그 당시 알려졌던 대표적 직업병 사건은 84년 2월 반월공단 납취급 노동자 69명 납중독, 88년 7월 문송면(15세)군 수은중독 사망사건, 88년부터 사회문제화되어온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 등이 있다. 특히 공장설비 일체를 중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마무리된 원진레이온 사건⁹⁶⁾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96) 원진레이온(주)은 1958년 일본의 사양산업을 수입한 국내 유일의 인견사 제조공장으로 당시 1천 5백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있었고, 87년 매출액이 455억원 규모

88년 이후 투쟁해온 원진레이온 노조는 직업병 치료 및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등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산업재해나 직업병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법상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발생과 해결과정이 자연환경의 문제와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 특히 ‘노동과 건강연구회’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전문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적극적인 연대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조합이 기업체의 불법오염행위를 공공선(公共善)의 입장에서 과감히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3)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

① 대구비산염색공단 노조 사례

91년 3월 구미공단의 두산전자에서 낙동강 식수원에 폐놀을 방류한 사건이 있는 지 얼마 후인 91년 4월 17일 대구비산염색공단 노조는 염색공단 쪽에서 90년 1월부터 15개월 동안 비밀 배출구를 통해 인근 금호강에 하루 2만~3만여 t의 폐수를 불법 방류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을 공개했다.

노조쪽에 따르면 섬유염색업체 90개 사업장으로 구성된 서구 비산동 대구비산염색공단이 공해배출 부과금을 적게 물기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하루 폐수처리장 7만여 t 중 2만~3만여 t의 폐수를 비밀 배출구를 통해 인근 금호강에 불법 방류하고 있으나 대구지방 환경청 등 관련기관이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쪽은 “90년 12월 28일께 대구 지방환경청에 단속을 요구

인 회사. 인건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이황화탄소를 사용하는 공정인 방사과에는 200여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황화탄소는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테인을 학살할 때 사용한 신경독가스로 알려져 있다.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서 대구지검에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노조쪽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염색공단 쪽은 처음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일간지에 반박 성명서까지 게재했다. 공단 쪽은 자체 해명에 시민들의 반응이 없자 한술 더 떠 폐수방류 사실을 폭로한 노조위원장 한 씨 등을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검찰 역시 애초에는 노조관계자가 참고인조사에 불응하며 현장에서 비밀 배출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검찰의 늑장수사에 항의하여 국민연합 대구·경북본부와 수돗물시민대책위 등을 비롯,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시민들은 “5년 전부터 염색공단이 금호강에 폐수를 몰래 흘려보낸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노조에서 관련 자료와 사진 등 증거물까지 제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앓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대구 지방환경청이 불법방류 사실을 확인하자 검찰은 뒤늦게 공단 이사장 노씨 등 관련자 15명을 소환, 밤샘조사를 벌인 끝에 비밀 배출구를 확인하고 혐의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대구 비산염색공단 노조의 고발은 단순한 비리제보를 넘어 환경보전 노력에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될 때 기존의 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⁹⁷⁾

② 대우조선 노조 부위원장 사례

: 거제도 대우조선 노조의 수석 부위원장직을 역임했던 이행규(대우조선 플랜트 사업부)씨는 90년부터 계속하여 조사해온 대우조선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사건을 94년 국정감사에 고발함으로써 대기업의 불법오염행위에 경종

97) 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발정신은 비단 환경문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고발정신이 충실하게 발휘되었더라면 삼풍백화점의 대형 참사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 서울과 대구의 가스폭발 사고, 폐놀 방류를 통한 환경오염 사태, 부정식품 제조 따위 반사회적 행위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거나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을 올린 인물이다.⁹⁸⁾

거제도가 고향인 그가 대우조선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지난 82년(당시 25세)무렵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4H 활동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해왔던 그가 자신의 고향에 들어선 대우조선이 바다에 저지르는 오염에 대해 유난히 예민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90년 처음으로 대우조선에서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때부터 ‘목숨을 건 잠복’이 시작되었다. 거제도의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우조선에 상대로 하는 싸움이니만큼 치밀한 증거가 필요했다. 더구나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사진촬영은 거의 첩보전에 가까웠다.

이행규씨의 경우 노조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인 사업형태를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92년부터는 사내의 식당에서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대우조선에서만 하다가 전국조선업종노조로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그외에 노조 대표로서 지심도 군사시설 반대운동, 송진포 골프장 건설반대운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에 따르면 94년 단체협약에서는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약속밖에 따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노조에서의 폐기물을 감시하고, 환경운동 지원금 등 실질적인 것을 따낼 계획이 있다고 한다.⁹⁹⁾

(4) 지역환경문제에 노조가 참여하는 시기

① 울산 현대정공 노조 사례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경남 울산시의 도심 부근에서 공사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현대중공업과 인근 주민들 사이의 이견이 계속되어 91년 10월 착공해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이 시설의 건설공사가 중단되었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곳은 울산시 중구 염포동 799-37 일대로,

98) 이로 인해 1994년 12월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녹색시민상을 수상했다.

99) 「환경운동」, 1995. 1월호 118쪽을 참조할 것.

1만7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와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현대중공업의 공장터다. 현대중공업은 이 자리에 모두 3백80억원을 들여 94년 말까지 독일에서 제작한 하루 2백t의 산업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 2기를 갖춘 지하1층 지상6층(연면적 1천6백45평) 규모의 시설을 세워 15개 현대계열사에서 나오는 하루 3백여t 가량의 산업폐기물을 태울 계획이었다. 93년 5월 울산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대중공업에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자 옹포동 지역 주민들은 울산시청과 경남도청·부산지방환경청 등을 찾아다니며 농성과 진정을 하는 등 소각장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지방환경청과 경남도는 현대중공업의 소각시설에 대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승인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보류했고 현대중공업은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시설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만한 일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운동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물론 현대정공 노동조합도 동참하고 있어 노동조합도 이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6.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필요성과 전망

1) 노동운동과 환경문제

노동운동은 사회의 생산력을 담당해 온 주체로서 그동안 사회주의권 자본주의권 어떤 사회체제에서도 주요한 역사적 위치를 점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물론,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특정 계급의 배타적인 독점적 지위의 개념이 불식되고 여타 계급 및 계층과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 효율적 권력분점의 양태로 변화하고 있고,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의 성격에 있어서도 소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뉘지며 각각의 내부 구성도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그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 노동의 효

을성을 극도로 향상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작고 분산된 지방권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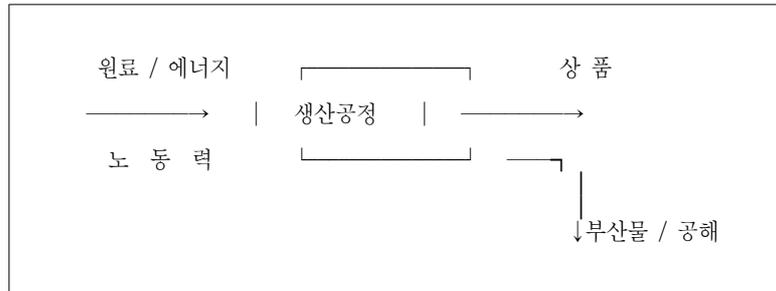
노동운동계에서는 90년대 들어 환경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91년 3월 폐놀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은 수돗물 폐놀오염 등 산업폐기물 불법 배출사태와 관련, 산하 8천여개 노조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에 환경권 보장에 관한 조항 신설 △조합원에 대한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교육 실시 △관계법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거부 등을 촉구했다.

노총은 특히 △공장 등에서의 소음과 진동 △폐수 배출에 의한 수질과 토양 오염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자동차 배기가스 △선박의 기름 또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 오염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기로 한 바 있다.

노총은 또 “식수와 대기오염을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간접살인행위”라고 비난하고, 공해방지 관련법규와 감독을 크게 강화하고 기업의 공해방지사설 도입에 대해 금융·세계상의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도 강령을 통해 ‘공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고, 94년 1월 30일 창립한 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의회(이하 조선노협)도 △안전한 작업환경과 국민의료건강권 확보 △자연환경보호와 공해방지 투쟁 등을 포함한 14개 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노동계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작업환경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투여하는 정도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지만 한차원 더 높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하여 전체 국민들의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은 생산과정을 통하여 발생한다.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개별 생산 단위내에서 공해물질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붙어 닥치고 있는 ‘그린라운드’가 바로 모든 생산물의 생산공정을 분석하여 공해를 발생시킨 것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경보호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국제적 규약인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와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노동운동계에서의 능동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국단위의 노동운동 조직에서는 중앙에 이를 추진할 특별 기구나 조직을 만들고 우선 각 단위사업장 별로 생산공정을 분석하여 생산효율을 높이면서 - 즉,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높이면서-오염물질의 양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노동운동의 질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노동운동속에서 가능한 환경운동

운동간의 연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공통의 가치인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노동운동이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파라다임) 속에서 분배문제에 집중해 있지만, 앞으로 이 단계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노동운동의 목적인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관

리 최우수 모범업체 선정을 보더라도 이들 업체의 환경개선의 전략적인 사고는 자본주(資本主)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해당업체의 노조는 그냥 '오너'의 방침이 그러하니까 따르면 된다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다. 노동운동 속에서 환경운동을 모색한다는 것은 단지 환경에 대해 뭔가를 하자는 수준을 벗어나 노동운동의 전략 속에서 환경문제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도출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단편적인 수준에서나마 현재의 노동운동 속에서 가능한 환경운동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1) 노조단위

환경운동을 아래로부터의 상향적인 운동이라고 할 때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의 일원임과 동시에 특정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다. 따라서 각 단위노조는 사업장 내에서의 활동에 한계를 두지 말고 각 지역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사업장별 작업환경 조사

-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실내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정확히 조사, 측정한다.
-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 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장별 환경 자주관리

- 각 작업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의 목록과 양을 측정하여 공장 전체의 오염물질의 발생과 처리현황을 작성한다.
- 이 오염물질들이 불법으로 배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관찰한다.

③ 노조원들에 대한 환경교육

- 월례 '환경보건강좌'를 개설하여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문제 등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건 실천 요령이 무엇이 있는지 토론한다.
- ④ 공장 주변 환경보호 운동
 - 지역주민들에 작업장을 공개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장 주변의 환경보호에 참여한다.
 - 노동조합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공장 주변 환경실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⑤ 1노조 1산 1하천 지키기 운동
 -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1산 1하천 지키기 운동을 선언하고 실천한다.
 - 1산 1하천 지키기 운동 프로그램 속에 환경단체 활동가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교육적 효과를 더 높인다.
- ⑥ 지역의 환경단체와의 일상적인 교류
 - 지역의 환경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한다.
 - ‘* * 지역 환경주간’을 선포하고 환경문화제, 우리농산물 장터 등을 개최한다.

(2) 전국단위

- ① 정책연구사업
 -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 노동운동 진영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된 ‘보고서’를 발간한다.
- ② 특수기구 설치
 - 환경, 여성, 경제, 법률 등 특수한 사회문제를 다룰 기구를 설치한다.
 -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개념으로 ‘그린라운드 대책위’를 특 별기구로 설치한다.
- ③ 환경백서

- 전국 각 단위사업장 별로 원료--> 생산--> 폐기물 의각 단계별 '물질 분석표'(Material Balance)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종합한다.
- 노동조합의 연중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환경개선을 연차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백서로 발간한다.
- ④ 환경교육계획 수립
 -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전국적 규모에서 각 단위 수준별로 특색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 ⑤ 환경행사 공동 주관
 - '노동환경주간'을 선포하여 환경단체와 공동행사를 추진하다.
 - '환경의 날'(6월 5일)등 중요 연중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 ⑥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연합
 - 노동운동의 입장과 환경보전의 입장을 공통으로 갖는 후보를 발굴, 양성한다.
 - 정치정세와 지역상황에 맞게 노동-환경 연합을 추진한다.

7. 맺음말

환경운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최근 10여년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슬로건이 '공해 추방, 반핵평화'에서 '환경'으로 부드럽고 폭넓게 바뀐 것만 보더라도 '환경'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시야는 넓혔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데, 이를 이슈화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여 해결해나가는 총체적인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95년도의 지방자치선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앞으로 사회운동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에의 참여문제, 대중운동조직과 정치조직의 위상 정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사회단체사이의 연대전략이 확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불균형, 즉 모순 속에서 발생한다고 할 때, 사회운동간의 연대는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운동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 연대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각 운동의 자기운동 '이기주의'와 배타적 '중심주의'가 불식되지 않으면 안된다. 각 운동이 눈앞의 효과와 이익보다 앞으로 다가올 전체사회의 흐름을 예측하는 '성숙된'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환경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들이 자기운동의 시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각 운동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강점을 함께 배우고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며 다양한 연대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대중운동은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한국의 민간단체」, 1993
- 공해추방운동연합, 「생존과 평화」, 1988년 1호 - 1991년 12호
- 문순홍,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1992
- 정호경외, 『삶이나 죽음이나』, 형성사, 1985
- 환경과 공해연구회,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한길사, 1991
- 환경연구회, 『환경논의의 쟁점들』, 나라사랑, 1994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1993년 7월호- 1996년 1월호
- , 「1993 환경운동」, 1993
- , 「1994 환경운동」, 1994
-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198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의 산업화와 공해문제』, 1981
- 황상규, 『위험한에너지 핵』, 거름, 1991
- 스프레트 낙외, 『녹색정치』, 정신세계사, 1990
- 데이비드 페퍼, 현대환경론, 한길사, 1989
- 「말」 1995년 12월호 “시민, 사회운동단체 경영분석”

VI. 배달녹색연합

김 제 남*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환경운동과 환경단체들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지구적인 환경현안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환경운동은 우리나라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과는 달리 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다양한 운동방식과 새로운 철학적 모색속에서 빠르게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배달녹색연합은 이러한 환경운동의 역사속에서 탄생하고 대중성, 전문성, 운동성을 가진 민간환경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달녹색연합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89년 12월 9일	대한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91년 6월 6일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모임 창립
91년 6월 15일	배달환경연구소 창립
93년 3월 25일	배달환경연합 전국조직 결성
94년 4월 1일	배달녹색연합 재창립(녹색당 준비위,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모임, 배달환경연합 통합)

‘대한녹색당 창당준비위’, ‘배달환경연합’,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모임’은 상호존중과 조화의 원칙(가장 생태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을 선언하고

* 배달녹색연합 사무부총장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출범하였다. 녹색당의 생태주의 원칙을 배우고, 푸른한 반도의 환경운동의 원칙과 방식(대중성, 조직운동론)을 정착시키고, 배달환경의 전문성을 결합시켜 새로운 환경운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통합의 책임자들이 배달녹색연합의 공동대표를 구성하는 관료적인 조직방식을 지양하고 생태위원회, 대기위원회, 수질위원회, 폐기물위원회, 반핵위원회 등의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대표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2. 운동의 목표와 조직

1) 운동의 목표

환경운동은 참생명운동이자 되살림운동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는 문화회복운동이다. 공해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주창하는 녹색독립운동이다. 또한 환경운동은 인간성회복운동이자 참과학실천운동이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운동이자 창조질서 보존운동이다. 새로운 생명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정착시키는 새문명운동이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녹색대동세상 건설의 에코토피아운동이다. 그리고 남누리 북누리 어우러져 씨앗 심고 꽃 피우는 통일운동이다. 무엇보다 환경운동은 우리 민족의 참얼을 되찾는 민족자존운동이다.

<10대 운동 목표>

- 녹색 이상촌 건설과 지원
- 민간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한국 환경보고서 매년 발간 등 환경관련 서적 출판
- 녹색 패러다임의 정립에 관한 연구
- 한국형 환경운동과 신물산장려운동의 전개
- 환경, 사회, 종교단체 등에 전문성과 프로그램 지원
- 각종 그린플랜의 수립과 지원

- 남북한의 생태적 통일작업
- 환경분쟁 중재와 정책대안 제시
- 100만 회원확보

2) 조직의 구성과 운영

(1) 의사결정체계

의사결정체계는 대의원총회-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회-사무총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영위를 구성하는 전문적인 활동단위가 특화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 조직(생태위원회, 수질위원회, 대기위원회, 반핵위원회, 폐기물위원회, 조직위원회), 각 연구소(배달환경연구소, 생태연구소, 환경과 자연철학연구소), 녹색전사단, 각 지역조직 대표, 사무총국 간부로 구성된다.

(2) 조직의 운영

년 1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년 단위의 사업평가와 사업계획 및 임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부단위, 지역단위의 사업이 점검된다. 상임 운영위는 상임간부(사무총장, 부총장, 배달환경연구소장, 조직위원장)들로 구성하며 실질적인 집행력과 지도구심을 형성하고 있다. 배달녹색연합은 서울에 본부(사무부총장 총괄)를 두고 조직운영과 대중활동을 벌이고 대전에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연구소장 총괄)를 두어 각종 프로젝트 및 전문성 지원활동을 벌인다.

(3) 재정규모 및 현황

94년 재정규모는 3억 6천만원이고 95년 예산은 5억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배달녹색연합 재정운영은 자립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로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수입액의 구성비율을 보면 회비 및 후원금 25%, 연구용역비 50%, 차입 15%, 기타 수익 10%이며 지출의 경우 연구 활동비 20%, 경상비 30%, 급료 30%, 출판비 15%, 기타 5%로 구성된다.

3) 운동의 참여자

조직은 전국조직 체계를 가지며 지부는 대전, 대구, 거제, 속초, 하남, 마산에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회원의 규모는 5천여명(94년 1만여명의 명단을 정리한 것임), 서울, 대전 상근 활동가는 20명이다. 배달녹색연합의 주요 간부들 대부분은 젊은층(30대 초반-40대 초반)이며 활동간사들은 공채(현재 4기)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가입하며 정관준수, 회비납부, 활동참여의 의무를 가진다. 회원들은 학생 자원봉사, 주부 자원봉사 등의 일상적인 활동 참여외에도 환경기행 회원, 소그룹 학습모임, 환경포럼 회원의 형태로 참여한다.

3. 주요 활동 사업

1) 각 부서단위별 사업

(1) 출판홍보사업

도서출판 '배달'로 등록하여 매년 한국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사업내용별 간행물, 월간 회보 및 영문 소식지 등을 제작한다. 모든 사업의 결과물은 출판물로 외화되기 때문에 출판부 사업의 과부하가 걸려 있다.

홍보사업으로 중요하게 진행 또는 개발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비디오 제작 및 공익광고 제작이다. 현재 CATV에 매월 '녹색소비'라는 내용으로 공익광고가 방송되고 있다.

(2) 교육사업

주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보이스카웃 연맹, YMCA, 자치단체 청소년 환경교육, 지역단체 어린이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강사 및 교재를 지원한다. 폐교된 대

전시 어남분교에 녹색학교를 만들어 청소년 캠프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창조적인 사업으로는 94년 환경요정 피피오라는 뮤지컬을 공연했는데, 어린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좋은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조직의 재정형편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계속 공연을 올릴 수가 없어 일회적으로 머물고 있다.

(3) 연대사업

① 국제연대사업

계간 영문소식지(Green Korea Report)를 통해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며 주로 반핵운동, 반골프 등 산림보존운동 차원에서 공동 워킹, 회의참가 등의 활동을 한다.

주요 국제연대사업은 93년부터 열리고 있는 반핵아시아포럼, 94년 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시아 환경단체회의(서울, 배달녹색연합 주최), 4.29 No Golf Day 연대행사, 북경여성대회 참가 등이다.

96년에는 10월초 한국의 환경단체, 그린피스, 동아시아 환경단체와의 공동 워킹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월 20일경 방콕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열리며 남북한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남북한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이 계획되어 있다.

② 국내연대사업

환경단체간, 시민단체간 연대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94년 한국환경회의 간사단체,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지역 환경단체와의 자매결연, 여성과 환경네트워크, 핵없는 사회를 위한 반핵운동본부 등과 연대하고 있다.

(4) 주민지원운동

주민지원운동은 배달녹색연합의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원요청을 해오는 경우와 우리들이 찾아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주민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논의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김포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 지원(92년이후 계속 사업)
- 부여양돈단지 환경영향조사 지원
-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타당성 조사(94년이후 계속)
- 광주군 실촌면 골프장 대책위 지원(95년이후)
- 김포군 학운리 소각장 이전 대책위 지원(95년 8월 현재 소각장 백지화)
- 신도림동 공해공장 이전 대책위 지원(95년이후)
- 굴업도 핵폐기장 지질조사(95년)
- 화성군 칠곡리 쓰레기매립장 환경성조사 지원

(5) 연구사업

배달녹색연합의 많은 사업이 연구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주로 배달환경연구소가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며 실제 연구는 사업팀 단위로 수행된다. 재정의 50%가 연구용역비로 충당되고 있어 재정, 활동 모두 연구사업에 의존해 있다. 주로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주민, 정부기관으로부터 발주받으며 6개월 - 1년단위로 성과물을 제출한다.

배달녹색연합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프로젝트는 환경운동의 전문성, 운동성을 평가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프로젝트가 그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다.

- 금강 제2휴게소 환경영향평가/91년/대전,충남 시민협의회
- 수도권매립지 종합 환경영향평가/93년/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조합
- 대전시 환경개선 종합계획/93년/대전시
- 영종도 신공항 건설 환경성 검토/94년/주민대책위
- 사회환경교육 강사용 지도서 개발/94년/환경부
- 경기도 범 도민 맑은강 가꾸기 발전방향 연구/94년/경기도
- 중랑천 환경지도 제작/95년/서울시
- 환경종합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95년/한국통신
- 대전시 3대 하천 환경지도/95년/대전시

- 한솔제지 소각로 환경영향평가/95년/한솔제지
- 삼성 생활체험관 환경공생주택 연구 개발/95년/삼성건설
- 지속가능한 기업활동 비전/95년/쌍방울 개발
- 녹색소비자 가이드 개발/95년/환경부 진흥기금
- 환경분쟁 해결을 통한 민주공동체 실현방안/95년/공보처
- G-7 과제 생태기술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자연만들기' 과제신청중 /95년/환경부

(6) 자료정보사업

- 나우콤 환경포럼 운영
- 환경비디오 자료목록집
- 사진판넬 및 슬라이드 자료실 운영
- 환경정책 자료실 운영
- 환경종합정보망 구축

2) 사업내용 및 단위별 주요사업 평가

(1) 녹색전사단

① 활동내용

녹색전사단은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대안제시라는 영역을 넘어서 직접 그 해결을 촉구하는 실천활동으로서 운동성을 확보하는 위상을 가지고 93년말 특전동지회출신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94년초 낙동강 물오염 사태를 시발로 하여 전국 5대 강 살리기 수중시위, 교각매달리기 등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3. 1절을 맞아 환경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고 공해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인왕산 단식투쟁, 미군부대 환경오염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 덕유산 생태계 파괴에 맞선 시위,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시위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사전피해를 경고하는 행동대원으로서 환경운동의 새로운 시위문화 창출을 시도하였다.

② 활동평가

녹색전사단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데 있어 기존의 집회시위 양식과 함께 별동대의 역할로서 유의미하였다. 적은 인원(10-20여명)으로 상징성이 강한 시위방식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의 긴박함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었고 덕유산 리조트개발업체에게는 큰 압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특전동지회 출신 회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환경운동을 위해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녹색전사단원의 대부분이 경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중심이 되다보니 기동성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회적인 시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사안이 해결되거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사단의 활동이 지속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위가 일회적으로 끝나 조직의 활동이 너무 전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녹색전사단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거제를 중심으로 녹색전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사단장이 거제, 사천, 마산을 연결하여 교육 및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사단의 일상적인 활동을 마련하고자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운동을 꾸려가도록 하며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과 특기훈련을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95년 여름 거제 청소년 환경캠프를 EBS와 공동으로 개최함).

(2) 시민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환경운동

① 활동내용

배달녹색연합은 교육 및 캠페인, 문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 자연생태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자연관찰대회
- 시민이 직접 자기 생활주변의 환경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대기질 측정
- 일회용 문화 근절을 위한 우유병되살리기운동, 엽서보내기 운동
- 인간적인 교통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승용차 없는 날 '토요일은 참으세요' 캠페인
- 음식물폐기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소제(퇴사이발효제) 개발 및 보급, 교육활동
- 계절별로 떠나는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기행(환경기행 회원을 중심으로)
- 회원들의 가족단위로 함께하는 두밀리 자연학교 탐방

시민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환경운동은 긍정적인 운동, 희망이 있는 운동,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 생활실천과 연계시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유병되살리기운동, 엽서보내기운동은 초·중학생들의 참여율이 대단히 높았으며 항의엽서를 받은 기업들에게 큰 압력으로 행사되었다. 시민에 의한 대기질 측정 역시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의 대기오염지도 작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회원 중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학교주변의 대기질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지속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기행은 100여명의 회원제로 운영되며 전국의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토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96년 환경기행은 습지(갯벌)이라는 테마기행으로 정하고 회원들이 습지와 개발현황,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직접 조사연구하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천으로 연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② 활동평가

시민(회원)들과 함께 하는 대중성을 크게 내세우면서도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독립 단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환경기행팀은 독립단위로 활동함).

(3) 생태계보존운동

① 활동내용

생태계보존운동은 배달녹색연합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환경운동의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리조트 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반대운동을 지속시켜왔다. 그리고 열대림보호행동네트워크 등 국제단체와의 연대사업도 이에 해당된다. 95년은 남북한 생태 공동체 회복, 생물다양성보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계보존운동, 지역주민운동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깃대종을 살립시다’는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를 복원, 보존하자는 운동이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운동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선정한 상징종을 지역의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생물종으로 바꾸자는 운동이고,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자는 운동이고,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물종을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복원하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 세계골프반대운동 네트워크와의 연대 및 지원운동(94년이후)
- 아시아태평양 열대림 육상 공동개최(94년)
-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반대 및 국제스키장 건설반대운동(94년)
- 광주군 실촌면 골프장 건설반대운동
- 4. 29 No Golf Day 집회
- 낙동강하구 및 기타 지역 습지조사
- 깃대종을 살립시다 캠페인 및 생태계 현황조사

② 활동평가

90년대초 생태계보존운동은 주로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에 집중되어 있었다(당시 골프장 개발이 남발되던 시기). 그리고 생태계보존운동의 정확한 방향보다는 건설을 막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주민지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92년 리오회의 이후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열대림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93년이후 산림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이 파괴되고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결성되면서 생태계보존운동은 한층 발전되었다. 자연공원법, 국립공원법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여러 정부부처에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보존중심의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95년 가야산 국립공원에 건설 예정이었던 골프장이 백지화된 것은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벌인 생태계보존운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쌍방울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위한 국제스키장 건설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제대회라는 막강한 장애가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단체의 대응이 지속적이고 완강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배달녹색연합은 이 시기 쌍방울로부터 ‘기업환경성 제고방안’이라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받게 되어 이웃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내부적인 반성도 크게 일어났었다.

앞으로 생태계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지역생태계 복원운동, 습지 및 갯벌 보존운동, 우리숲 가꾸기운동, 자연생태계의 잠재적,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정립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4) 반핵운동

① 활동내용

89년부터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운동은 환

경단체,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배달녹색연합은 단체통합을 계기로 반핵운동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93년부터 진행되어 온 '반핵아시아포럼'의 연락사무국을 맡으면서 일본, 대만 등의 반핵운동을 연결하고 94년 반핵아시아포럼 한국개최를 위한 한국위원회를 결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이후 결성한 '전국반핵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제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지역주민조직과 연대해 오고 있다.

② 활동평가

반핵운동의 책임단위인 반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다른 역할과 겸임하는 위원장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조직구성의 결과 반핵운동의 지속성, 대중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94년 말-95년초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위해 조직의 많은 역량이 집회, 주민 지원, 현장조사, 토론회 등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활동성이 떨어지고 반핵운동에 대한 역량배치가 크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핵실험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나 불매운동(1-2명 책임간사의 역할정도)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95년 반핵운동을 시민운동으로 고양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사업내용으로 설정했으나 이에 대한 창조적인 결과물은 부재한 상태이다. 사안에 따른 일회적인 대응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핵운동을 주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책임단위가 부재한데에 있다.

(5) 셋강살리기 운동

① 활동내용

통합되기 전 푸른한반도가 벌여 온 한강살리기 시민운동, 시민에 의한 중랑천 환경지도 제작 등의 성과를 계승하여 94년부터 셋강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 운동의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확산을 위하

여 조선일보와 공동캠페인을 벌였다.

94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95년은 셋강 살리기 대안을 모색하는 환경지도 제작을 대전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한강살리기 시민운동
- 중랑천 환경지도
- 4대강 집중탐사(KBS 라디오와 공동)
- 셋강살리기 캠페인(조선일보사 공동)
- 경기도 시군단위 셋강살리기 순회교육 및 교재개발
- 경기도 맑은 강 가꾸기 지침개발
- 대전시 3대 하천 환경지도
- 청소년 셋강 탐사

② 활동평가

셋강살리기 운동은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간이 수질측정기를 보급하여 셋강오염지도 그리기, 셋강 수생생물 관찰하기, 셋강 탐사, 셋강 모니터링 등 지역실정에 맞게 셋강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수많은 셋강 현장과 대중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순회 교육을 통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의 일반 시민들을 만나 환경교육을 시도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95년도 들어 언론과 공동으로 벌이는 캠페인의 한계(시민개개인의 도덕성, 또는 개인실천에 호소하는 운동)가 뚜렷해지면서 캠페인은 일단락하고 수질개선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다음 단계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경기도 5대 셋강, 대전 3대 하천, 그리고 서울시 중랑천을 대상으로 수질현황과 생태조사를 토대로 수질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6) 지속가능한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위한 운동

95년 배달녹색연합은 환경위기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있는 화두로부터 사업을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였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수행하여 친환경적인 기업활동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위한 녹색소비자운동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기업 환경성평가는 30대 그룹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용 회수하고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 발표하였다. 물론 기업에서는 불쾌한 반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민간단체로서 설문을 토대로 기업의 환경성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할 적절한 때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쌍방울개발로부터 받은 프로젝트를 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단체의 입장으로 연구하고 외국의 환경경영을 소개한 '지속가능한 기업활동 비전'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주요 기업에게 배포하였다.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위한 녹색소비자운동을 창출하기 위하여 녹색소비자 가이드 북을 만들고 있다. 주로 현 소비행태에 대한 조사, 제반 상품에 대한 환경성 평가, 환경관련 제반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친근한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녹색소비'를 위해 환경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제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환경운동의 제반 활동내용이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로서 사안의 해결이 아니라 가치관, 생산 및 생활양식, 제도의 변화 등을 수반하는 장기적인 것이다.

4. 운동의 평가와 당면과제

1) 운동의 평가

단체의 통합으로 재출범한 배달녹색연합은 민간환경단체로서의 위상과 활동내용을 정립하여 규모있고 책임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간환경단체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대중성, 운동성을 위한 활동방향과 내용을 어느 정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 지나치게 외형을 확대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에서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교훈을 정리해본다.

(1) 지역조직의 실패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지부간판을 내걸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등과 잡음이 생겨나고 유명무실해진 지부조직이 속출하였다. 95년지역조직을 정비하여 지부조직이 15개에서 6개로 정리되었다.

(2) 「환경타임즈」라는 언론매체를 조직으로 끌어안기 위하여 95년초 사무실 통합 및 신문공동제작에 들어갔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환경타임즈」를 조직내 사업으로 끌어안기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따랐다. 결국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반년만에 결별하였다. 이는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간부들의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활동가들의 운동성과 활동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조직내외적인 조건(일의 적성, 운동성, 노동강도, 사업작풍, 개인신상 변화 등)으로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계속 새로운 일꾼이 충원된다. 그러다보니 신입 간사들과 간부층과의 간극이 크다. 다시말해 중간 리더그룹이 취약한 일꾼구조를 가지고 있다.

몇몇 간부들에게 과부하가 크게 걸릴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에 대한 운영권과 의사결정권이 핵심 간부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민주적인 조직운영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 일이 핵심간부들에 의한 명령하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4) 회원구조와 회비자립 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다.

회원은 꾸준히 확보하고 있으나 정리되는 회원수가 더 많은 것이 문제다(5개월이상 회비납부를 하지 않거나 참여동기가 불투명하면 회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로서는 회원확보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월간 「배달환경」책자의 구독회원 확보운동을 활동가 중심으로 벌이고 있다.

(5) 연구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재정확보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활동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 정작 중요한 환경사안이 일어났을 때 기동성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프로젝트의 방향은 운동성과 연결될 때 수행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하여 성과물로 제출해야 하고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보하여야 하고 성과물이 바로 운동성과물로 외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환경운동의 생동감을 잃게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2) 운동의 당면과제

위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활동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은 추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95년 배달녹색연합이 정한 10대 대내외 활동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1) 대외 5대 주요활동

① 각종 그린플랜(Green Plan)을 수립한다.

그린플랜이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에서부터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순환가능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그린플랜까지 다양하다.

95년은 지방자치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환경자치체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고 통일 원년을 이루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드높아지는 해이다.

배달녹색연합에서는 지난 시기 수립했던 대전시 그린플랜, 경기도 맑은강 가꾸기 운동계획 등을 발전 계승시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자립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그린플랜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활동목표로 삼는다.

또한 핵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과 순환가능한 대체에너지 중심의 핵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한 기초로서 에너지 그린플랜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한다.

②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해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과 정책제언을 강화한다.

95년은 쓰레기 종량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단체, 시민, 기업, 정부에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았던 해이다. 쓰레기종량제는 단순한 제도의 차원을 뛰어넘어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 소비생활, 환경정책을 이끌어내는 전향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배달녹색연합은 쓰레기 종량제가 보다 건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쓰레기 종량제의 진정한 의미인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생활화하도록 하며 시민의 권리행사로서 녹색소비자운동을 펼쳐 People Power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

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의 Life Cycle(생애주기)개념을 정착시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량시키도록 하는 기업의 환경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③ 95년을 에코토피아 건설 원년의 해로 만든다.

에코토피아는 친환경적인 삶과 생산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다. 생산과 생활의 공동체인 몬드라곤, 인도 간디의 공동체,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공동체 등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전형적인 예가 될만한 곳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생활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만들어 온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에코토피아 건설이라는 과제가 낯설고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배달녹색연합은 에코토피아 건설의 가능성을 여는 원년을 이루기 위해 우선 실현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에코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생태공동체의 기본 구상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 갈 것이다.

④ 녹색선거와 환경자치체를 여는 해로 만든다.

95년은 지방자치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개발과 보전은 첨예하게 대립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개발공약이 남발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 진영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발굴하고이에 대한 지지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환경운동 진영에서 녹색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징적인 몇사람이라도 당선시키고 녹색후보의 참신한 이미지와 환경공약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달, 교육되어 후보를 판단하는 지침이 되도록 한다. 앞으로 계속될 선거국면을 환경운동 진영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달녹색연합은 환경공약의 전형과 녹색선거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후보들로 하여금 적극 활용하게 만들며 이에 기준하여 각 후보들을 평가하여 녹색후보를 선정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당선된 후보들로 하여금 환경자치

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공약 실현과 그린플랜을 수립하도록 이끌어 간다.

⑤ 남북환경회의를 개최하고 남북한 환경교류와 협력의 길을 연다.

95년은 분단 50주년이 되는 해로 민족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의 희망과 가능성을 만드는 통일원년, 통일희년을 만들어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환경단체들은 남북한 환경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환경문제를 더 늦기전에 함께 고민하고 조사, 연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환경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며 우선 남북한의 환경실태, 환경정책, 환경기술에 대한 상호교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환경영향이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에 남한의 예방적인 환경정책 못지않게 북한의 환경문제를 파악하여 사전 예방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배달녹색연합에서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교류팀을 구성하여 남북환경회의를 성사시키도록 할 것이다. 남북한 환경실태 조사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세계적인 환경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을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동생태조사를 토대로 통일녹색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남북한 환경보호 선언, 환경보호를 위한 합의서 채택 등으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달녹색연합은 8.15 5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을 바라는 환경인 100인 선언’을 통해 푸르름이 넘치는 통일조국의 미래를 설계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2) 내부 5대 주요활동

① 조직을 튼튼하고 내실있게 강화하는 해로 만든다.

■조직의 강화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참가하여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강할 때 이루어진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정도는 조직활동 참여에서부터 후원 회원 활동까지 다양하며 배달녹색연합은 이러한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활동공간과 내용을 마련,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 자치활동을 자율적으로 꾸려가도록 실무지원을 하며 지면, PC 통신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회원확보운동을 습시기운동과 같이 진행해 갈 것이다. 그리하여 회원활동과 자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 환경운동의 본성에 맞는 가장 생태적인 조직,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유기체를 기본으로 하는 조직론을 가지고 민주집중제가 관철되는 조직체계와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횡적인 연대와 균형, 종적인 위계질서가 서로 조화되는 열개를 짜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중심을 튼튼하게 세우고 각 지역, 각 위원회, 실무단위에 집행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활동가들이 횡적인 유대감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것이다.

■ 모범적인 지역조직 건설과 형제적인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지역조직의 대대적인 정비작업과 지역조직 건설의 원칙을 확보한다.

■ 각 위원회 조직을 활성화시켜 각 활동의 전문성과 활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각 단위 연구소의 위상과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단위의 전문위원 확보가 중요하다.

② 업무와 정보의 전산처리, 환경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해로 삼는다.

모든 업무는 전산화를 기본으로 하며 일의 효율과 활동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1인 1PC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정보망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력을 양성한다. 업무와 정보의 전산통신화는 조직의 통일적인 CI 작업에 기여하도록 한다.

③ 회원관리와 회원서비스를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극대화한다.

회원관리를 특화시킨다.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극대화한다.

④ 조직 전체, 그리고 각 사업단위까지 재정을 자립하는 해로 삼는다.

조직강화와 회원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회비자립율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것이다. 올해 회비자립율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 분기마다 향상목표를 세우고 회비납부율 향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환경운동의 이념과 활동방향에 어긋나는 재정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다.

⑤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내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정착시킨다.

내부 교육의 목표는 조직 구성원간의 인화단결과 지도중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활동가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부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독서경영’이라는 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조직이 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활동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기운과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하며 부단없는 재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독서경영’이라는 정책은 배달녹색연합이 추구하는 활동이념과 활동내용, 국내외 정세분석 능력과 대응능력, 환경 관련 철학과 전문지식, 환경관련 실무기술, 조직, 경영, 영업 및 로비활동에 이르는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지침과 교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동가들에게 숙지시켜나가는 것이다.

5. 연대활동의 내용 및 평가

1) 주요 국내 연대사업

(1) 한국환경회의 결성

① 활동내용

94년 4월 8일 30여개의 환경단체들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한국환경회의’를 결성하였다. 환경운동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개별 단체와 전체 환경운동과의 조화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 주요한 환경사안과 공동 화제에 함께 연대하는 상설적인 연대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결성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양한 운동방식과 조직수준을 인정하고 공동의 협의내용과 신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하였다.

첫째, 상호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친선과 연대를 이루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가능한 많은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인 질서가 보장되는 수평적인 연대(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조직의 수준은 참가하는 단체들의 요구와 합의에 의거하여 정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참가단체들은 활동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섯째, 한국환경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는 직접적인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특정 단체에 의해 ‘한국환경회의’가 운영되는 것을 막고 옥상옥의 조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공동대표제를 두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의해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와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배달녹색연합은 ‘한국환경회의’ 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결성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단체 역할을 1년여간 수행하였다. 지역의 영세한 단체일수록 연대의 필요성과 다양하고 깊이있는 환경관련 정보와 기술실무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나 실제 ‘한국환경회의’의 연대사업은 부실하였다. 생태계보존운동, 재정확보방안 등 환경단체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환경단체간 얼굴익히기를 중심으로 한 수련회와 월간 소식지를 발행한 것이 어려움 속에서 얻은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95년 1주년을 맞아 간사단체의 역할이 환경운동연합으로 옮겨진 이후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정보 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행을 비롯 제반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② 활동평가

90년대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운동방식과 수준의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출범하였다. 이에 환경단체간에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지역 환경단체 연대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환경단체 연대회의가 열리기 시작하고 91년 8월에는 전국의 환경단체가 연대하여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몇몇 단체간 골프장 문제, 핵문제 등의 사안별 연대를 뛰어넘어 상설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연대모임은 92년 전국환경단체 대표자회의로 발전하고 여름 연합수련회를 개최하였다.

92년은 리오환경회의라는 지구적인 환경회의가 개최되고 우리나라 환경단체에서도 큰 규모로 참석,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과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92년 이후 환경단체의 운동방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운동의 순수성과 조직론에 대한 일정한 논쟁을 거치면서 전국환경단체 대표자회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으로 통합되고 해체되었다.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지역의 독자적인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연합 지부조직으로 재편되고 이 논의과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던 단체는 대표자회의에서 탈퇴함으로써 모처럼만에 마련된 환경단체간 상설적인 연대들의 모색은 93년 단일한 전국단체 결성으로 일단락되었다.

93년이후 특정 환경단체가 거대화되고 시민단체내에서 환경분과 형태로 환경운동의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조직 이기주의, 활동의 중첩, 지역 및 군소 환경단체 활성화, 대정부, 기업 교섭력 강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평적인 연대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93년 8월 한국환경회의 구성을 위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94년 4월 '한국환경회의' 창립까지 진지하고 적극적인 연대들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많은 정열을 쏟아부어 만든 연대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환경회의'의 구성하는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환경사회단체협의회

(경실련, YMCA, 여성단체연합, 흥사단, 소비자 시민모임 등)가 공동 멤버쉽 형성의 이견으로 결성과정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굵직한 환경관련 단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출범했다. 결국 굵직한 환경단체간의 연대사업은 ‘한국환경회의’라는 틀밖에서 별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연대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실무구조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환경단체의 열악한 실무력과 재정형편은 공동의 연대사업을 위해 힘을 쏟을 여력이 없어 간사단체의 회의소집, 연락업무, 소식지 발간, 수련회 등의 일마저도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였다.

셋째,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환경단체들이 상호교류하고 공동으로 연대사업을 벌어나간다는 것은 단일한 논의구조와 집행구조를 가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다.

넷째, ‘한국환경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들 중에는 아직까지 안정된 활동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해 기본적인 단체 운영에도 벅찬 상태에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자니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환경단체의 활동력과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한국환경회의’의 역할은 공동사업에 두기보다는 환경운동의 방향과 시기에 맞는 운동방식을 상호 교류하여 올바른 환경운동으로 가도록 상호 견제하고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연대활동은 지역의 특정 사안이나 특정 단체의 의미있는 활동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 활동

① 활동내용

94년 11월 22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는 “당면한 한국의 핵발전소,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제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핵폐기장,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막아내고 나아가 핵없는 평화로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출범하였다. 이 시기 정부는 오랜 시간 지연되어 온 핵폐기장 입지를 연내에 선정한다는 강경방침을 가지고 핵폐기장 부지선정단을 구성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의 격전이 예고되고 있었다. 이에 그동안에 지역단체와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온 반핵운동의 연대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상설적인 연대기구를 결성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전국반핵운동본부’이다.

‘전국 핵발전소’, ‘핵폐기장 대책위원회’, ‘한국반핵운동연락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기존의 반핵운동 연대들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경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대학생조직, 지역단체가 망라되어 구성되어 반핵평화, 환경보전, 사회민주화, 주민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적인 과제가 하나의 연대조직으로 결합된 것이다. ‘전국반핵운동본부’는 서울을 비롯한 권역별로 나누어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의 책임자들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국반핵운동본부’는 정부의 핵폐기장 유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처와 동등한 자격으로 교차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정부 행정책의 투명성과 핵드라이브 정책 전환을 요구하였고 정부의 핵폐기장 광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국반핵운동본부’의 활동은 정부의 12월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무효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국반핵운동본부’는 굴업도가 소재한 덕적도 주민 투쟁위원회와 인천지역의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핵대책협의회’와 함께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에 돌입하였다.

배달녹색연합의 ‘녹색전사단’, 환경운동연합의 ‘생명의 빛’이 함께 고공시위 및 퍼포먼스 등의 상징적이고 직접적인 시위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군청방문, 명동성당 농성등을 지원하였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천주교 환경사제모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배달녹색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상황실과 연대하여 공개토론회, 굴업도 지질조

사 및 생태조사, 기자회견, 외국 반핵운동가 초청강연등을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인천핵폐기장 대책범시민협의회’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지고 ‘전국반핵운동본부’는 이를 측면지원하였다. 현재 과학기술처는 굴폐도가 활성단층지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굴폐도핵폐기장 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전국반핵운동본부’는 95년 굴폐도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과학기술처의 백지화선언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이후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② 활동평가

80년대 후반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반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핵운동은 주로 해당 지역주민 조직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핵발전소 건설지역, 6개 핵폐기장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온 반핵운동은 ‘전국반핵운동본부’의 결성을 통해 전국적인 환경단체, 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었다. 운동의 양상도 지역운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범국민적인 운동의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핵불감증을 일깨우고, 안전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핵없는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보여주게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비밀리에 추진되어 온 핵정책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반핵운동의 양상은 지난 9월 프랑스가 핵실험을 재개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들끓었던 핵실험 반대운동을 국민적인 운동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1월말 과학기술처가 굴폐도 핵폐기장 백지화선언을 하게 되면 ‘전국반핵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벌여 온 반핵운동은 큰 승리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핵발전소, 핵폐기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반핵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핵없는 21세기에 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전문가,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제시하는 대안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정부 정책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 연대사업

(1) 아시아 환경단체회의

① 활동내용

도시문제와 도시 중심의 인류문명이 갖는 문제점은 지구적, 지역적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색은 세계 환경논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배달녹색연합에서는 94년 9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모여 '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단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도시빈곤과 환경오염, 도시환경문제와 경제개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의 과제와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전환과 민간단체의 역할로 구성된 공개세미나와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아시아인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아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30년내에 전 세계 거대 도시 중 3분의 2가 아시아의 도시가 될 것이며, 현재의 전 세계 도시 인구와 맞먹는 23억 인구가 아시아의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 특히 아시아 지역의 도시화는 유럽과 달리 수십년도 되지않는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악화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 결국 그 나라 고유의 문화적, 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고 서구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은 도시문제의 극대화와 농촌의 붕괴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공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들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명을 위해 시민운동은 새로운 문명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② 활동평가

92년 리오회의 이후 환경단체의 국제 연대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정보교류와 인적교류를 비롯하여 국제회의에 함께 참가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배달녹색연합이 주최한 '아시아환경단체회의'는 단순한 정보교류 수준을 뛰어넘어 아시아인의 공동과제를 도출하고 직접 국제회의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들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어 자비를 들여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주관하는 단체가 회의 소요경비뿐만 아니라 외국 참가자들의 참가여비까지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리고 몇몇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언어 장벽이 높아 동시통역 여건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제 연대사업은 몇몇 굵직한 단체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영역에서는 그 어느 시민운동의 영역보다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높고 92년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지구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 환경단체간의 국제 연대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동남아, 동북아 환경회의

95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 출라롱콘대학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동아시아 환경회의가 열렸다. 배달녹색연합,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북한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미국 노트러스 연구소, 출라롱콘대 제 3세계연구소가 주관한 이 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모형을 모색하자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한, 북한 발표자들이 도시계획, 벌목, 댐 건설, 핵폐기물 투기, 해양오염, 산성비, 등 아시아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다자간 회담형식으로 남북이 함께 남북 환경현안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제3국에서 다자간 형식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환경전문가들의 만남은 정부, 민간

을 통틀어 공식대표단에 의한 최초의 환경회담이었다. 남북한 대표자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에 남북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배달녹색연합은 ‘한반도 그린플랜의 공동 수립’ ‘한반도 환경공동체 선언’ ‘한반도의 상징적인 동식물 선정보호’등을 제한하였으나 북한 대표단과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척시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북한 대표단의 긍정적인 반응은 앞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환경회의, 다자간 교류를 통한 남북한 환경협력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모색될 것이라는 성과를 남기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6. 연대활동의 필요성과 전망 :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 특정 계급·계층에 국한하지 않는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조직으로 발전하는 한편 여러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주로 환경운동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는 단체는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및 시민자구운동을 중심으로 해 온 시민단체들이다.

그간 우리사회의 운동을 오랫동안 이끌어 온 민족민주운동단체나 민중운동 단체들은 주요 정책에서 환경문제를 소외시켜왔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노동자 조직의 운동에서 환경운동은 거의 찾아볼 수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노동현장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동현장 밖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환경운동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공해병에 시달리고 농작물, 수산물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해명과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노동운동계에서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못지 않게 다양한 사회단체들의 주의 주장에 대해 귀기울이며 이들 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운동계에서도 최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기본 조직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일상조직이며, 자치조직이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인 교육의 단위가 될 수 있다. 노조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교양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운동가를 초빙하거나 이들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노동조합 환경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주인답게 나서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노동자들은 그동안 현장밖의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침묵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연대하고 현장내에서 무단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일차적인 감시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함께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주민잔치’와 같은 연대들과 사업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친숙해지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해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현대 산업사회와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듯한 발전모형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산업사회의 발전모형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점에서 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

과 보존이 함께 고려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인류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민간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환경정책, 기업의 생산과 경영 형태를 비판하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길지 않은 환경운동의 역사속에서 환경단체들이 해 온 활동은 사회의 각 영역과 전 지역에 걸친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역량에도 벽찬 것이었다.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경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의 주체로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환경단체는 전문성, 대중성, 운동성을 갖춰 나가면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 세력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힘은 각 지역의 지역운동으로 확산되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치시대를 앞당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미약하며 앞으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운동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환경운동이 특정 계층, 특정 사안에 국한되는 부문운동이 아닌 범국민적인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달녹색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는 개별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호 연대하는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료 5> 연대사업 일지

▲ 국내 연대사업

- 1991년

낙동강 폐놀오염 사고 대책을 위한 33개 시민환경 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한반도 비핵군축 실현과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저지를 위한 연대모임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지역 대책위, 공추련과 공동)
환경단체 간담회 '정기국회 골프장 대중화 정책철회를 위한 공동청원'
전국 환경단체 수련회 및 환경단체 연대회의의 시작

- 1992년

환경단체 UNCED 한국위원회 구성
환경의 날 기념 '환경단체 환경한마당 행사' 개최
영종도 신공항 환경단체 공동대책위 결성
전국 환경단체 연합수련회
일본 플루토늄 비축반대 시민모임 결성

- 1993년

대전 엑스포 민간환경제 개최
영종도 신공항 환경성 검토를 위한 연대활동
쌀개방 반대를 위한 환경단체 연대활동

- 1994년

환경단체 신년하례식
낙동강 식수오염 사고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
그린라운드 대비 민관 환경간담회
한국반핵운동연락협의회 결성
한국환경회의의 발기인대회

환경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구성
 생수시판 허용에 대한 환경단체 긴급 토론회
 덕유산 생태계 파괴 환경단체 공동대응
 한국환경회의 결성식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민간평가단 구성
 셋강살리기 공동캠페인 시작(배달녹색연합, 조선일보사, 문화방송)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위원회 결성대회
 한국환경회의 여름 수련회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 결성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 투쟁돌입
 덕유산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단체 연대 사진전시회

- 1995년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신년하례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정책협의회
 북경여성대회 환경분과 '환경과 여성 네트워크' 구성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 대행진' 연대행사
 체르노빌 9주년 기념 전국 반핵집회
 No Golf Day 연대집회
 환경후보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활동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움 환경단체 공동개최
 고리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항의 전국반핵집회
 실촌면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조작실태 공동 현장 조사
 프랑스 핵실험 항의집회 및 서명운동 연대활동 시작
 한국환경대학생연합 출범식 지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
 남해 기름유출사고 주범 LG 제품 불매운동 선포
 국제 경기 지원 특별법 통과저지 및 발왕산 보전을 위한 연대활동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선언후 주민승리대회

▲ 국제 연대사업

- 1992년
리오회의 국내 민간환경단체 대표단 참가

- 1993년
'9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대표단 참가

- 1994년
일본 시민포럼 2001 국제세미나 참석
삼림보호 및 GR 대책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운동가 워크샵
골프장과 휴양지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석
미국, 유럽 환경운동가 연수
'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시아 환경단체 회의' 개최
'94 반핵아시아포럼 개최

- 1995년
선진 유럽 환경 견학단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운동 지도자 포럼
동아시아지역 대기행동네트워크 워크샵
북경 여성대회 환경과 여성 네트워크 참가
'95 반핵아시아포럼 참가
남북환경전문가가 만난 방콕 환경회의 공동주최

<참고문헌>

- 배달녹색연합 소개 자료집 「녹색바람으로 21세기를 깨우리라」.
「배달녹색연합 안내 리플렛」.
월간 「배달환경」 통권 1-41호.
영문 계간지 「Green Korea Reports」
「한국환경회의 소식지」, 통권 1-5호.
「푸른한반도 총회자료집」, 91-93.
「93년 배달환경 결산보고서」.
「95 대의원총회 자료집」.
「95 사업결산보고서」.

제 5 장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 발전가능성의 확인

조 돈 문

이상의 논의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불가” 명제가 허구임을 증명하였으며, 연대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연대불가 명제는 구미와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논의를 통하여 허구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의 경험들을 고찰함으로써 연대불가 명제가 허구임을,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연대 경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관계와 관련된 3가지 명제들이 모두 잘못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노동운동이 침체하고 신사회운동이 발흥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라 구미와 중남미의 상이한 사회구조적 조건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조합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변혁의 핵심세력으로서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을 대체한다는 명제는 구미의 경우 자본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남미의 경우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세력으로서의 조직적 역량과 이념적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하여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불가 명제는 구미와 중남미에서 연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구미의 경우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중남미의 경우 국가의 탄압으로 인한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고립과 무력화의 산물이었다. 또한 구미의 경우 이념적 개방성을 보이는 노동운동의 경우 신사회운동과의 연대가 발전하고 있고, 중남미의 경우에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정치적 민주화의 심화와 물질 생존권의 확보라는 운동 목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라는 사회변혁에 대한 적대세력을 공유하고 있어 연대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불가 명제는 허위임이 입증될 수 있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불가 명제가 허위임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는 발전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연대 발전의 추세는 주로 세가지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 노동운동이 물질 이해관계에만 집착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과 사회운동으로부터의 상대적 고립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히고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전향적 자세와 그에 따른 의도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둘째, 신사회운동 측에서도 자체의 운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어, 초기의 배타성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연대를 추구하고 있고 연대 대상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와같이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각각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추구하는 추세는 1993년 김영삼정권의 출범을 전후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김영삼 정권이 태생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창출 과정에서 이전의 군사정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정면대립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과, 김영삼 정권이 특히 정권의 초기에 보인 개혁의지는 국가권력을 매개로한 제도개혁의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지닌 제도개혁을 위한 운동으로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수렴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제3장과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개별 신사회운동들 사이에 노동운동과의 연대 활성화의 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의 경우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날로 진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 반면, 환경운동의 경우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이 매우 부진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대간의 활성화 정도에서 보이는 차별성은 개별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연대함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제약조건들과 가능성에 있어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발견들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한 모색이 두가지 측면에서 전개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개별 연대별로 차별적인 연대의 발전 방향과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연대간의 활성화의 차별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연대 경험의 분석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연대별로 발전 수준에 걸맞고 문제점 해결에 적합한 연대의 방향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연대별로 특성에 맞는 연대 현안 영역들과 연대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가 검토되어야 하겠다.

둘째,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의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들과 전략들도 함께 연구되어야 하겠다.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과 연대의 방식 및 바람직한 연대 발전의 단계가 검토되어야 하며,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전반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을 추구해야 하는 현안 영역들의 규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연대발전의 방향과 전략에 관하여는 본 프로젝트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 보고서를 마치며 ▁

본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있어,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 가운데 어느 한 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 양 진영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끝까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라는 프로젝트를 노동운동 진영에서 발주하였다는 점과, 편향되지 않은 시각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신 중앙연구원의 어수봉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모두 해당 운동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여 토론에 임하여 주셨으며, 해당 운동단체의 사업과 경험을 정리하는 논문까지 기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또한, 짧은 기간동안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하여 그동안 무리하게 빠른 추진속도를 통하여 부담을 가중해 드린데 대하여 거듭 사죄를 드린다. 단체 참여자들의 글과 토론은 발표된 자료들의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귀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연대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전략 부분에서는 특히 그분들의 제언들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연구보조원으로 일해 주신 안혜성님은 참여자들의 바쁜 일정에 따른 프로젝트 일자의 수시 변경과 연락의 부담, 충실한 자료 수집 및 뛰어난 자료의 정리는 연구보조원에게 요구되는 역할 이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안혜성님의 헌신적인 노력은 책임연구자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연구자의 무능을 은폐할 수 있었다. 안혜성님의 뛰어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설문조사 조사원으로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반복적

전화와 확인 작업을 하여준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조사원 작업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책임연구자가 학과 교수라는 위계적 관계 때문이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필자의 글에 대하여 값진 토론을 주신 중앙연구원 어수봉 원장님, 민주노총 김태현 집행위원님, 경실련 유재현 사무총장님, YMCA 김성수 정책연구부장님, 환경운동연합 이치범 사무처장님, 여연 정강자 노동위원장님,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처장님, 민변 조용환 변호사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필자의 초고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귀중한 비평을 주신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과 조은 교수님, 가톨릭대 이영자 교수님과 정자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많은 분들의 노력의 소산으로, 우리는 값진 내용의 두 편의 보고서를 낼 수 있었다. 그분들의 노력, 특히 운동단체 참여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본 보고서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보고서를 연대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드리는 제언으로 마쳤으며, 그러한 제언들은 본 프로젝트의 발주자인 노동운동측이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실천만이 단체 참여자들의 노력에 보답하고, 나아가서 노동운동 자체의 발전 및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본 프로젝트 참여 단체들을 포함하여, 최근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고양되는 분위기는 연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함과 더불어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한다.

1996년 2월 '산중호걸'을 들으며,

조 돈 문

▲ 프로젝트 참여자 ▲

· 책임연구원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황석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대리)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연합 전 조직국장)

이대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국장)

김금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김제남 (배달녹색연합 사무부총장)

· 연구보조원

안혜성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저자약력]

• 조 돈 문 •

조돈문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가톨릭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동 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Working Class Formation in the Third World : A Comparative Study on Union Accountability and Worker Experiences in South Korea (1910s-1940s) and Mexico (1870s-1910s)”이며, 논문의 일부가 “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경제와 사회(1994 봄호) 등에 게재되었다. 기타, 주요논문으로는 Erik Olin Wright와 공저한 “The Relative Permeability of Class Boundaries to Cross-Class Friendship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Canada, Sweden, and Norwa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February 1992), “브라질 노동운동의 역사적 변천 : 신노동조합운동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이중구조 형성” 동향과 전망 (1993 가을), “계급형성과 계급연합 : 미국, 스웨덴과 비교하여 본 한국의 계급별 이데올로기적 편차” 동향과 전망 (1994 여름),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 구미와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비교” 경제와 사회(1995년 겨울호)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관심 영역은 산업, 노동, 계급, 사회운동 등이다.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1996년 3월 18일 인쇄

1996년 3월 25일 발행

발행인 朴 仁 相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代) 02-782 -3884

등 록 81. 8. 21 (13-31호)

인 쇄 (주)우정미디어
(代) 02-324 -9762

값 : 13,000원